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2, No.2, 2010

2집 2호 · 201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차 례

특집

- 박명규 |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 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 3
- 은기수 |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35
- 김화순 |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76

연구논문

- 김근식 |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111
- 김재한 | 남남갈등의 연계성
: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 태도 간 연계성 및 대북정책
-대중정책-대미정책 태도 차이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137

서평

- 강동원 | '한반도 통일', 축복인가 재앙인가?
: 허구와 실제 사이에서 159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국문요약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감자다.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치적 논쟁과 남북갈등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문적 논의는 어느 정도 이념 논쟁과 가치평가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을까?

이 글은 통일논의가 학문적 차원의 독자적 담론장을 형성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가 연구방법론의 확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방법론의 한 유용한 사례가 지수구성이라고 보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지수개발의 노력들을 검토한다. 동시에 지수구성의 본질은 통계 수치의 재구성이라는 양화 기법이 아니라, 그 지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질적 내용,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 엄밀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개발한 남북통합지수를 사례로 하여 남북통합의 하위 영역과 상이한 차원들이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는지, 상대적 비중과 연관성에 대한 논리적 구조는 어떠한지, 그 논리적 구성에 따른 양화방식과 기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통합지수의 개발에도 이론적 기반 및 명료한 개념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지수변동에 대한 이론적 해석 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지수의 증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대중적 반응과는 구별되는 학계의 분석적 해석이 뒤따라야 지수의 방법론적 의의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남북통합지수의 경우 각 영역과 차원별로 상이하게 변동하는 지수의 흐름을 분석적으로 읽어내려는 학문적 자세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분석적 노력에 의해서만 학계의 독자적 담론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실천적 지혜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주제어: 통합, 통일, 개념화, 남북통합, 지수, 통합의 차원, 매개제도, 위임제도

I. 통일연구의 방법론적 문제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감자다.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이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치적 게임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념적 논쟁, 전략적 계산, 파당적 주장 및 경제적 타산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존재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많은 쟁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념이나 가치가 개입할 소지가 적은 주제에 비해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고도로 정치적이고 집단 정서까지 연계되는 주제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¹⁾

실제로 분석적 논리가 윤리적 판단을 뒷받침하는가라는 질문은 유사 이래 많은 지식인과 종교인, 철학자들이 공히 씨름했던 주제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다.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을 분리한 칸트식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여전히 지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은 멀다. 현대 사회과학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콩트와 뒤르켐, 마르크스와 베버 사이에 이미 이 문제를 둘러싼 현격한 차이들이 존재했고 그런 차이가 21세기 현재도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²⁾ 오히려 계몽적 가치와 이성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가 커짐에 따라 근원적 판단의 논리적 바탕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1) 박명규, “통일논의와 통일연구의 현주소: 담론의 산출과 학계의 역할,” 『비교와 전망』, 제6집 3호 (동아대 동아시아연구원, 2007) 참조.

2) 루이스 코저, 신용하·박명규 옮김, 『사회사상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 참조.

통일은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을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것, 또는 그렇게 되는 과정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개념이다. 매우 실천적인 과제이고 미래적 전망을 포함한 유토피아적 지향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라기보다 사람들의 꿈과 이상 속에 목표상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치이자 실현되지 못한 미래목표다. 통일이 한편으로 정서적인 가치를 동반하면서 강력한 동원력을 행사하는 주제임에도 이에 대한 세밀한 탐구는 의외로 별로 없는 이유도 통일이 당위적이고 목적론적으로 사고되는 경향과 무관치 않다.

바로 이 때문에 통일문제를 다루는 담론 내부에 정치적인 것, 감정적인 것, 분석적인 것, 계산적인 것 등이 혼재된다. 통일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 속에는 그 성격과 지향을 달리하는 요소들이 뒤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요소들의 혼용을 문제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환영하는 경우조차 보인다.³⁾ 하지만 이런 경향은 결국 학계의 담론과 정치인의 담론, 평범한 시민의 담론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논의와 관련한 학계의 존립근거를 훼손한다. 통일을 관심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의 내부논의는 어느 정도 분석적 능력과 판단의 고급함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담론으로부터 스스로의 독자성을 구별하고 있는가? 막스 베버의 용어를 빌어 말한다면 통일논의에서 ‘가치중립적’ 분석과 ‘가치판단적’ 소신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학계의 판단과 주장이 다른 장에서의 논쟁과 구별되는 그 나름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점과 관련되고 결국 ‘통일’에 대한 학문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과 연

3) 통일운동과 관련한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나 실천적 지향성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회운동적 속성이 통일운동론에는 강하게 존재한다.

결된다.

이런 질문은 종종 연구자들의 윤리적 자세, 또는 정치적 태도, 성실함 등으로 환원되곤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일문제 연구의 방법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학계 내부의 성찰적 평가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방법론과 개념체계를 어느 정도 적확하고도 공감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방법론을 주목한다는 것이 모든 연구자가 따라야 하거나 또는 동의할 수 있는 방법론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의 논리구성과 자료 활용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성찰적으로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따져봄으로써 성실한 학문적 서술과 소통을 가능케 해 줄 원칙과 학계 내부의 규범에 대한 검토를 의미한다. 이런 성실함과 성찰성이 공유될 때 학계의 공론장이 다른 정치계나 시민사회의 그것과 구별되는 질적 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

II. 방법론으로서의 지수 구성

이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 수치나 통계의 활용이다. 숫자가 갖는 명증성, 객관성, 가독성 등이 과학적 논의에 필수적이며 유용하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숫자나 통계 자체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⁴⁾ 이미 통계 그 자체가 처음부터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나마 ‘통일’과 같이 일상 현실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관련된 통계나 숫자는 제대로 있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편의적인 활용이나 건강부회가 있기 쉽다. 여론조사의 경우는

⁴⁾ 박명규·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3).

더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조사 자체의 한계를 떠나서 해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학계 공동체의 엄정한 평가나 비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남북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각종 여론조사의 수치는 일견 논리의 근거를 제공하거나 판단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치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한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다보면 통계가 결론을 뒷받침하기보다 미리 준비된 결론에 맞는 수치들을 찾아 증거로 내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수를 구성하는 것은 학계의 역량을 보여주고 방법론적 수월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된다. 사회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명료한 수치로 환원하여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활용함으로써 논의를 명료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흔히 사용되는 GNP나 경기선행지수를 비롯하여 민주화지수, 부패지수, 불평등지수 등 유용한 지수들의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지수를 구성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통일연구의 객관화, 과학화를 위해 학계 내부에서 엄격하게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을 산출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학문 일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기존 한반도 관련 지수연구사례

구분	내용
한반도 평화지수 (한양대)	- COPDAB(Conflict Peace Data Bank)을 기본 모델로 하여 매일 뉴스 기사를 지수화 하여 남북 간 평화의 정도를 보여줌 - (발표 시기)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 매월 지수를 발표
남북 통합지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남북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제도, 관계, 및 인식들과 관련된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분석하여 남북 간 통합정도와 영역별, 차원별 추이를 보여줌

	- (발표 시기)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지수를 발표
동북아 평화지수 (제주평화연구원)	- IDEA(Integrated Data for Events Analysis)의 기준을 이용하여 한일 간의 갈등 및 평화적 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보여줌 - (발표 시기) 2008년 10월 발표
세계 평화지수 (세계평화포럼)	-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분야의 평화적 상태를 측정하여 지수와 각국의 평화 순위를 보여줌 - (발표 시기) 200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발표
한반도 안보지수 (삼성경제연구소)	- 한반도와 주변 4강대국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지수로써 보여줌 - (발표 시기) 2005년 개발, 2007년부터 매분기 발표
HRI 한반도 평화지수 (현대경제연구원)	-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의 설문조사 및 남북관계 동향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평화지수를 산정하여 보여줌 - (발표 시기) 2009년 개발, 2009년부터 매분기 발표
통일예측시계 (통일연구원)	- 남북한의 통일을 최종목표로 할 때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전문가 평가와 정세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시각으로 표시 - (발표 시기) 2009년 개발, 매년 발표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09-39 (2009.10.5) 표를 보완하여 필자 작성.

현재 발표되고 있는 관련 지수로는 위의 <표 1>에서 보듯 한반도 평화 지수, 남북통합지수, 한반도 안보지수, 세계평화지수, 한반도 평화지수, 통일예측시계 등이 있다. 각 지수의 특성과 내용, 주관기관 및 발표방식은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이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발표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지수는 세계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지수산정 방식도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전문가 평가점수를 중시하는 형태로 구성된 것도 있다. 이외에도 현재 북한정세나 한반도 상황을 좀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수구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수구성 역시 방법론적으로 엄밀한 성찰과 검토, 진지한 활용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지수인지, 개념적인 기반이 확고한지, 활용되는 통계나 수량화를 위한 기법은 타당한지, 상이한 영역들에 대한 가중치는 적절한지, 전문가 평가와 객관적 수치의 조합은 공감할만한지 등 적지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응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수개발 역시 의미 있는 학문적 담론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이 논문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구성한 남북통합지수를 사례로 하여 그 방법론적 설계과정, 개념적 기반, 지수구성의 원리 및 실천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⁵⁾ 이 지수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필자가 그 개발과정에 중요하게 참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며 지수화의 방식도 더 포괄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수의 방법론적 함의와 한계를 검토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통합지수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확인해보려 한다. 첫째, 통일연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수의 활용은 어느 점에 기여할 수 있는가? 둘째 지수구성에 작용하는 배후논리의 구조는 무엇이며 그 이론적 함의는 어떻게 말해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지수의 정책적 함의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인가?

5) 이 작업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주도하여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남북통합지수 1999~2007』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09) 및 김병로·김병연·박명규·정은미, 『남북통합지수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8) 참조.

Ⅲ. 지수구성에서 개념의 중요성

지수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지만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수치가 말해주는 바의 '무엇'이다. 지수가 40 또는 65로 표기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혼란스럽다면 그 지수의 실천적 의의는 물론이고 학문적인 효용성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뒤집어 보면 지수를 구성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가가 먼저 분명해야 함을 알게 된다. 지수는 숫자를 좀 더 명료하거나 통합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기법이 아니라 확인하고자 하는 지식의 내용을 얻기 위한 이론적 작업의 일환이며 수치 자체는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본다면 평화지수의 핵심은 평화에 있고 안보지수의 핵심은 안보에 있으며 통일시계는 통일을 핵심 개념으로 한다. 이때 그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지수산정 방식은 물론이고 얻어진 지수를 해석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수구성에 앞서 정확한 개념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개념들과의 이론적 연관과 상호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이론적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1. '남북통합'의 개념적 구성

남북통합지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이 지수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남북통합'(Inter-Korean Integration)이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남북통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계가 필요하다. '남북통합'도 일단 '통합'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특수한 통합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합에 대한 일반론으로부터 개념적

정의를 얻어내고 나아가 그 하위의 여러 차원과 영역들에 대한 종합적 구성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통합(integration)이란 개념은 분화된 요소들의 안정적 연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요소들의 분화와 안정적 연계라는 두 차원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별한 내부분화가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요소들이 동질적인 상태에서 결합하는 동질화(homonization)와는 그 의미가 다르고 연계되는 방식도 다르다. 통합은 분화된 요소들이 각각의 독자성과 이질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상호의존적 안정성을 획득한 상태, 또는 그 과정을 지칭한다. 개념적으로 통합은 구성부분들의 상이함, 독자성, 상충성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하위 영역에서의 차이와 이질성을 포용하는 전체 수준에서의 결합을 상정한다. 통합은 분화, 다양성, 설득, 공감, 소통 등과 친화력이 있으면서 일정한 동적 과정 속에서 결속을 가능케 한다. 유럽통합의 경우 ‘통일’이라는 개념이 아닌 ‘통합’이 강조된 이유가 각 개별국가의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차이와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연대와 결합을 추구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통합의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된 하스의 신기능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통합이란 ‘여러 상이한 국가적 상황에 거주하는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충성심, 기대, 정치행위를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당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치적 맥락에서 정의하려는 제도주의자들은 여러 개별 정부들이 스스로의 자율성을 부정당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규율을 받는 상위 정치제도의 창출로 정의하였다.⁶⁾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통일에 대한 논의를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개념이 지나치

⁶⁾ Antje Wiener, *Thoman Diez, European Integration The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2~3.

게 다양한 함의를 내포한 것에 비해 통합은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이고 분석가능한 내용들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목적론적 논의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지닌 통일담론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통합지수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한국사회에서도 통일과는 별도로 통합이라는 현상 또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일반적인 통합과는 그 내용이 구별된다. 대한민국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강조되는 통합, 다시 말해 다양한 사회주체들 및 영역들의 통합과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논의는 남북통합이라는 개념이 지칭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⁷⁾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독일통일 전후의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나 유럽통합에 대한 통합이론이 될 터이지만 이 경우에도 남북통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의 통합문제가 부각되면서 통합의 중요성을 논하는 글들이 많아졌지만 분단 상황에서의 통합논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⁸⁾ 유럽통합의 경우 국가적 경계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단위로 통합해왔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⁹⁾ 그 경우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질서라는 기본가치의 동질성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남북통합은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이

7) 이런 점에서 통일론의 구성에도 통합론적 시각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통일과 통합을 개념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지향성을 구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박명규·이근관·전재성 외, 『연성복합통일론』(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0) 참조.

8) Alexander Thumfart, 『동서독의 정치통합』(서울: 통일연구원, 2007) 참조.

9) Myoungkyu Park, "EU and Inter-Korean Relation: Method, Agency, and Theory," Myoungkyu Park, Reinhard Seliger, Sungjo Park, ed., *EU and North Korea: Between Humanitarianism and Business?* (MN: LIT Press, 2010).

아니라 서로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통합을 말한다. 남북한은 각기 분절된 별개의 체제로 반세기 이상 존속해오면서 강한 상호적대성도 유지해온 관계이므로 일반적인 사회구성부분들의 통합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남북통합은 남한과 북한 간에 존재하는 다면적 단절의 상태가 점차 완화되어 남북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 공동체가 형성되는 상태, 또는 그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자 심리적, 의식적, 규범적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하는 숙제다. 통일 이전에도 진행되고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런 포괄적인 통합이 남북 간에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남북한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경우에만 통일은 모든 구성원, 모든 영역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될 것이다.

남북통합은 물론 단일한 차원으로 진행되거나 구성될 수 없다. 남북통합은 남북한 간의 분절된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합의 속도, 밀도, 과정, 단계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이다. 초보적이고 제도화되지 못한 상호작용, 접촉, 교류의 상태에서부터 관계가 안정되고 상호성이 증대하며 접촉의 밀도가 확대되는 전과정이 남북통합의 내용을 구성한다. 또 여러 영역과 차원들을 내부에 포함하는 종합적인 통합이기 때문에 남북통합을 구성하는 하위의 영역과 차원, 단계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북통합의 하위영역과 차원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

남북통합지수에서는 남북통합을 세 가지 하위 영역과 세 가지 하위 차

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세 하위영역은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을 의미하고 세 차원은 제도통합, 관계통합, 의식통합을 뜻한다. 조한범(2002)이 적절하게 규정한 것처럼, 남북통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의 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지칭하기 때문이다.¹⁰⁾ 이를 남북통합지수에서는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의 세 하위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한다면 정치적 남북통합, 경제적 남북통합, 사회문화적 남북통합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남한과 북한 각각에서 일컬어지는 정치통합, 경제통합과는 별개의 것이란 점이다.

정치적 통합은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것,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새롭게 통합된 공동체로 자신들의 충성심, 기대 및 정치행위를 이전하게 되며 그 최종적인 상태로써 동일한 헌법,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¹¹⁾ 이 과정에서 제도적 동질성과 권한의 위임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통합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상당한 통합이 진전되었으면서도 정치적 통일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정치적 통합에서는 헌법적 가치, 정치적 규범, 정체성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¹²⁾ 어떤 원칙과 제도적 기틀 위에서 통일국가가 구성될 것인가에 따라, 또 통일의 과정이 어느 정도 전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 위에서 민주적으로 달성되는가에 따라 정치통합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21세기의 정치통합은 21세

10)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4.

11) 김병연 외, 『남북통합지수 1999-2007』, pp. 63-65.

12) Alexander Thumfart, 『동서독의 정치통합』, pp. 72-76.

기 세계사가 공유하는 문명적 가치와 부합되어야 달성 가능하며 그 핵심은 민주주의적 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억압적이거나 독재적인 형태로 남북한 정치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설사 제도적으로 가능하다해도 그것은 '통합'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의 문제의식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연하게 정치통합의 단계 구별 속에 이러한 민주화의 의미가 내포된다.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된 상태 또는 그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에서부터 여러 경제요소들의 상호교환, 의존의 구조가 확대되는 과정 전반을 포괄한다. 생산요소의 이동, 경제체제의 동일화, 경제정책의 공동규율, 가격변수의 유사한 작동, 지역간 소득편차 감소 등이 경제통합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다.¹³⁾ 여기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북한과 개방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남한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나의 틀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포함된다. 21세기 세계사의 향방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원리에 바탕한 세계경제와의 개방적 통합이 남북통합은 물론이고 지역통합과의 연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¹⁴⁾

사회문화적 통합은 남북한이 문화적 소속감 및 사회적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의 생활단위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는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이 가능한 단일공간의 창출이고 문화적으로는 같은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과제가 된다. 헤어진 가족이 자유로이 만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이나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공동체 내부에서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자원이 함께 수용되어야

13) 김병연 외, 『남북통합지수 1999-2007』, pp. 23-25.

14)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A Security and Peace Mechanism for Northeast Asia: The Economic Dimension," *Policy Brief* (April 2008).

하고 복지의 혜택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따른 언어나 생활 방식의 차이는 그 자체로 존중되면서도 차별되지 않고 적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누리는 권리와 혜택에서 남북이 고루 포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자유와 복지가 이 사회문화적 통합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각 단계가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가치, 규범에 대한 궁극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본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은 각기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와 일정하게 상응한다. 다르게 말하면 세 차원의 공동체를 구현해가는 과정이 곧 각각의 통합이며 이들 세 차원의 통합을 포괄하여 남북통합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관계통합, 제도통합, 의식통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통합의 차원이다. 남북통합지수의 세 차원은 남북관계가 제도, 관계, 의식의 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됨을 함의하며, 이것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통일과 통합에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다.¹⁵⁾ 통합은 상상이나 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물론 제도만으로 달성되지 않는 심리와 의식의 문제를 동반한다. 따라서 적어도 세 차원을 구별하여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통합은 서로의 상호작용과 만남,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효과를 지칭한다. 단절된 상태로부터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될 때가 통합과정의 첫 출발이다. 오랫동안 구조적

15) 김병로, “남북통합지수의 함의, 쟁점, 활용방안”, 『남북통합지수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현실과 전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 발표자료집 (2010년 8월 11일), p. 3.

으로 단절되어 있던 사이에서는 만남을 통한 관계의 형성 그 자체가 통합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만남을 시작하고 점차 그 접촉의 빈도를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관계통합은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절실하며 효과가 크다.

하지만 관계통합은 그 자체로서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다. 접촉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당사자 수준의 개별사례로만 남아있게 되면 그 효과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도통합인데 이것은 남북한 간에 일정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제도적인 방식으로 표준화, 상설화하는 것이다. 제도화는 특정한 개인이나 당사자의 의지나 특정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상호작용의 패턴과 가능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통합효과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제도화는 법제화를 수반하기 마련이어서 남북한의 주요한 정책결정자들이 공통의 규범과 절차에 속하게 됨으로써 다른 부분으로의 통합의 확산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어떤 의미에서 통합의 전 과정이 이런 제도화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에는 의식의 차원이 있다. 일차적으로 개별 구성원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순히 개인행위자의 '생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집합적 의식이 공통의 기반을 가지는 것을 지칭한다.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공속의식, 우리의식, 하나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그로 인해 일종의 연대감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남북 간에는 '하나의 민족'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집합적 의식으로 통합적인 고리를 제공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남북통합과 관련한 의식은 쟁점별로, 시기별로, 또 세대별로 적지 않게 차별적이어서 민족이라는 호명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

지 않다. 통일의 의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생활방식의 편차,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의식적 통합의 수준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4. 매개제도, 위임제도 그리고 단계구성

통합이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특히 제도통합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의 교류접촉으로부터 최종단계의 공동체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중간단계는 일반적으로 ‘제도화’라고 불리울 수 있는 시간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화의 진전과 상태에 따라 통합과정을 세분화하고 그 변화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화는 법제의 마련이나 정치적 합의로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적 뒷받침 못지 않게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제도화 그 자체도 여러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과정인 셈이다.

이를 명료하게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도통합에서 매개제도(intermediating institution)와 위임제도(delegating institution)를 구별하였다. 매개제도는 당사자들의 접촉과 교류, 상호작용을 글자 그대로 ‘매개’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단순한 교류조차 때에 따라 임의적 판단과 정책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넘어서 상시적 교류와 접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개제도의 출현이 중요하다. 경제적 영역에서 물품의 이동이나 인적 교류의 제도화가 필수적인 바, 이동과 접촉, 상호작용과 공동합의 등 모든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반면 위임제도는 남북한의 주체나 영역이 공동의 제도적 규율과 원칙의 통제를 받는 상태다.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단순한 교류의 차원이 아닌, 공동의 통합적 관계가 형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

동체적 통합이나 궁극적 통일은 그런 점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위임제도가 힘을 발휘하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다. 위임제도의 출현은 논리상 매개제도에 선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뒤따라온다. 매개제도 없이 위임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거나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적 구상 위에 통합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세부적으로는 11단계로 구성하는 틀이 만들어졌다. 접촉교류기에 해당하는 0~2단계는 남북 간의 교류부재로부터 초기적 상태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한다. 협력도약기에 해당하는 3~5단계는 상호 교류와 접촉이 안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런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매개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상호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기도 이때라 할 수 있다. 접촉교류기와 협력도약기 간의 분류는 남북통합지수가 관계의 증진을 단순히 교류협력의 양적 규모로만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0~2단계에는 양적 규모에 영향을 받지만, 3단계 이후에는 매개제도의 구성과 역할과 같은 제도화가 진전되어야만 통합이 진전된다.¹⁶⁾

다음으로 남북연합기라 할 수 있는 6~8단계는 여러 분야에서 공동의 위임적 제도화가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통합의 기반이 구체화되는 단계다. 이 단계는 아무리 교류의 양과 회담의 횟수가 많아져도 제도화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단계로 진입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남북연합기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8단계에 이르면 주요한 경제정책이나 정치활동이 공동의 기구나 제도에 위임되고 광범위한 제도의 표준화, 단일화, 공동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완성기라 할 9~10단계는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 남북통합이 최고단계에 이르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6) 김병로, 위의 글, p.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남북통합의 개념적 구성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남북통합의 영역과 차원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관계적 통합	경제교류의 진전, 각종 경제지표의 동조화, 이를 뒷받침하는 매개제도의 출현	정치군사적 교류확대, 상호 협의의 정례화, 신뢰구축조치, 이를 위한 매개제도 출현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 진전, 민간영역의 자율적 공동기획, 매개제도 진전
제도적 통합	경제영역의 제도적 상호성 심화, 매개제도의 안정화와 위임제도의 출현, 시장경제원리의 보편화	정치군사영역의 제도적 교류, 다양한 신뢰구축에 기반한 매개제도 안정화, 권위의 위임제도 출현	민간분야의 자율성 확대,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의 심화, 비정치, 비경제 영역에서의 위임제도 발달
의식적 통합	단일한 경제공동체, 이익의 상보성에 대한 확신, 승인, 경제통합에 대한 시민적 동의, 시장경제적 가치에의 공감	정치군사적 영역에서의 적대성 해소, 단일한 정치공동체 형성에 대한 지지, 승인,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합의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이질성 극복, 공동체적 통합과 소통을 향한 의지, 시민적 참여, 시민적 자율과 자유에 대한 가치공유

IV. 지수의 구성 : 포괄성, 실질성, 비교가능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는 지수화 작업이다.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계량화와 관련된 기술적 사안이 주를 이루지만 수치의 기준과 절대값이 갖는 의미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물음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후자의 점을 먼저 살펴보고 기술적 측면은 간략하게만 언급하기로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인 지수의 수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한 사회의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GNP는 기준점수는 있으나 최종상태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사회불평등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개념상 완전평등과 완전불평등상태를 상정하여 0과 1이라는 값 사이에서 지수가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남북통합이라는 과제는 이념적으로 그 완전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고 보고 0과 1,000점 사이에서 지수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0과 1,000의 값, 다시 말해 남북통합의 부재와 완전실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0의 점수를 예로 들어본다면 단순히 접촉과 교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서로간의 적대성과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지 애매할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간에는 교류부재의 문제 못지않게 상호불신과 적대성의 해소가 중요한데 이럴 경우 0의 값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가 논란이 된다. 1,000이라는 최종값도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남북한이 모든 영역, 모든 차원에서 완전한 공동체적 일체성을 이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평화공존상태를 구축한 때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 점수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지수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라는 목적에 따라 제한적인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남북통합이란 관점에서 볼 때 관계의 단절상태로부터 공동체적 완전통합으로의 이행 과정에 적지 않은 단계와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주된 목적이 통합의 정도와 수준을 보는 것인 만큼 관계의 완전단절, 교류의 부재는 그것이 적대성에 의한 것이든 상호무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물리적 거리에 따른 것이든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음의 값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 성격은 이후 통합의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세 영역에 어느 정도의 값을 부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남북통합에서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이 어떤 비중을 갖는가에 대한 해석인 셈이다. 남북통합지수에서는 경제영역, 정치영역, 사회문화영역이 각기 동일한 비중을 점한다고 보고 같은 값을 부여했다. 1,000점을 최종값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각 영역에 330점을 배점하고 사회문화분야에 10점을 더 부여했다. 이것은 지수의 가독성을 높이려는 편의성과 함께 사회통합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작용한 것이다. 어쨌든 통합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 세 영역에서는 같은 비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판단에 기초한 점수구성인 것이다. 서로 다른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값을 부여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관계적 통합, 제도적 통합, 의식적 통합 순서로 차등적 점수를 배정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체 통합과정에서 제도적 통합이 갖는 비중이 크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통합 부분이 가장 큰 값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지수는 남북통합지수이고 그런 점에서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세기 이상 거의 전면적인 적대적 단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남북한의 경우, 초기상태의 교류와 협력, 접촉의 활성화를 통해 통합의 초기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들고 또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단 이 부분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제도화의 심화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럽통합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두 국가가 하나의 통합체로 발전해갈 때와 전혀 다른 것이다.

의식적 통합에 어느 정도의 값을 부여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사실 통합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고찰하면 의식이 차지할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남북통합이라는 특수한 목표와 무관할 수 없다. 남북이 60년 이상 서로 다른 정치체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통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까닭은 남북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통합에의 의지이자 집합적 정서 때문이다. 물론 그 배후에는 오랜 단일민족의 신념과 공통의 문화적 기반, 그리고 이산가족에서 보듯 혈통적 동포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통일을 향한 집합적 의식과 의지는 적어도 남북통합의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일 뿐 아니라 남북통합이라는 목표 자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의식부분에 적지 않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만 의식통합은 그 정도를 단계론적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 전체의 단계구성을 설정하는 데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을 종합하여 배점의 구성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통합의 영역별 배점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합계
관계적 통합	90	90	90	270
제도적 통합	160	160	160	480
의식적 통합	80	80	90	250
합계	330	330	340	1000

김병연 외, 『남북통합지수 1999~2007』 (서울대출판문화원, 2009), p. 21.

다음으로 문제는 구체적인 지수값의 산출이다. 이 부분은 이미 간행된 『남북통합지수 1989~2007』에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 원칙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수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나 자료들을 모아 포괄적인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음의 값을 갖는 수치는 없고 모든 지수가 단순합의 형태로 부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지수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혼용하였는데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가용한 통계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한국은행, 통계청, 통일부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물론

이고 유엔, 세계은행, 외국기관에서 제공되는 지표들도 필요하면 원용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직접 조사를 통해 그 수준과 변화를 수치화하는 방법을 보완했다.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전문가들의 평가에 기초한 조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는 양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치화하기 위한 조작적 방식이다. 예컨대 매개제도나 위임제도의 존재 및 그 작용정도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틀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제화의 정도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전문가의 평가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으로 수치화하였다.¹⁷⁾

마지막으로, 지표를 측정하는데 준거점의 설정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수는 기준 또는 준거점에 대비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지수에 목표 또는 준거점이 있다면 그 목표나 준거점 대비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다. 남북통합지수에서는 특히 관계적 통합의 경우에 준거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논의대상이었다. 비록 무엇을 준거점으로 할 것인가에 일정하게 자의적 판단 또는 자의성이 불가피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시되는 준거점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남북통합지수는 가급적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사례에서 그 준거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의 영역에서 교역부문에서는 기준점을 유럽연합(EU)과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와 같은 경제공동체의 역내교역비중과 비교하여 상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사회문화통합의 영역에서는 인적왕래의 경우 기준점을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통일 직전 동서독 간의

17) 각 영역의 구체적 수치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출간된 『남북통합지수 1989~2007』을 참조할 것.

매년 평균 상호 인적 왕래규모가 평균 700만 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설정하였다.

V. 남북통합지수와 통일정책: 실천적 함의

남북통합지수가 발표된 이후 사회적으로 꽤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남북의 관계를 지수로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로 받아들여졌고 일반인에게도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에 족했다. 하지만 그것이 갖는 다양한 함의가 제대로 전달되기보다 매우 부분적이고 정치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강조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남북통합지수를 구성하려 했을 때의 실천적 문제의식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첫째로 통합은 영역별로 다른 속도와 추진력을 갖고 진행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치통합과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은 서로 맞물리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진행가능하며 그 속도도 같지 않다. 이는 통합의 초기상태를 넘어서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현실이 말해주는 함의는 남북통합에 있어서 이 세 차원의 독자성을 가능하면 승인하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영역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모든 영역의 진행속도를 일치시키려 하거나 서로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통합'의 성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특히 남북 간의 정치적인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도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이 독자적인 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치적 통합의 동력을 되살려줄 수도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의 남북통합과정이 어떤 힘에 주로 의지해왔는지를 성찰적으로 검토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림 1>에서 보이듯 지난

20년의 남북통합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에 의해 추동된 측면이 없지 않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2007년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지수의 급격한 증대를 추동한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위해 정치영역의 통합이 전체 남북통합의 견인효과 또는 선행효과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¹⁸⁾ 하지만 이런 정치적 차원의 통합은 등락이 매우 심하고 정권의 성격 및 남북한 간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매우 불안정함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림 1>에 나타나듯 1993년 김영삼 정부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통합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상반된 특징은 앞으로의 남북통합에서도 정치영역에 탄력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경제통합의 영역은 속도가 느리지만 일단 형성된 방향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영역의 등락에 비해 경제통합은 가속도가 붙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요동치는 형태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통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정치통합과 문화통합을 견인하는 효과가 크다.¹⁹⁾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개성공단의 사례는 경제영역이 갖는 제도적 힘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통합이 도약기(take-off stage)를 넘어서 4단계로 진입하면 다른 영역의 통합을 견인해 낼 수 있는 강력한 통합엔진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정치상황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경제통합의 효과가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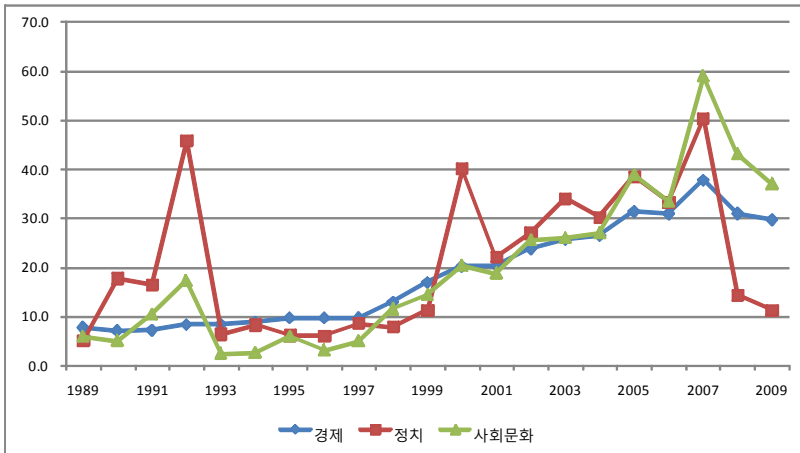
18) 김병로, “남북통합지수의 함의, 쟁점, 활용방안”, p. 7.

19) 위의 글, p. 7.

상쇄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통합의 영역은 정치영역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경제영역에 비해서는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적 영역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독자성 및 자율성의 취약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과 달리 사회문화영역은 남북교류협력이 민간에 의해 주도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나 활동성이 확보될 만큼 성장하지 못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이든 사회문화적 교류에 종사하는 단체들이 좀 더 독자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남북통합지수의 연도별 추이



남북통합지수의 구성은 초기의 교류협력만으로는 통합의 질적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초기 상태에서는 교류와 협력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정적인 중간단계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모든 영역에서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제도화는 법제화와 함께 공동기구의 작동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위임제도에 남북이 단일한 제도적 원리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 전환을 위한 상호간의 결단과 합의, 원칙의 공유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막연한 ‘남북연합’ 내지 ‘상호존중’ 같은 논리로는 통합의 질적 고양ی 어렵다. 제도화를 가능하게 할 원칙과 제도의 공유, 법적 원리의 공감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결국 북한의 변화가 통합단계의 진전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 시장적 합리성, 국제적 경제원리의 존중 같은 표준화, 정치영역에서 시민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 사회문화영역에서 각 주체의 자율성과 다원성, 자유로운 결합이 허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전환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 남한보다 북한의 제도변화를 훨씬 강하게 요구한다. 통일이 정치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통합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통합단계의 질적 고양이 21세기적 보편가치와 결합되어 있는 것의 실천적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현실에서 초기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즉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면적인 신뢰구축은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기초이자 전제이다. 제도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교류협력 일지라도 그것이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할 때에야 비로소 매개제도의 활성화와 나아가 위임제도로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3단계를 일종의 이륙단계(take-off)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단계 이하의 시점에서 제도화의 불비를 이유로 접촉과 교류를 한정하거나 그 의의를 폄하하는 것은 실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VI. 결론과 과제

남북통합지수는 단순히 남북관계가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단순한 지표가 아니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남북통합지수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통일과 통합을 촉진하는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말해준다.²⁰⁾ 그리고 장기적 차원에서 남북통합지수는 남북의 중장기적 전략으로서의 통일을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내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구상을 근거로 현실의 상태를 점검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실 이외에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동력을 확인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지수를 구성하는 내부원리를 유념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단선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넘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지적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학계의 분석적 담론이 정치적 논쟁이나 시민적 주장의 차원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반드시 정치적인 가치판단과 시민적인 열정들로부터 유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담론적 내용과 형식, 논의의 엄밀성에서 차별화되지 않으면 학계가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남북통합지수도 여러 점에서 한계가 적지 않다. 남북통합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지수구성의 방법론과 기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교류협력부분의 비중이 과다하다거나 의식통합 차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서로 다른 차원으로 설정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통합

²⁰⁾ 위의 글, p. 6.

이 실제로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차원의 단순함으로 통합지수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관계통합적 차원과 제도통합적 차원 간에, 매개제도와 위임제도의 수준 간에 상대적 비중은 적절한지도 논란이 가능하다. 실제로 통합의 진전 초기에는 접촉과 교류의 양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제도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4단계 이후에는 관계통합적 요소보다는 제도통합적 요소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의식통합 부분은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통합의 수준과 정도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북통합지수는 현재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가 아니라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라는 점에서 일정한 편향성(bias)이 분명히 존재한다. 의식통합의 측정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열망, 적대감,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과 동일성,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등은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식보다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경우 남한주민의 의식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의식통합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탈북자 의식조사 자료를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활용한다거나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나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복합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화의 중요성에 비해 그것이 지수에 반영되는 비중은 크지 못하다는 점이나 관계의 악화나 무력충돌과 같은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음의 값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남북통합지수는 남북한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모델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천안함 사건과 같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발

생해도 이 사건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남북통합지수에는 비록 통합을 저해하는 특정 사건을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사건은 교류 협력의 위축이나 대화의 단절 등과 같은 결과를 수반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통합의 다면적 차원에서 음의 값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갈등을 야기하는 특정 사건이 전혀 통합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남북통합이 주변의 지역통합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환경적 변수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수치를 구성하는 기술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수치도출에 한계를 지닌 것이나 전문가의 분석이나 탈북자의 의식조사로 대처한 부분이 갖는 한계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남북통합지수의 구성원리 자체에 일정한 수정과 보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남북통합지수를 북한의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지적 통합의 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여러 형태로 지수의 활용, 조사 결과의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이 단순한 수사나 이론적 깊이 없는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통일을 논의하는 학문적 담론의 질적 고양을 가져오는 중요한 방법론적 발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2010년 11월 16일 / 수정: 2010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0년 11월 30일

【참고문헌】

- 김병로. “남북통합지수의 함의, 쟁점, 활용방안.” 『남북통합지수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현실과 전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0년 8월 11일) 발표자료집.
- 김병로 · 김병연 · 박명규 · 정은미. 『남북통합지수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8.
- 김병연 · 박명규 · 김병로 · 정은미. 『남북통합지수 1999~2007』.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09.
- 루이스 코저. 신용하 · 박명규 옮김. 『사회사상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
- 박명규 · 이근관 · 전재성 외. 『연성복합통일론』.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0.
- 박명규. “통일논의와 통일연구의 현주소: 담론의 산출과 학계의 역할.” 『비교와 전망』, 제6집 3호.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7).
-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 박명규 · 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3.
-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Alexander Thumfart. 『동서독의 정치통합』.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Antje Wiener, Thoman Diez. *European Integration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Myoungkyu Park. “EU and Inter-Korean Relation: Method, Agency, and Theory.” Myoungkyu Park, Reinhard Seliger, Sungjo Park, ed., *EU and North Korea: Between Humanitarianism and Business?* MN: LIT Press, 2010.
-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A Security and Peace Mechanism for Northeast Asia: The Economic Dimension,” *Policy Brief* (April 2008).

Abstract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and Unification Studies:
Methodology and Theoretical Implication**

Park, Myoung-kyu(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scientific unification studies by exploring the methodological difficulties of the academic research on the inter-Korean issues. Since the issue of unification and North-Korea related questions are so politically complex that value-free discussion in the academia seems to be very difficult.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build a methodologically disciplined concepts and discourses among academicians in order to distinguish opinions of scientific researchers from those of politicians and ordinary citizens.

Developing index is a useful method for social scientist to catch complex reality. This paper tries to show methodological usefulness, theoretical task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unification studies by examining the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which has been designed by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7. The main arguments are; an index is not a quantitative technique but a comprehensiv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a clear conceptualization on the research is necessary for developing index,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 should be examined in order to develop appropriate index structure.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helps us to figure out; three sectors and dimensions of inter-Korean integration, different speed and stages of sub-level's integration, relative importance

among diverse sectors and dimensions. Finally some methodological limits and theoretical problems of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are discussed.

keywords: integration, unification, conceptualization, dimensions of integration, delegative institution, mediative institution

박명규

서울대학교 문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통일평화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국민·인민·시민』, 『2009 통일의식조사』,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한국의 민족담론과 통일문제” 등이 있다.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은기수(서울대 국제대학원)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각종 사회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문항을 다룬 경우와 북한 및 통일에 관해 연구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실시해 온 소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북한 및 통일 관련 조사의 동향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90개의 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그동안 수많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사들이 비슷한 문항을 사용하지만 표현 및 척도가 동일하지 않은 문항을 사용하여 시계열적 비교 분석에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표적인 한국종합사회조사나 서울대의 통일의식조사 등은 동일한 설문항을 매해 조사에서 반복 실시하여 시계열적으로 정확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의 시기와 가능성,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 후의 변화,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및 북핵 관련 문항이 표현방식, 의미, 척도 등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통일조사의 동향,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반복조사

* 이 연구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과제의 일환이다. 이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주신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사장 석현호), 중앙일보(신창운 기자) 및 지면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I. 서론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지 65년이 지나고 있다.¹⁾ 오랜 기간 남한과 북한은 적대적인 대립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반도에서도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여러 형태의 교류가 증가해왔다. 한 편으로는 쌍방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사건 등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가 변해가고, 남한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가 변해가면서 남한 국민들의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의식도 변해왔다.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민족이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감상적인 차원의 통일의 당위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분단이 지속되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은 점차 줄어들어왔다. 과거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통일의 당위성이 저절로 다져졌지만, 분단의 기간이 수십 년을 지나면서 통일은 새로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열망은 점차 낮아졌다. 과거에는 통일에 대해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감상적인 접근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 이후의 삶이 개인 혹은 우리 사회에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담만 가중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경향이 점차 강해졌다.²⁾

1) 이 글에서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이는 사회의 성격이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음을 뜻한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북한과 남한에 존재하는 차이를 접근할 때 김귀

오랜 기간 북한은 남한에게 적대대상이나 경제대상이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교류가 증가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나 경제의식이 조금씩 약화되고 북한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거나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태도가 조금씩 증가해왔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이 복잡한 변수들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정부는 통일정책을 펴나간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 변수 가운데 통일의 주체인 남한의 주민들이 북한 및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한이나 북한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통일 한국의 앞날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여러 면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의 주민들이 통일 및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와 의식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와 책의 차원에서도 언제나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다.³⁾ 일반 성인들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옥은 “한 사회의 성격은 사람들의 심성이나 태도, 의식,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북한 주민의 태도에 사회주의체제가 미친 영향을 논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남한 주민에게도 자본주의체제가 미친 영향을 말해주는 것이고, 현재 남한 주민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는 경제위기 및 양극화와 같은 사회성격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김귀옥, “남북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전성우 편,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그 현황과 전망』 (서울: 금왕출판사, 2001), pp. 113~181.

3) 정권 차원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책이 국민들의 태도나 의식을 너무 많이 반영해 가장 일관성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김영삼 정권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책을 꼽은 연구도 있다. 이 경우 정권이 대중의 의식과 태도에 얼마나 관심이 컸고, 그 관심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한 결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렸던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Yongho Kim, “Inconsistency or Flexibility? The Kim Young Sam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Its Domestic Variants,”

통일 한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통일의식도 큰 관심사였다.⁴⁾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각종 사회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북한 및 통일에 관해 어떤 조사가 있었고, 이 조사는 통일과 북한에 대해 어떤 내용을 파악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를 통해 산출된 자료를 분석해서 한국인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고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무슨 내용의 조사가 있었는지를 동향과 실태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의 일부를 예시의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설문항과 선택지의 관계에서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한 조사 항목도 예로 제시하려고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8, pp. 225~245.

- 4) 통일의식에 관해 비판적 검토를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로 김현옥(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현옥은 “‘통일의식’은 사회 및 개인의 이념적 지평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이념, 이해관계, 통일의식 간에는 수많은 갈등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 총체적인 ‘통일의식’을 논한다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있다.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아니고 여러 텍스트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이우영(2010)의 연구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김현옥, “통일의 의미와 통일의식의 내적구조,” 전성우 편,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그 현황과 전망』 (서울: 금왕출판사, 2001), pp. 65~111 ; 이우영,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2010년 9월 9~10일).

II. 연구방법 및 자료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실시된 각종 사회조사 및 통일 관련 조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져 왔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 실시된 각종 사회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문항이 있는 경우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소위 통일의식조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소장한 조사 자료 및 본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총 90개의 각종 사회조사를 분석하였다.⁵⁾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수집되었다. 첫째, 전국 수준의 조사이다. 각종 사회조사가 실시되지만 조사대상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통일의식조사 등의 형식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통일 및 북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조사가 아니라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통일에 관련된 사회조사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자 했던 일반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가 본 분석의 대상이 된다. 둘째, 조사대상층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경우는 이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결과가 “한국인의 통일에 관련된 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각종 일반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동안 통일

5)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문항을 포함해서 실시된 각종 사회조사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통일의식조사는 이 연구에서 다룬 91개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룬 자료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통일관련 각종 사회조사의 일부일 것이다.

관련 조사는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청소년 등 젊은층에 국한해서 이루어진 조사도 많다. 이 경우 조사 결과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한국인의 통일관련 의식”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수집, 분석된 자료 90개가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⁶⁾

〈표 1〉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조사연도 및 조사의 이름, 조사주체 등을 보여준다.

〈표 1〉 통일 및 북한 관련 조사

연도	조사	조사기관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공보처
2008	2008년 범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2	한미관계 여론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2	한미관계 이념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2	한국인의 이념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3	한미관계 여론조사 2차	동아시아연구원
2003	한미관계 이념조사 2차	동아시아연구원
2003	국정평가 여론조사 취임 6개월	동아시아연구원
2003	한국인의 이념조사 2차	동아시아연구원
2004	한미관계 여론조사 3차	동아시아연구원
2004	한미관계 이념조사 3차	동아시아연구원
2004	CCFR 대외인식조사 국제여론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4	CCFR 대외인식에 관한 전문가 조사	동아시아연구원

6)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이지만 외국에서 결과가 출판된 경우도 있다. Levin and Han(1999)은 미국의 RAND Center for Asia-Pacific Policy가 한국의 중앙일보와 함께 1996년과 1999년에 통일 및 안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가 간단한 빈도표의 형태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Norman Levin, and Yong-Sup Han, *The Shape of Korea's Future: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Long-Term Security Issues* (RAND, 1999).

2004	국정평가 여론조사 신정부정책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2004	한국인의 이념조사 3차	동아시아연구원
2005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1차	동아시아연구원
2005	국정평가 여론조사 취임 1년	동아시아연구원
2006	CCGA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동아시아연구원
1994	통일문제관련 여론조사	문화방송
1990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북방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2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여론조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5	2005년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8	2008년도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2009년 국민통일여론조사 1차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2009년 국민통일여론조사 2차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2004년 제1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2004년 제2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2004년 제3차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6	2006년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7	2007년 일반국민 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86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8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0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6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3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에 관한 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4	광복 60주년 국민의식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989	전환기 한국사회조사-국민의식조사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90	21세기를 향한 국민의식 성향조사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3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4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1995	통일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보고서	조선일보
1995	조선일보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창간 82주년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2002	조선일보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2003	조선일보 창간 83주년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2003	조선일보 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1999	중앙일보 창간 34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1	중앙일보 창간 36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2	중앙일보 창간 37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3	중앙일보 창간 38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4	중앙일보 창간 39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5	중앙일보 창간 40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6	중앙일보 창간 41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7	중앙일보 창간 42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2008	중앙일보 창간 43주년 국민의식조사	중앙일보
1989	한민족공동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통일부
1990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통일부
1991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통일부
1993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4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5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8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9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2003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2005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1	통일의식조사 보고서	한국갤럽연구소
1999	국민안보의식조사	한국갤럽연구소
2001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한국갤럽연구소
1999	한국사회의 신뢰실태 조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6	현대리서치 정치지표조사 1차	현대리서치연구소
2006	현대리서치 정치지표조사 2차	현대리서치연구소
2007	현대리서치 정치지표조사 3차	현대리서치연구소
2007	현대리서치 정치지표조사 4차	현대리서치연구소
2007	현대리서치 정치지표조사 5차	현대리서치연구소
2007	현대리서치 정치지표조사 6차	현대리서치연구소
1985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87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2010	2010 국민 통일의식 조사	KBS 남북협력기획단, KBS 방송문화연구소
2005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방송연구' 발간을 위한 국민통일의식조사	KBS 방송문화연구소
1996	한국, 중국, 일본국민의식조사	KBS, 연세대학교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통일 관련 조사에서 어떤 항목이 조사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 관련 조사에서 사용되는 항목은 내용이 거의 동일한 항목이 반복되는가 하면 시기별로 남북 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항목이 조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북핵 위기가 전개되면 북핵 관련 문항이 새로 만들어져 조사되기도 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이에 관한 문항을 추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 및 통일 관련 조사에서는 시기별로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문항이 추가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조사에서 통일에 관한 문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혹은 유지해왔는지를 분석할 때 양적으로 통계를 내어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다른 각종 조사에 포함된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 몇 특성을 보여주고 문항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아울러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면서 통일 관련 사회조사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 설문항뿐만 아니라 선택지 혹은 척도에 주목하여 연구자들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과연 어떤 의도를 담고 설문항을 개발, 이용해서 통일 관련 조사를 해왔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통일 관련 조사의 동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반복항목 및 반복조사의 전개

통일에 관한 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해왔다. 그런데 통일에 관한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가 아니고 일반사회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가운데 한두 부분의 설문항을 북한, 통일, 남북관계, 안보 등의 문항으로 구성해 일반인의 통일에 관한 의식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조사가 있다. 각종 사회조사는 대개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기관의 성격상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민족통일연구원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북한 및 통일을 연구대상이나 업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의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런 조사기관에서 실시해 온 조사는 거의 전적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라고 칭할 수 있다.

각종 일반사회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항목을 통해 의식과 태도

가 조사되고 또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통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연구자나 북한 및 통일의식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항목이 반복해서 계속 사용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하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동일한 척도를 이용한 동일한 항목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조사에서 통일의 시기에 관한 태도나 의견을 “귀하는 한반도에서 언제쯤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물었고, 응답지를 (1) 10년 이내, (2) 10년 이상 20년 이내, (3) 20년 이상 30년 이내, (4) 30년 이상, (5) 불가능하다 등으로 구성했다면 시대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이 멀리 느껴지거나 혹은 가깝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질문의 낱말이나 용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응답을 측정하는 척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조사가 반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인들의 통일시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일반사회조사나 통일의식조사의 경우 통일의 시기를 묻는 질문항에서 용어, 낱말, 표현방식 등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응답지의 척도를 조사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수십 년간에 걸쳐 통일시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엄밀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각종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닫고 설문항의 용어와 표현방식 및 척도를 그대로 두고 계속 반복해서 측정하는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사회조사 가운데는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3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10년 현재까지 매해 실시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2003년 첫 조사를 실시하면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항과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 1)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골라주십시오.(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지원대상 2) 협력대상 3) 경계대상 4) 적대대상 5) 모르겠다

문 2) 귀하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국가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6) 모르겠다

문 3) 귀하는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003, 2006, 2007, 2008, 2009)

1) 매우 필요하다 2) 다소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모르겠다.

문 4) 귀하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2003)

1) 매우 높다 2) 다소 높다 3) 별로 높지 않다 4) 없다 5) 모르겠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문자 그대로 종합사회조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항이 다 망라되어 있다. 여러 분야를 다 포괄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문항을 새로 집어넣고 빼기가 어려운 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2003년에 북한 및 통일에 관해 네 문항을 물어본 후 2004년에는 두 문항으로 문항의 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이 다시 되풀이되면서 2009년 현재 북한 및 통일과 관련하여 세 문항이 반복되어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이 세 문항은 질문의 표현방식도 동일하고 응답지의 척도도 동일한 척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국종합사회가 앞으로도 매년 지속된다면 북한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인식, 주위 열강을 친밀하게 느끼는 정도, 그리고 통일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남한의 주민들이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가장 일관성 있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전문조사가 아니면서도 북한 및 통일관련 문항을 비교적 원형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조사하는 예의 하나로 중앙일보의 창간기념 일반사회조사가 있다.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전문조사가 아니면서도 중앙일보 창간기념조사는 조사 문항의 상당수가 북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책에 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자가 확보한 중앙일보 창간기념 조사는 1998년 조사부터이다. 1998년 중앙일보 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 주위 열강에 대한 선호도, 통일 정책 등에 관한 항목이 별도의 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중앙일보 창간기념조사는 많은 문항이 반복 조사되고 있는데, 그중 한 예는 다음과 같다.

문) 남북통일은 언제쯤 이뤄질 것 같습니까?(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1) 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 2) 5-10년 이내
- 3) 10-20년 이내
- 4) 20년은 더 걸리겠지만 언젠가 이뤄질 것이다
- 5)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이 벌써 10년 이상 동일한 항목, 동일한 척도를 이용해서 통일 시기에 관한 조사가 반복되었고, 이 결과는 지난 2000년대에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국인은 생각해왔는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통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통일 관련 전문연구기관이면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를 들 수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부

터 매해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통일의식조사는 조사 결과의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7년 첫 조사에 사용된 조사항목을 가능한 한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의 수많은 조사항목 가운데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유사한 항목으로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이 있다. 서울대의 통일의식조사는 그 항목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

문) OO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2007~2010)

-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는 질문의 표현방식과 선택지의 표현방식 및 척도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고 지난 4년간 매해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록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만 조사되었지만, 매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가 축적되면 통일이 될 때까지 한국인들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는 각각 나름대로 매해 반복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항목은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주관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 및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 동일하게 들어있다. 그러나 질문의 표현방식이나 선택지의 척도는 두 조사가 동일하지 않다. 위의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

항에서 한국종합사회조사는 경쟁 대상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통일의식조사는 경쟁 대상이라는 선택지가 포함된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자료를 연속해서 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동일한 연도에 실시된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한다면 경쟁 대상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없고 사이에 결과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파악해 볼 수도 있다.

〈표 2〉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경우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대상	20,8	19,9	16,4	18,0	20,5	19,2	14,3
협력대상	36,6	38,8	42,8	37,3	39,5	35,2	32,1
경계대상	29,5	30,0	26,7	31,7	28,5	33,4	35,5
적대대상	9,1	8,3	9,1	10,5	9,7	10,5	15,8
모르겠다	4,0	3,0	5,0	2,5	1,7	1,7	2,4

자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표 3〉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통일의식조사의 경우

	2007	2008	2009	2010
지원대상	21,8	21,9	17,4	19,3
협력대상	56,6	57,6	50,7	44,7
경쟁대상	3,3	3,8	2,3	3,3
경계대상	11,8	11,3	20,6	20,7
적대대상	6,6	5,3	9,0	12,0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표 2〉와 〈표 3〉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지만 척도가 달라지면서 조사 결과가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 종합사회조사에서는 모르겠다라는 선택지가 있고, 반면에 통일의식조사

에서는 경쟁대상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이 두 선택지를 택하는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선택지에 대한 응답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조사를 통해 남한 주민 가운데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09년 현재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16%인데 통일의식조사에서는 9%로 나타난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선택지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을 적대 대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경우 2008년에 10.5%에서 2009년에 15.8%로 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통일의식조사의 경우에는 2008년에 5.3%에서 2009년에 9.0%로 3.7% 포인트의 차이만 나타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0.75% 포인트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반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경쟁대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1.5% 포인트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7% 포인트만 증가했기 때문에 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00년대에 시계열적 비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사회조사에서나 통일 관련 전문조사에서 문항의 표현방식과 척도를 유지하면서 반복 조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일반인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방법론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통일항목 관련 조사의 변화

이 절에서는 통일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통일에 관한 일반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의 경향을 살펴본다.

1. 통일의 시기와 가능성

통일에 관한 각종 사회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항은 통일의 시기 및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다. 신문사 및 각종 언론기관에서는 창간기념일 혹은 신년호, 특집호 등을 마련할 때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 직접 다룬 자료는 아니지만 1984년 동아일보가 조사해서 보도한 기사를 보면 “장차 우리나라의 통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언제쯤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이내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다시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선택지는 (1) 10년 이내, (2) 20년 이내, (3) 그 이상 등의 세 범주로 되어 있다. 동아일보가 조사를 해서 보도한 1984년 당시에 통일의 시기에 대한 예상의 시간개념이 10년, 20년 및 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1986, 1987)와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1989)에서 행한 조사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은 후 응답의 선택지가 (1) 10년 이내, (2) 25년 이내, (3) 50년 이내, (4) 50년 이후, (5) 불가능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1984년 동아일보의 조사에서는 통일의 시기를 10년, 20년,

20년 이상으로 물어 비교적 단기간 내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는 반면 1980년 후반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회조사의 하나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 항목에서는 통일의 시기를 10년/25년/50년 및 불가능하다라는 선택지를 집어넣어 통일의 시기 및 가능성에 대한 일반인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86년에는 9.4%였는데 1988년에 16.8%, 1989년에 20.7%로 증가하고 있다. 25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86년에 20.1%, 1988년에는 29.7%, 1989년에는 30.3%로 증가한다. 반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86년에는 39.9%나 차지하였지만 올림픽이 열렸던 해인 1988년에는 25.3%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1989년에는 19.5%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1980년대 후반의 몇 년 사이에 통일의 시기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통일관련 조사에서 통일시기에 관한 조사의 특성의 하나는 통일의 가능성을 1970년대와 비교해서 물어보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에 비해 통일의 전망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는 문항인데 1980년대 후반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귀하는 현재의 통일 가능성이 1970년대에 비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1988 ;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89)라고 묻고 (1) 커졌다, (2) 줄어들었다, (3) 마찬가지로 등의 응답지를 제공하여 통일의 시기를 1970년대와 비교하여 가능성의 측면에서 확인해보고 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각종 사회조사나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의 시기를 물어보는 문항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응답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기는 최대 30년 이상으로 작성되어 있다(민족통일연구원 조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조사).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중앙일보의 조사에서는 20년을 기준

으로 20년 이내, 2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역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택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때로는 통일이 멀리 않아 이루어질 듯이 보이며 흡수통일 논쟁이 일기도 하지만, 2000년대에 실시되고 있는 통일시기에 관한 조사에서도 여전히 통일은 멀리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듯 통일시기가 30년 이상 및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설문항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통일의 시기에 관해서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의 설문항도 있지만 가장 적당한 통일의 시기를 물어보아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통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통일의 시기를 생각해보고 답변하기를 요구하는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1996년에 공보처는 “OO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통일의 시기는 다음 중 언제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1) 당장 통일이 되어야 한다, (2) 준비기간을 거쳐 5년 후쯤 되어야 한다, (3) 준비기간을 거쳐 10년 후쯤 되어야 한다, (4) 기타, (5)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등의 선택지를 두고 응답자의 능동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항상 반복되는 설문항도 있지만 시기별로 특수한 상황을 통일시기와 연결시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7)의 조사에서는 “귀하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인하여 통일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북한 군사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선언을 한 것이 통일의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2.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에 관련된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또 다른 설문항은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이다. 수많은 조사에서 과연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통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반인의 의식과 태도를 물어보는 조사가 계속 이어져왔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 각종 사회조사나 통일관련 전문조사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왔다: (1) 북한의 체제를 수용하더라도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 (2)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며 동질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3)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켜 통일하는 것이 좋다, (4) 현재의 분단상태도 괜찮다, (5) 관심이 없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1980년대 중반의 조사부터 2000년대 후반의 조사까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항목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하게 시계열적 분석이 힘들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조사 설문지의 2003년과 2004년의 선택지는 (1) 가능한 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통일보다 남북한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낫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현대사회연구소(1987)의 선택지는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로가 좋다, (4)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로 구성되어 의미는 약간 비슷하지만 표현과 척도가 다르게 되어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경우에는 (1)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2) 현재대로가 좋다, (3)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로 구성하여 기존의 조사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선택지를 사용하지만 기존 조사와 동일한 표현이 아니고 선택지의 순서

를 바꾸어서 역시 다른 조사 결과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고 있다.

선택지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관한 설문항의 선택지는 상호간에 명확하게 배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선택지와 “현재대로가 좋다”는 선택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호 배타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현재대로 남북이 분단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생각을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현재대로가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택지는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시계열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위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EAI와 한국일보 혹은 중앙일보가 2000년대 중반에 이용한 설문항은 선택지가 나름대로 상호 배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로 구성하려고 하였다(EAI와 한국일보 2002, 2003, 2004 ; EAI와 중앙일보 2005). 통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서 (1) 사회 경제적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꼭 해야 한다, (2) 여건을 보아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한다, (3) 사회 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 (4)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는 선택지를 통해 통일의 당위성 혹은 원하는 시기를 측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대리서치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에 걸친 조사에서 이용한 항목은 이와 다른 선택지를 사용하고 있다. “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물은 후 선택지로는 (1) 반드시 통일, (2) 가급적 통일, (3) 현재가 좋다, (4) 가급적 통일하지 말아야, (5) 결코 통일 안 됨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리커트 형식의 선택지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 선택지를 보다

명확히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택지의 표현은 잘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도 통일관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은 후 (1) 매우 필요, (2) 다소 필요, (3)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 없다, (5) 전혀 필요 없다 등 리커트 척도인 5점 척도로 답하게 하는 문항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측정해 오고 있다.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경우 2003, 2006, 2007, 2008, 2009년의 조사에서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동일한 항목을 이와 같은 척도로 물어보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7년 통일의식조사부터 지금까지 통일의 필요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물어보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과는 달리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으로 역시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조사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5년 및 이후의 조사에서는 “선생님께서는 통일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1) 매우 중요, (2) 다소 중요, (3) 보통, (4) 별로 중요하지 않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서 통일의 중요성을 조사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널리 사용되어 온 통일의 당위성 혹은 필요성에 관한 문항의 또 다른 예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고르게 한 설문항이다. “귀하는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해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 후 응답자들에게 고르게 하는 조사가 오랜 기간동안 여러 조사에서 반복되었다. 민족통일연구원(1994),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01), 통일연구원(2003, 2005, 2008, 2009),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1996), 공보처(1996), 서울대 통일연

구소(2007) 등의 조사에서 이런 문항을 통해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단일민족 재결합/ 이산가족 고통해소/ 경제발전/ 전쟁발생방지/ 북한주민 삶 개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 증대. 그러나 이 이유가 모든 조사에 동일하게 쓰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마지막 선택지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 증대라는 선택지가 모든 조사에서 쓰이지 않고 시기별로 조사기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용되었다.

위와 같이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제시되는 첫 번째 선택지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선택지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선택지를 넣은 설문항에 대해서 거의 모든 조사에서 나타나는 응답의 경향은 응답자의 50% 전후로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족통일연구원의 1994년 조사에서는 “단일민족 재결합”이라는 선택지를 응답자의 59%가 골랐다. 반면에 2010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3%를 차지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통일의 당위성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다.

3. 통일 후의 변화

통일에 관한 조사에서 최근에 두드러지는 경향은 통일 후의 사회모습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점이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는 통일지상주의적 접근을 했다면 2000년대의 조사에는 과연 통일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보다 현실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통일연구원(2005, 2008, 2009)의 조사에서는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인지 분리해서 물어보고 있다. “귀하는 통일이 남한에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생각해보도록 했고,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설문항을 받아들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시행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도 역시 통일이 남한 사회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두 조사를 통해 2000년 후반에는 통일관련 조사에서 통일이 현실적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 얼마나 혹은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우선 총괄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괄적인 접근 이후 민족통일연구원이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서울대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통일이 된 후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반면에 민족통일연구원(1994, 2003, 2005)의 조사에서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빈부격차, 물가, 실업문제, 지역격차, 주택문제, 법치문제, 가치관혼란 등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통일 후에 사회적인 측면의 변화에서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를 조사한 반면 통일평화연구소는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선택지는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선택지를 제시하여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의 선결조건인지, 아니면 남한의 민주주의가 통일의 선결조건 인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민주주의와 통일과의 관계를 물어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 실현의 선결조건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통일 후의 사회에 관한 의식과 태도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통일과 남북한의 민주주의를 연결하여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통일 후의 변화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항목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공보처나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통일 후 겪게 될 어려움이나 부담을 2개까지 고르라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공보처 1996 ; EAI와 중앙일보 2002, 2005). 경제적 부담, 가치관 차이, 정치적 혼란, 남북한 빈부격차의 심화, 생활방식의 차이, 언어생활의 차이 등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이 가운데 통일이 되면 당면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을 두 개 고르라는 방식으로 설문항을 제시하여 통일이 되면 개선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조사하는 것도 새로운 경향이다.

통일 후의 변화는 단지 사회문제 개선이나 혹은 여러 측면의 어려움의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았다. 민족통일연구원(2005)이나 중앙일보(2005)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지, 또는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지 등을 조사하여 국제정치적인 측면 혹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통일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V. 북한항목 관련 조사의 변화

이 절에서는 통일조사에서 북한에 관한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각종 조사에서는 어떻게 조사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1. 북한에 대한 인식

이미 통일 관련 조사에서 반복조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동일한 항목과 동일한 선택지를 이용한 예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및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의 설문항과 그 결과를 위에서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두 조사에서는 북한을 적대, 경계, 경쟁, 협력, 지원 등의 상대로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항을 사용한 조사는 200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두 조사에 국한하지 않는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1996, 2003), 통일연구원(1994, 1995, 1998, 1999, 2003, 2005, 2009), 광복60주년기념조사(2004), 민족통일연구원(1994, 1995) 등의 조사에서 비슷한 문항과 선택지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왔다. 이 문항은 한국의 일반인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 인식되어 모든 통일 관련 조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질문되었다.

북한을 적대, 경계, 경쟁, 협력, 지원 대상 등으로 묻지 않고 변형된 형태로 물어 북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EAI와 중앙일보(2005)의 조사에서는 평소에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선택지로 (1) 우리, (2) 형제, (3) 이웃, (4) 남, (5) 적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두 개를 고르도록 요구하였다. 이 문항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파악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형제”는 “우리”보다 약간 사회적 거리가 먼 관계로 설정하였다.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in-group)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를 상정하고, “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라는 한 울타리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이고,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라고 간주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 “형제”가 아니면 “남”이 되는데, “남”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을 그 다음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 범주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 “남”이고, 그 다음은 적대적인 관계인 “적”의 범주가 설정되었다. 이 항목은 사회적 거리라는 사회학적 개념을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 보려고 한 흥미로운 시도이다. 사회적 거리의 범주가 약간 어색하지만 통일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파악해보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4~2009)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조사에서는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후 선택지로 (1) 포용하고 함께 살 동포, (2) 적이자 동포, (3) 대치하고 있는 적, (4) 무관심한 대상이라는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선택지도 약간 사회적 거리 개념이 들어있지만 꼭 사회적 거리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동포와 적이라는 범주를 설정한 후 북한을 우리의 동포와 적으로 대립을 시킨 후 다른 두 개의 범주로 적이자 동포, 무관심한 대상이라는 두 범주를 새로 설정하였다. 모순적이지만 적이면서 동포라는 존재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항목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사에 담겨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지금은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있지만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에 북한정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이지가 중요

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었다. 남북대화사무국(1988)에서 조사한 통일조사에서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OO 님께서는 어느 쪽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십니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1) 인정해야 한다, (2) 인정해서는 안 된다, (3) 어느 쪽도 아니다, (4) 모르겠다라는 선택지 가운데 고르게 하였다.

1994년에 문화방송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문화방송의 조사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후 (1) 우리가 먼저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 (2) 북한이 우리를 인정할 때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 (3) 분단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4) 남한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선택지를 제시하여 남한과 북한에 있는 국가의 합법성,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먼저 국가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 신경전에 가까운 문항을 통해 일반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조사로서 남과 북이 상대방을 정당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각각 정통성 있고 합법적인 국가로서 주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인정한다면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인정해야 하는지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하나의 설문항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190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통일연구원의 조사(1998, 1999, 2003)에서는 “귀하는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역시 북한을 남한과 독립적인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한에 세워진 정부 혹은 국가만이 한

반도를 대표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일반인의 태도를 물어보고 있다.

이미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인 2005년에 EAI와 중앙일보의 조사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이다”라는 지문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선택지 가운데서 고르게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가깝게 혹은 멀게 느끼는지 등의 사회적 거리 개념에서부터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국가로 인식하느냐는 차원까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 적대, 경계, 경쟁, 협력, 지원 대상으로 북한을 파악하는 문항은 오랜 기간 동안 되풀이해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동포와 적 등의 구분이나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파악하는 문제는 최근에는 더 이상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는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2. 북한의 변화에 관한 인식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에서 또 다른 관심은 일반인이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이다. 중국이 개방 개혁 정책을 펼쳐 자본주의적 성격의 경제정책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지켜보았다. 남한은 북한이 폐쇄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개방, 개혁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외부에 대해 철저히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 사회도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북한에서도 누군가는 해외 사회를 경험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 사회 및 세계 사회의 변화에도 접하며 그러한 사실은 다시 북한 사회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통한 외부세계와의 접촉, 여러 경로를 통한 남한사회, 남한의 대중문화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 사회도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다.

남한의 일반인은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존의 통일관련 조사에서 파악해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각종 통일관련 조사(민족통일연구원(1993, 1994, 1995), 통일연구원(1998, 1999, 200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2007, 2008, 2009, 2010))에서는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설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에 대해서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고 있지 않다, (4) 거의 변하고 있지 않다 등과 같은 리커트 척도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고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의 흐르면서 남쪽의 주민들은 북한 사회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0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14.8%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화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5.1%를 차지하여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44.9%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 1994년 민족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었는데, 16년이 지난 2010년 현재 북한의 변화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인이 훨씬 더 많아졌음을 이 문항을 이용한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기존 통일 관련 조사는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파악해 왔다. 1993년과 1994년에 민족통일연구원의 통일 조사에서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남한 주민들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선택지로는 (1)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2) 경제적 만족, (3) 이념적 통일성(주체사상), (4)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 (5)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 등이 제시되었다.

1993년과 1994년 김일성이 생존했던 시절에 실시된 이 조사에서 가장 응답율이 높았던 선택지는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였다. 그 다음이 이념적 통일성이나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이었다. 감시와 억압 그리고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는 대동소이한 응답이다. 따라서 그 당시 남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가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감시와 통제, 억압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히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93년과 1994년의 민족통일연구원의 통일 조사에서는 북한이 변했다면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되었을 지를 물어보고 있다. “북한이 변했다면 귀하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1) 사회주의권의 몰락, (2) 북한에 대한 국제적 개방압력, (3) 북한의 경제난, (4) 북한주민들의 불만, (5) 남한의 대북정책의 변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을 이끌어 낸 항목은 북한의 경제난 때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 사회가 결국 변하게 만들었다고 한국인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 질문과 선택지는 그 당시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는 시대상을 반영한 항목을 집어넣은 조사의 유형에 속한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존의 통일조사에서는 북한의 변화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의 통일 관련 조사에서 꾸준히 채택되고 있는 설문항은 “최근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이고 1990년 중반 이후에는 북한의 변화의 방향에 관해서는 더 이상 조사되지 않고 있다.

3.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및 북핵 관련 항목

1990년대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한에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 햇볕정책을 실시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펼쳐졌었다. 2000년과 2007년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선언을 하는 등 비록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지만 통일로 가기 전 단계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터져 나오는 북핵 문제나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다시 한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느끼게 된다.⁷⁾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북핵위기가 국제 안보의 쟁점이 될 때도 역시 남북의 분단 현실과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북핵문제가 불거질 때 국제 사회는 충격에 빠지지만 오랜 기간동안 분단상황에 길들여져 온 남한의 주민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7) 북한이 1993년에 핵비확산체제에서 탈퇴함으로써 시작된 북핵위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황지환,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 북한과 이란,” 백진현 편,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2010).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북핵위협에 따른 설문항이 북한 및 통일관련 조사에서 199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남한과 북한이 긴장 상태에 빠질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통일 관련 조사에서는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및 북핵 관련 조사가 계속 되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햇볕정책을 비롯하여 남한과 북한이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 시절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였고 통일 관련 조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해왔다. 현 정권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핵위기가 계속되며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위협과 북핵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⁸⁾

민족통일연구원(1993, 1995), 통일연구원(1998, 1999, 2003, 20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2), 중앙일보(1995,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민안보의식조사(1992, 1996, 1997, 1999), 서울대 통일의식조사(2007, 2008, 2009, 2010) 등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통일 관련 조사에서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해왔다. “귀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OO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OO 님께서는 현재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설문을 통해 각종 통일 관련 조사는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성을 측정해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8) 정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에 대한 정책, 통일에 관한 정책의 변화는 안보를 둘러싸고 국내외 학자의 뜨거운 관심사가 된다. 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수정되고 핵위기가 다시 나타나면서 동북아의 안보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Sachio Nakato, “South Korea’s Paradigm Shift in North Korean Policy and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7, no.1 (2008).

실시된 20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5.7%, 약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 별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2010년 현재 한국인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핵실험 및 천안함 사건이 겹치면서 북한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증가한 경향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은 남북관계가 평화모드인지 아니면 경색국면인지에 따라서, 또 북한의 도발 혹은 핵실험 여부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사 이전 1~2년간 남북 간에 큰 사건이 없으면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은 약해진 것으로 인식되기 쉽고, 최근의 천안함 사건, 핵실험 등이 일어나면 북한의 위협이 피부에 와닿으면서 다시 높은 경계심을 드러내게 된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 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시기별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관련 조사에서는 항상 시기별 요인을 설문항에 반영하여 조사하고 있다.

1993년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에 핵시설이 있음을 탐지하고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는 제1차 북핵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후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대신 북한은 핵개발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1차 핵위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2002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다시 포착되면서 북한의 2차 핵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욕망은 일찍이 발견되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위기를 초래할 때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수로건설, 육자회담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든 남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핵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통일에 관한 각종 조사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남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해왔다.

북핵위기가 일찍이 1990년대부터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관련된 조사는 주로 2000년대 통일관련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연구원(20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2007, 2008, 2009, 2010) 등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지 조사해 왔다. 2010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매우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5을 넘는 22.4%였고, 약간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남한의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조사들과는 별도로 2004년과 2005년에 EAI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핵무기 보유에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대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2010년의 조사 결과는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0%, 다소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전체 응답자의 83%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0년 11월 북한은 핵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온 것으로 드

러나고 있다.⁹⁾

북한의 핵개발, 핵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북핵에 관한 통일관련조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북한의 핵위협에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북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북핵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자세히 파악되고 있다. 북핵문제가 지난 20여 년 가까이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주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관한 문제와 함께 북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 정도를 필두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VI. 이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각종 사회조사에서 다루어진 통일 및 북한에 관한 항목과 통일의식조사 등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기획된 소위 통일의식조사 가운데 북한과 통일에 관한 항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쟁점들을 살펴 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그동안 수집된 90개의 조사자료가 검토되었다. 물론 90개의 자료도 많은 자료이지만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것보다 훨씬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첫째,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표본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했고, 둘째, 초중고대 혹은 청소년 등 특정한 연령계층이나 서울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자료는 분석대상에

⁹⁾ 『조선일보』, 2010년 11월 22일.

서 제외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관련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긍정적인 측면은 동일한 항목을 반복하는 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단상태에서 수많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의식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를 기획하는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참고한다고 해도 시계열적 분석과 비교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당연한 문제의식을 조사연구에 담기 위해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문항을 변형시켜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무수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왔지만 정작 어떤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장기간에 걸쳐 비교할 수 있는 문항과 조사 결과를 찾기 힘들다. 그 이유는 동일한 문항을 반복조사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몇 조사에서 문항의 표현을 전혀 바꾸지 않고, 선택지나 척도도 동일한 형태로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매해 혹은 정기적으로 조사할 때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하게도 중앙일보의 경우 창간기념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창간기념 여론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항목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별로 변화를 주지 않고 동일한 문항을 반복해서 조사해 왔고, 그 결과 10년 이상의 시계열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미국의 종합사회조사를 모형으로 탄생한 한국의 종합사회조사도 비록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문항의 수는 적지만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서 표현을 바꾸지 않고 매해 동일한 항목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다.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2010년까지 조사의 역사가 4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7년에 설문항이 처음 설계되고 그 이후 조사에서 약간의 변화 및 문항의 변경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동일한 항목의 반복조사를 목표로 하면서 수

많은 문항의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의 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긍정적인 측면은 동일항목을 반복조사하는 통일 관련 조사가 증가하여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남한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각종 통일 관련 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의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 항목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동안 방법론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측면은 어떤 것인지 등을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주제에 걸친 조사의 동향과 실태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의식의 조사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해도 그 내부에 하위범주가 여럿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향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해 설문항의 변화를 분석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여 좀 더 넓은 주제에 걸친 통일 관련 조사의 동향과 실태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접수: 2010년 11월 22일 / 수정: 2010년 12월 4일 / 게재확정: 2010년 12월 6일

【참고문헌】

- 김귀옥. “남북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전성우 편.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그 현황과 전망』. 서울: 금왕출판사, 2001.
- 김현옥. “통일의 의미와 통일의식의 내적구조.” 전성우 편.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그 현황과 전망』. 서울: 금왕출판사, 2001.
- 이우영.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회의 2010년 9월 9~10일.
- 황지환.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 북한과 이란.” 백진현 편.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2010.
- Kim, Yongho. “Inconsistency or Flexibility? The Kim Young Sam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Its Domestic Vari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8 (1999).
- Levin, Norman and Han, Yong-Sup. *The Shape of Korea’s Future: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Long-Term Security Issues*, RAND (1999).
- Nakato, Sachio. “South Korea’s Paradigm Shift in North Korean Policy and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7, No.1 (2008).
- 『조선일보』, 2010년 11월 22일.

Abstract

Trends and Current Situation of Social Surveys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Eun, Ki-soo(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ends of questions of the issu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 general social surveys which covers North Korea and unifications issues and of so called "Attitude Surveys toward Unification" since late 1980s. 90 social surveys and survey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re utilized for this study.

It is hard to see how attitudes toward various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have changed among Koreans because most surveys have adopted their own questions and scales when they measure various attitudes although they seem to repeat very similar questions from prior research. Repeat questions in following surveys make researcher see how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unification have changed across periods, and several recent survey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mplement repeat questions and scales to make it possible to trace time-series changes in attitudes.

This study examines how questions and scales have changed in the attitudes toward necessity of unification, timing of unification, and possible changes after unification in the realm of unification.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tterns of questions o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ssibility of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Keywords: Trends of unification survey, attitude toward North Korea, attitude toward unification, repeated survey

은기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거쳐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 조교수 및 부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학전공 부교수로 있다. 연구관심은 근대화와 가치관변동, 가족, 인구, 종교 등이며, 최근에는 생활시간자료(time-diary)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변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김화순(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지각하는 차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학력집단을 대상으로 직업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업하향화(downward employment) 현상과 직업계층(occupational strata)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인적자본이론의 “인적자본의 이전장벽(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3개의 연구문제와 기타 2문제, 총 5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고학력 연구참가자 10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0명의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들 중 8명이 취업과 직장, 고용지원센터 등 일자리 영역에서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배제하고 무시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고학력집단은 북한에서 남한사회로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직업계층이 하향화하였다고 인지하였다(평균 계층점수 6.3점→2.8점). 특히 교사집단이 인지하는 하락폭은 매우 컸다(8점→1.3점).

셋째, 교사집단은 전직으로 복귀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 외의 다른 직업 종사자들은 특별히 전직(former job)으로 복귀하거나 연계될 것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한의 직업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적자본이 형성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결과에 기초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을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직업이동에 따른 ‘직업계층의 지위하락’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중대성

및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이다. 북한의 각종 직군별 직업이동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재확인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직업계층, 인적자본의 이전장벽, 직업이향화

I.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차별하는가? 지난 수년간 시행된 각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당수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고 차별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2010년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영국이나 노르웨이 당국이 위장 망명으로 적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만도 수십 명에 달한다.²⁾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들 중 난민신청을 통해 재이주를 시

-
- 1) 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윤여상 외,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사) 북한인권정보센터, 2005); 윤인진 외, 「새터민 여성·청년 실태조사 보고서」((사) 북한인권정보센터, 2005); 박순성 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009); 장명선·이애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방안 연구」(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09).
 - 2)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으로의 '위장 망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외교통상으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지난해 영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 위장 망명자 20여 명을 적발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또한 영국은 2008년 말까지 탈북자 망명을 수용하다 지난해부터는 단 1명의 망명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역시 2008년 11월 북한 출신 망명신청자들이 집단으로 머물고 있던 난민수용소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한국 여권 소지자 33명과 주민등록 소지자 22명을 적발했다. 홍 의원 측은 노르웨이 정부가 이들 중 20명에게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고 위장 망명자를 1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경우 2004년에는 20명, 2005년 30명, 2006년 45명,

도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 정착과정에서의 차별을 망명사유로서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북한이탈주민사회 일반에서는 한국사회가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믿음이 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의 실체는 분명치 않다. 그간 정부는 정착금을 비롯하여 대학 특례입학과 주거지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배려를 해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대내외에 천명해왔으며 한편 지나친 배려에 대한 국내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며, 한국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차별 때문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의 실체를 명료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가리킨다. 차별의 개념을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논할 수 있지만, 노동경제학에서 일컫는 ‘차별’은 만약 동일한 생산적 특성을 가진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때문에 상이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가리키며, 노동시장의 차별은 다시 임금차별과 직종차별로 나뉜다. 임금차별은 고용주들은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조건 아래 일하고 있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을 때, 이를 임금차별이라고 일컫는다. 직종차별은 예컨대 남성과 똑같은 교육수준과 생산잠재

2007년 410명, 2008년 19명, 지난해 25명이었다. 노르웨이는 2004년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05년 9명, 2006년 26명, 2007년 90명, 2008년 130명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탈북자의 위장 망명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위장 망명자 문제가 외교 문제로 커지지 않도록 일정기간 제재를 유예해줘 귀국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신문』, 2010년 9월 15일.

력을 가진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저임금직종 혹은 책임이 낮은 일자리로 밀려나는 것을 가리킨다.³⁾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의 개념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지하는 차별의 양상이나 개념도 내부의 계층이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집단에 있어서는 그들 집단이 지각하는 차별은 북한에서의 인적자본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장벽에 부딪히고, 북한의 학력이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는데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차별의 내용적 실체는 북한에서 남한이라는 낯선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자본의 이적장벽”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가정에 따라 차별의 실체를 밝히고자 시도한다.

북한에서의 전문직에 종사했던 고학력집단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⁴⁾ 여의치 않다. 그들은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수없는 직업이동을 하면서 직업전환과 변동을 경험하고 있고 북한에서 종사하던 직업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이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기에는 여러 장애와 어려움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연구직, 한의사 혹은 약사를

3) Ronald G. Ehrenberg and Robert 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Boston: Addison-Wesley, 2003).

4)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에는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복잡한 행정구조로 인해 북한의 의료인 자격 인정이나 국시 응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의사나 약사 등이 국가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일부 자격제도의 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총 8명의 북한 출신 의사들이 의사자격시험을 통해서 의사의 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였다 할지라도 남한사회에 다시 연구직이나 한의사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북한에서의 인적자본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차별의 문제를 북한 “인적자본의 이전장벽(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이란 명제를 갖고 사례에 접근한다. 이전장벽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과거 북한에서 누린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지 않는 하위 직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면서 계층적 지위의 하향을 경험한다. 직업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며 자아실현의 도구이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한 반영이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변동이 가져온 주관적 의식상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양적조사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직업변동과 그로 인한 직업지위의 변동으로 인한 내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미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간의 차별논의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다루다 보니, 이를 계층별, 성별로 세분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간과해온 것으로 보인다. 질적 연구는 보다 미시적인 계층별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의 존재를 밝히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한 직업계층(occupational strata)의 하락을 인지하는지, 북한이탈주민이 말하는 차별이 이러한 직업계층의 하향화 현상과 연관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했던 계층 즉 북한에서 4년제 대졸 이상을 졸업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출신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다.

II. 선행 연구

1990년대 후반 이래 10여 년 동안 북한이주민 관련연구는 주로 적응론의 패러다임 아래 적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들을 다루어 왔다. 특히 경제활동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적응의 관점 아래 설문을 통해 취업률, 실업률, 고용형태, 직업형태에 관한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⁵⁾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실업과 저소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이 낮고 특정직종이나 저임금직종에 이들의 직업이 쏠려 있어 근로빈곤화 경향이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구직과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유로서 직업능력의 부족, 건강의 취약성 등 여러 요인을 지적하였지만 대다수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고있는 요인 중 하나는 “남한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이다.⁶⁾

실태조사에서는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채용과 구직활동,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실태보고서로서 윤여상 외(2005)와 윤인진 외(2006)의 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 때문(34.1%, 1위)”, 북에서 배운 것이 남한사회에서 별 소용이 없기 때문(3위, 28.5%)이라고 응답한다.⁷⁾ 윤인진 외(2006)의 400명 실태조사 결과도 구

5)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3); 윤여상 외,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연구」; 윤인진 외, 「새터민 여성·청년 실태조사 보고서」.

6) 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윤여상 외, 위의 책; 윤인진 외, 위의 책.

7) 윤여상 외,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연구」, p. 62.

직활동에서의 애로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27.7%)를 1위로 꼽고 있다. 서울시 탈북여성 실태조사(장명선, 이해란, 2009)에서도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차별을 가장 강하게 인지한 영역은 주로 직장에서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논의는 주로 인권의 문제로서 북한인권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⁸⁾ 박순성 외(2009)는 탈북여성들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도 극심한 인권의 침해를 받았지만,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인권적인 제약을 겪었으며 남한사람들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차별이나 편견의 개념이 보다 명료화되고, 학술적 논의로 발전하여 실체가 명료화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력이나 노동생산성은 임금과 지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개인이 지닌 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해 낮은 임금과 직업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차별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새로운 도착지에 가게 되면 이전장벽에 의해 더 낮은 지위와 임금을 경험한다. 이주전 학력이 정착지에서의 직업에 적합하지, 이민자가 새로운 곳에서 취업할 때에는 과소학력(undereducation)인지 과잉학력(overeducation)인지의 문제는 인적자본 이론을 이주민 노동시장에 적용했을 때 빈번히 탐구되는 주요한 연구 주제이다.⁹⁾

김화순(2009)은 인적자본이론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한국사회에서 무용화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272명 집단의 사례를 수집하여 이들이 북한에서 보유했던 북한인적자본이 남한사회의 일자리 즉 취업이나 소득에 어떤 영향을

8) 박순성 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9) Barry Chiswick and Paul Miller, *The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Immigrants Human Capital Skills* (IZA DP No.2670, 2007).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대학의 효과는 물론 남한대학의 효과도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북한경력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학력이나 경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들의 경력이나 학력이 한국사회에서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의 특수성 때문인가? 북한의 학력이나 경력이 소용없다면 상대적으로 고학력 전문직 출신들은 한국사회에 온 이후 직업계층의 하향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직업계층의 하향화는 사회적 불만이나 차별의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고지영(2010)의 최근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계층적 변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6월에 경기도 거주 일반 북한이탈주민 400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대한 점수를 평균 2.7점(만점 10점)으로 평가하였다. 경기도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조사대상자들은 하향/수평이동/상향이동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는데, 하향이동집단(62.8%)은 3.8점이 하락하였고, 수평집단(20.5%)은 변동이 없으며, 하향집단(16.7%)은 2.8점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반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하락하고 있다고 지각했음을 보여준다. 고학력자 집단의 계층의식은 하향이동 집단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 조사를 참조하여 고학력자 집단의 계층의식의 하향 변동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및 자료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고학력자 집단이 인지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에 대해 북한에서 인적자본을 형성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일종의 이전장벽-북한 학력과 경력의 불인정 혹은 무용화로 인한 직업전환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한다. 연구문제 3, 4, 5는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 입각한 명제이다.

- 연구문제 1. 고학력자 연구참가 집단은 북한에서 어떤 출신성분과 계층적 지위를 보유한 사람들인가? 부모의 배경은?
- 연구문제 2. 고학력자 집단이 생각하는 차별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정의, 양상)
- 연구문제 3. 연구참가자는 취업이나 직업생활의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장벽)
- 연구문제 4. 연구참가자들은 남한에 온 이후 직업이동과정에서 정착 초기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나은 직업으로 상향했는가?
- 연구문제 5. 북한의 상층에 속할수록 남한사회에서 본인이 속한 계층지위의 하락폭이 큰가? 또한 일반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비교 시 하락폭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고학력전문직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종사하던 직업과 남한사회에서 직업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직업의식 및 직업지위에 대한 인식변화를 조사하기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이라는 관점에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차별과 계층의식을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추출해내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유형 중의 하나이다.¹⁰⁾

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또는 ‘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연구자가 사건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실생활에서 동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주로 다룰 때 선호되는 연구전략이다. 사례연구의 유형에는 설명적(explanatory) 사례연구, 탐색적(exploratory) 사례연구, 기술적(descriptive) 사례연구가 있다.¹¹⁾ 본 연구는 사례연구 중에서도 인적자본이론의 가정들이 어떻게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탐색적 연구 및 설명적 연구를 지향한다. Yin(2003)은 사례연구의 역할이 단지 양적연구의 전단계로서 탐색적 연구로 가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례연구는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일반화를 보조하는 역할로서가 아니라 이론적 일반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¹²⁾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환과정에서 인적자본의 이론적 가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각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계층적 위치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핀다. 이들 사례들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중요한 인적자본의 하나

¹⁰⁾ John W. Creswell, 조홍식 외 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2005).

¹¹⁾ Robert K. Yin,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New York: Sage Publication, 2003).

¹²⁾ 다중사례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반복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 직장경험을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자료의 수집

1) 자료 수집을 위한 질의

위의 연구문제들은 아래와 같은 개방형 질의로 만든 후 아래의 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1) 인적특성

가. 연구참가자들은 어떤 인적특성을 지닌 사람들인가?(성, 연령, 거주 지역,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출신성분, 직업, 계층, 탈북동기(배출요인), 입국동기(유입요인)

(2) 직업이동

나. 연구참가자들은 북한에서 제3국, 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업전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일직업, 유사직업, 전혀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다. 직업이동과정에서 직업계층의 하향화를 경험하는가?
이러한 하향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3) 계층의식의 변화

라. 북한에서의 계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남한에서의 자신의 계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10점 만점 척도)

“북한남한사회의 최하층을 0으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할 때 북한 [남한]에서 귀하는 어디에 속했다고(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 연구참가자의 계층적 지위 및 탈북유형추출

		질의내용	도출 개념
소속한 계층적 지위		- 북한에서의 계층(핵심, 동요, 적대)이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 북한에 있을 당시 계층적 변동을 경험했는가?	성분 계층변동의 계기
가족사향		- 고향, 부모님의 직업과 교육수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부모와의 애착관계, 질병 및 장애, 중독증	출신성분 부모교육수준
직업력	공식	- 본인의 최종학력, 직업기술, 자격, 첫 직장, 직업력(歷, jobhistory)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누구의 소개로 시작해서, 어떤 임금과 조건으로 일하다가 어떤 이유로 그만두고, 다시 어떤 종류의 일을 어떤 경위로 하게 되었는지, 그 일을 얼마동안 했는지 등	경력
	비공식	- 시장화의 진전과 비공식경제활동 - 북한에서의 공식직업생활의 충실도 및 직장 가동상황	비공식경제활동여부
탈북동기 및 유입동기		- 탈북하는 이동과정과 동기 등을 통해 탈북요인과 제3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가게 된 유입요인을 파악	
입국유형		- 정치적 유형, 경제적 유형, 가족연계형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밝힘	

2) 연구참가자의 인적 특성

연구참가 집단으로 북한주민의 10%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상위 5%에 해당하는 4년제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을 선정하였다. 〈표 2〉는 연구참가자들의 성, 연령, 입국년도 및 북한에서의 출신성분과 가계, 탈북 동기, 현재의 직업을 기록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참가 고학력자 집단의 인적특성

사례ID	입국 년도 (연령)	성	출신성분	가족 가계직업	탈북동기	현 직업
사례1	2008.11 (39)	여성	핵심계층	교육자집안 사별	사별로 어려움 중국친척 유혹 한국CD	수학교사
사례2	2001.7 (40)	남성	동요계층 (중국태생)	직장설계	중국밀수 친척권유	학생 (박사과정)
사례3	2006 (26)	남성	동요계층 (북송재일 교포)	부모이혼 운전수	밀수 한국CD, 라디오	구직자 (교사지망)
사례4	2002 (43)	남성	동요계층 (중국출신, 항상 불안)	지방공업총국 지도원	성분으로 인한 차별대우와 경 제적 동기	공단직원
사례5	2003.12 (50)	여성	동요계층 (중국출신)	공장부지배인/ 공장장	남편밀수로 인 한 보위부의 감시	민간단체 간부
사례6	04.11 (57)	남성	적대계층 (부농 출신)	일본유학 대졸(부), 인텔리	중국 친척방문 · 북한사회 환 멸	프리랜서 작가
사례7	2005.6 (46)	여성	핵심계층 (호의호식)	김일성대(부) 김형직사대부(모)	남편의 탈북으 로 가족권유	구직하면서 아르바이트
사례8	2007.2 (40)	여성	핵심계층	기계설계 3급기 사(부) 주부(모)	동료의 권유	사회적 기업사원
사례9	2007.8 (44)	남성	핵심계층 (해외연고자)	대학교원(부) 주부(모)	국내에 있으면 안 되는 사정	미취업 (질병)
사례10	2003.1 (34)	남성	동요계층 (할아버지 행방불명)	행정간부(부), 55세 입당 방직(모)	라디오 · 드라 마 청취	탈북자단체 인원

IV. 연구 결과

1. 학력과 성분

연구참가자들의 입국연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연구참가자의 성분은 동요계층 5명, 핵심계층 4명, 적대계층 1명이다.

가. 연구참가자들은 어떤 인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인가?(성, 연령, 거주지역,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출신성분, 직업, 계층, 탈북동기(배출요인), 입국동기(유입요인)

고학력자 집단에게 “북한남한사회의 최하층을 0으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할 때 북한남한에서 귀하는 어디에 속했다고(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통해 계층적 위치를 측정된 결과 10점 만점에 6.3점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수는 9점이었고, 최하 점수는 4점으로서 고학력자 집단의 북한에서의 계층지위에 대한 자기평가는 높은 편이다.¹³⁾ 고학력자 집단 중에는 동요계층이나 핵심계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대계층도 발견되었다. <사례 2>는 부친이 중국태생의 적대계층 출신

13) 고지영 외(2010)의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남한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분석한 조사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고지영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경기도(2010)의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남한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 동일한 설문에서 남한 남성의 평균 계층의식은 4.1점, 여성은 4.0점, 전체 4.0점으로 나타난다. 이에 단순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평가한 북한에서의 사회계층적 지위점수 6.3은 매우 높은 것이다.

이어서 항상 열등의식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고등중학교 졸업 후 탄광에 배치되었으나 탄광노동에 3년 동안 열심히 종사하며 당의 신뢰를 받고,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들 사례들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학력자 집단 10개의 사례 중에 5개의 사례가 동요계층 출신이었는데, 집안이 중국 출신이거나 북송교포여서 북한에서 차별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해 항상 불안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었다.

아버지가 중국 출신이었고 0000대학을 졸업하고 00공업총국 지도원으로 사업하셨는데, 아버지가 중국 출신으로 성분에서 몇몇치 못한 것으로 늘 성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중국 출신으로 차별대우를 받아 승진이나 자녀 대학추천서도 고배를 겪어야 했다. (사례 4. 남, 40대, 2002년 입국, 동요계층)

〈표 3〉 연구참가 고학력자 집단의 탈북동기와 이주유형

사례 ID	입국 년도	출신 지역	계층 점수	입국요인	탈북동기	이주유형
사례 1	2008.11 (02.8)	함북	유족 7	한국CD	사별로 어려움 중국친척 유혹	경제적 유형
사례 2	2001.7 (1999)	함북	중 5	-	중국밀수 친척권유	경제
사례 3	2006	양강	상 8	한국CD, 라디오	밀수	경제
사례 4	2002 (2001.10)	청진	중 6	경제적 동기	성분으로 인한 차 별대우	정치+경제
사례 5	2003.12 (2000.6)	함흥	중상 7	-	남편밀수로 인한 보위부의 감시	사건
사례 6	2004.11 (98.5)	청진	중상 6	중국을 6년간 떠돌다 입국	중국친척 방문: 북 한사회 환멸	경제
사례 7	2005.6 (05.05)	함흥	최상 9	한국직행 13일만에 도착	남편의 탈북으로 가족권유	정치적 사건

사례 8	2007.2 (06.7)	합북	하 4	브로커가 한국 루트로 직결	조국장래에 대한 회의/동료의 권유	경제
사례 9	2007.8 (2003.2)	함흥	중 5	기왕 떠난 거 한국에 가서 당 당히 살고파	국내에 있으면 안 되는 사정	사건
사례 10	2003.1 (99)	함흥	중상 6	탈북하면서 바 로 한국을 목표 로 함	라디오를 듣다가 단속에 걸림	정치적 사건

이들 고학력자 집단이 탈북하게 된 원인으로는 남편의 탈북, 라디오를 듣다 걸림, 보위부의 감시, 국내에 있으면 안 되는 개인적 사건 등이다. 탈북동기는 경제적 동기와 정치적 사건, 개인적 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례 7>은 북한 K명문대 출신의 부모 밑에서 핵심계층으로서 명문대를 나와 최상층의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탈북하는 바람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 가족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하게 된 경우였다.

2.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인지하는 차별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 집단이 인지하는 차별받는다고 보는 영역과 양상을 알기 위해 각 영역에서의 어려움과 장애에 대해 질의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관련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나. 고학력자 집단이 생각하는 차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연구문제 다. 취업이나 직업생활의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녹취록을 읽어서 차별의 내용으로 <표 4>와 같은 개념어를 추출하였다. 스트레스 1번, 갈등 1번, 편견 2번, 경쟁 2번, 북한 2번, 거부 3번, 배

제3번, 무시 3번, 부정적 인식 3번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한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배제와 무시, 부정적 인식과 같은 개념들이 각 3번씩 등장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스트레스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휘는 1번 등장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이 일자리 영역에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아예 끼워주지 않고 배제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사례에 나타난 차별을 상징하는 개념어

횟수	각 1번	각 2번	각 3번
추출된 개념어	스트레스, 갈등	편견, 북한, 거부, 경쟁	배제, 무시, 부정적 인식

본 연구에 참가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집단 10개의 사례 중 8개의 사례의 참가자들이 인지하는 차별은 아래와 같다.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차별받는다고 인지한 영역은 취업 시와 직장에서였고, 그 외의 곳으로는 한국사회 전반과 고용지원센터였다. 연구참가자 10개의 사례 중 8개의 사례가 차별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한 사례는 대답을 회피했고 한 사례는 차별받는다고 인지하지 않았다. 이 중 8개의 사례가 취업 시 차별받았다고 지목했고, 5개의 사례는 직장에서 자신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전반의 차별의식을 지목한 사람은 2개의 사례였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차별받았다고 지목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 관련 민간단체에서 차별받았다고 지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반면에,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선행연구에 나타난 고용지원센터를 차별을 받은 대상으로 지목한 사실은 흥미롭다. 이것은 고용지원센터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잘 활용하지는 않지만, 고용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차별받는다고 지각하기에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표 5〉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 집단이 인지하는 차별양상

사례ID	차별인지 영역	양상	대안	개념
사례 1	직장생활	한국인들의 편견 한국인들과의 갈등	시간의 경과 상호간 수용이 필요	편견, 갈등
사례 2	취업	탈북자의 신분 탈북자라고 알면 그 자 리에서 거절함	- 거부배제를 견디는 힘 - 한국사회를 수용	거부
	직장생활	인정과 아량이 없음 안정성 없고 스트레스 줌		스트레스
	사회전반	탈북자들을 거부 배제하 고 편견 가짐		거부, 배제, 편견
사례 3	취업	탈북자라는 부정적 인식	자신의 인내	부정적 인식
	사회전반	남만큼 사는 것이 조련 치 않다(힘들다). 북에서 는 이런 격정하며 살지 않았다.		경쟁
사례 4	취업	탈북자에 대한 거부, 배 제		거부, 배제
	직장	탈북자에 대한 무시의식 탈북자는 자신보다 못하 다는 인식		무시, 열등
사례 5	취업	북한에서 온 탈북자		북한
	고용 지원 센터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북 한인을 무시		무시
사례 6	취업	북한인/나이/현장직/전 문경험 없음	본인이 알아서 해야 자기개발해야	무시 북한
	직장	한국사람이 탈북자를 개 취급 보상해주지 않음		
	고용 지원 센터	직장신청했으나 상담해 주지 않음		
사례7	취업	사회와 국가의 냉대와 배 제 부정적 인식		부정, 배제, 국가와 사회 의 냉대

	직장생활	남한사람의 밥그릇 싸움		경쟁
사례8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음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음	경력 없으니 특별채용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음
사례9	취업	북한에 대한 인지도 탈북자에 대한 색안경	자기 노력	부정적 북한
사례10	취업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음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음

3. 북한에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회고

연구참가자들은 북한에서 제3국 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업전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즉 동일직업, 유사직업, 전혀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전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였고, 유사한 직업경험을 가졌던 경우는 <사례 1>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특수시장의 경우로 한정되었다.

〈표 6〉 연구참가자의 직업이동과 계층의식

사례ID	북한 학력	전공	북한직업명 (비공식)	북한 계층 점수	남한 직업명 1 (경력)	현재 직업	남한 계층 점수
사례1	사범대학	수학	고등학교 수학교사	7	탈북민학교 교사	제조업공장 조립	2
사례2	대졸	수산	수산사업소(밀수)	5	NGO 간사	지역지 기자	3
사례3	대졸	체육	교사(전자제품 밀수)	8	대학생	구직 중	1
사례4	대졸	화학 분석	3대혁명소조(밀수)	6	컴퓨터 학원 직원	00공단(6년)	3
사례5	경제대졸	회계	기업소부기 10년 외	7	입주가정부	민간단체	5
사례6	대졸	광물학과	탄광기사	3	00농장 1년 5개월	책집필 중	2

사례7	대졸	미술	공산대학 교원	9	수영장 관리원 1년 6개월	식당(1년 1개월) 청소년수련관 강사	1
사례8	평양소재 대졸	기계 공학	종이공장 기술실 (장사)	4	통일교육홍보강사 통일관련 연구NGO	대학원생	1
사례9	대졸	전자 자동화	전기통신관리기사 (가전제품수리)	5	차 수리	-	3
사례10	대졸	전자계 산기	무역회사에서 외화벌이	6	정밀회사 취업 (1.5년)	00NGO방송	7
총계				6.3			2.8

연구참가자들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과 동일직업으로 진입 못하는 이유는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참가자 10명의 사례의 재북시 직업군을 나누면, 교사군(사례 1, 3, 7), 회계(부기)(사례 5), 무역업 종사자(사례 2, 4, 10), 제조업종에 속한 기술직(사례 6, 8, 9)이며, 사례 4는 직업배치를 받았으나 배치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비공식 밀수업에 종사하던 경우이다. 북한의 기업소 출신집단(사례 5, 6, 8, 10)은 주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을 통해 생계수입을 챙겼다면 사례 4와 9는 직장 외에서의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 북한교사 집단(사례 1, 3, 7)

북한의 교사 출신들은 경제난 이후에 직업을 유지하기에는 생계에 위협을 느껴왔고, 남한에 온 이후에는 체제적 상이성으로 인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 또한 수월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사군의 경우를 보면 대학교원인 <사례 7>의 경우, 남한에서는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의 강사직을 가졌으나 시설 관리원→식당 보조로 직업이 점점 더 하향되고 있었다. <사례 1> 수학교사는 제조공장의 조립원으

로 일하고 있었으며, <사례 3>의 체육교사는 남한에서 대학을 다시 졸업하고 구직 중에 있었다. 이처럼 <사례 1>과 <사례 7>의 경우는 북한에서 교사경력을 지닌 경우인데, 이들의 교사 경력은 남한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사례 5>(부기)는 북한의 교사직은 원래는 직업적 위신이 높은 직업이었으나 북한의 경제난 이후 이미 교사직의 지위는 북한사회에서도 낮아졌다고 구술한다.

질문: 북한교사의 직업적 지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점수로 치면 몇 점이나 주시겠는지요?

사례 5: 경제난 이후에는 그렇게 높지 않지요. 6점? 5점? 저는 북한에서 부기(회계)였는데 교사가 저보다 나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저의 경우에는 제 아이들의 선생님의 생계도 도와드렸어요. 잘 봐달라는 뜻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서. 아이들 생각을 해서. 그러니 교사를 높게 보기가 힘들죠.(사례 5)

전직 교사 출신의 연구참가자들은 교사직을 가장 높은 계층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체제가 달라서 남한사회에 와서 다시 교사직을 갖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1>은 남북한의 체제차이, 즉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전직(former job)이었던 교사직을 일치감치 포기한 경우였다.

질문: 교사를 포기하신 이유는?

사례 1: 교사를 포기한건 아니고 남한의 현실에서. 북한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이 출신성분이 제일 좋아야 돼요. 사범대학 학생들이 성분이 아주 좋아요. 남한도 이전에 이데올로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북한 출신 교사를 안 쓸 거다. 저는 나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사는 포기를 했지요. 학생들을 일선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새롭게 직장생활에 도전해보자 해서 회사로 건 거죠. (사례 1)

〈사례 1〉은 현실적으로는 다른 직업을 일단 선택했지만 다시 교사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무엇보다 전 직업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하던 일의) 계승성을 갖게 한다면 남한사회에 입국한 데 대한 충분한 만족을 가질 것 같습니다.(사례 1)

명문대를 졸업한 북한의 최상층이었던 대학교원 〈사례 7〉 역시 교사직을 다시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례 7〉은 남한에서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직접적인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

북한사람들은 엄청 어려운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학원을 다녀야만 했고 5만원 교육지원비가 교통비도 모자라 저는 하다가 그만두고…… 저는 15세의 딸과 함께 나와 심지어는 3끼를 굶어본 적도 있었어요. 이 사회에서는 북한에서 전문직한 사람들에게 쉽게 일자리를 잡을 수 없게 해요. 일종의 남한사람들의 밥그릇 싸움이죠. 북한의 전직(former job)을 살려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에요.

이처럼 교사 출신자들의 경우는 체제적 상이성으로 인해 남한에서의 교사생활은 다른 직업기술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서 직업을 연계할 수 없다고 보거나(사례 1), 교사를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남한사람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보았다(사례 7). 그러나 〈사례 2〉는 20대의 나이로서 남한에서 처음부터 다시 북한에서와 같은 전공(체육)의 대학생활을 한 후 교사로서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의 진로가 주목된다.

2) 북한의 기업소 출신집단(사례 5, 6, 8, 10)

〈사례 5(부기)〉의 경우를 보면 북한의 체제하에서는 공식 기업소일지

라도 생존을 위해 직업윤리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질문: 어떤 직업에 종사하셨습니까?

사례 5: 기업소 부기업무로서 비날론 직장 비날론 생산하는 일이었죠.

질문: 배급이 중단되곤 했을 텐데, 그 외의 다른 수입원은 없었습니까?

사례 5: 생산물을 로획하여 시장에 암거래하는 방법으로 생계유지하였어요. 북한에서 로동자들은 노골적으로 해먹고 당일군은 당당히,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는다는 말처럼 '생산물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생활에 많이 보탬이 보였죠.

〈사례 10(외화벌이)〉은 북한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외화벌이'라는 인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역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질문: 직장생활은 어떠셨어요?

사례 10: 외화벌이가 뻥하잖아요? 외화사업소는 어떻게 하나 돈벌이를 많이 하는게 기본이니까 충성심이라기보다 그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가 주 업무였죠. 충성심보다 이윤을 남기자고…… 실리 위주가 기본이죠…….

질문: 공식직장에서 배급(임금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요?

사례 10: 배급이나 임금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으므로 잇은 지는 오래지요. 하지만 개인 외화벌이가 수입이 짝짤하다보니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각각 수산소 직원과 외화벌이 직업을 가진 〈사례 2〉과 〈사례 10〉은 일종의 무역업종에 근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직업에 대해 5와 6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NGO관련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으며 〈사례 5〉도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

간단체에서 일하는 <사례 5>와 <사례 10>은 자신의 남한에서의 계층지위에 6과 7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한주민들은 사회단체나 NGO에 있는 경우 자신의 직업계층을 그다지 높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이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남한사회에서의 계층적 위치를 낮게 평가한 사례는 3과 8이었다. 학생으로 있는 <사례 3>은 대학을 졸업 후 구직 중이었고, <사례 8>은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 자신들의 계층을 가장 최하점인 1로 평가하였다. 이는 학생의 신분인 까닭에 돈을 벌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고학력에 대한 존경심이 남한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 비공식 직업으로 생계유지(사례 4, 9)

<사례 4>는 아예 공식직장을 떠나 생계유지를 밀수로 한 경우이다.

고난의 행군 시에 각 곳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정상공급 시보다 수입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가전제품들을 수리해주는 일부터 하였는데 그 수입도 괜찮았고 그게 주 생계용이 되었지요. 중국과 집을 오가면서 밀수를 진행하여 생계를 유지했죠. 집과 중국을 한 달간이 왕복 시간이 걸렸는데 이 한 달간이면 어떤 물건도 짚어가지고 오면 수입이 되었죠(사례 4).

고학력 연구참가 집단이 남한사회에서 북한사회에서 가졌던 직업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는 북한에서와 동일한 직업이 없어서, 남북한 체제가 달라서, 북한의 학교에서 배운 것과 남한의 학교에서 배운 것은 달라서, 북한의 직장관 남한의 직장에서의 기술이 달라서, 남한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편견 등 여러 장애요인 등을 생각할 수 있

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직업세계의 붕괴로 인해 고학력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갖거나 직업기술의 연마를 할 기회가 없었다.

고학력자들의 직업경험을 보건대, 북한에 있을 당시에도 북한의 사회체제의 붕괴로 인해 직업적인 직무기술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직업윤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 외적으로는 좋은 직장이 있는 경우에도 비공식 영역에서 가외의 생계유지 활동을 해야 생존하는 상황이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남한에서의 직업이동과정에서 “정착 초기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나은 직업으로 상향할 것이다”라는 것이라는 인적자본이론의 기본가정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고학력자들은 직업전환을 거듭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직업으로 상향하는 경우는 <사례 4>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았다. 나의 ‘기업소출신 집단’, 다의 ‘비공식 직업 집단’ 모두 북한에서와 같은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북한에서의 직업경력 인정에 대해 어떤 미련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직업생활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체제의 어려움(기업소 집단, 비공식직업 집단)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했음을 회고하고 있다.

연구문제 4. 남한사회에서의 직업전환과정에서 정착 초기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나은 직업으로 상향할 것이다.

위의 명제가 확인되는 사례를 발굴하고자 하였지만 <사례 4> 외에는 남한사회에서의 직업이동과정에서 뚜렷하게 직업계층이 상향이동한 사례를 발견하기란 어려웠다. <사례 4>는 컴퓨터학원 직원에서 출발하여 ○○공단직원으로 특채된 경우였는데, 이 또한 실력에 의한 상향이동이

라기보다는 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특채’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입사한 경우였다. 남한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별한 입사기회를 이용해서 취업한 경우였다.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고학력 북한이탈주민들은¹⁴⁾ 정부나 대기업이 그들을 특별채용을 해줄 것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과는 직업영역에서 경쟁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직업이동을 통해 더 나은 직업으로 상향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의 특별한 배려나 지원 없이는 일반노동시장 즉 1차 노동시장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다.

4. 직업이동에 따른 계층변화에 대한 인식

연구참가자들이 계층순위를 높게 평가한 직업은 대학교원(9) > 교사(7 혹은 8) > 부기(7)의 순이다. 그 외에 외화벌이 6점, 수산사업, 전기기사는 5점, 기술실 4점, 탄광기사의 경우는 3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북한사람들이 사무직을 매우 선호하되 기술직을 선호하지 않는 행태의 반영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가장 높은 계층점수를 부여한 사례는 <사례 7>인데, 부모 모두 북한의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본인도 명문대학을 나와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례 7>은 핵심계층으로서 최상의 유복한 생활을 하였으나 남편이 먼저 탈북하면서 2005년도에 동반탈북하게 된 경

14) 이와 같은 견해를 주장한 단체로는 북한의 대졸자 출신들이 모여서 결성한 NK지식인연대가 있으며, 대표인 김홍광은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를 정부가 기업에서 특별채용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8월 이화여대 주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대책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자료집.

우이다. 가장 낮은 계층점수 3을 부여한 <사례 6>은 부농 출신의 적대계층으로서 탄광 등에서 기사로 근무하였던 경우이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계층지위에 대한 자기평가의 경우 “북한에서의 출신성분”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연구참가자들은 4년제 혹은 5년제 대학에서 수학, 수산, 체육, 화학, 회계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였으며, 북한에서의 소속계층에 대한 인식은 평균 점수 6.3으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남한사회로 온 이후 남한사회에서의 소속계층에 대한 인식은 2.8로 낮아졌다(6.3→2.8).

앞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5에서,

북한의 상층에 속할수록 남한사회에서 본인이 속한 계층지위가 하락의 폭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전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3.5점의 점수가 하락했다. 이는 일반 북한이탈주민 중 향이동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이다.¹⁵⁾

그렇다면, 남한에서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사례 5>와 <사례 7>이다. 이들은 남한에서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6점과 7점을 주었다. 이들은 모두 NGO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예상외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사회단체에서 일할 경우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외였던 것은 남한주민에게는 최고의 선호기업인 공기업에 일하고 있는 <사례 4>가 자신의 위치를 3으로 낮게 평가한 점이다. 이와 같은 예상외의 결과는 그간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사회관련 단체를 많이 만드는 현상

15) 고지영(2010)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남한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비교하기 위해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의 동일한 설문을 하였는데, 본 질의에서 사용한 문항도 같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는 남한 남성의 평균 계층의식은 4.1점, 여성은 4.0점, 전체 4.0점으로 나타났다.

의 원인을 설명해준다. 이는 북한체제가 권력과 정치에 의해 모든 일이 결정되는 사회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욕구와 직업계층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북 시 직업을 유형별로 교사 집단, 기업소 집단, 비공식직업 집단의 세 유형으로 분류해서 계층점수를 집계해보면 <표 7>과 같다. 우선 교사 집단의 경우 계층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북한에서의 계층적 지위 점수는 8점인데 남한에서의 계층점수는 1.3점으로서 무려 6.7점이 낮아졌다.

<표 7> 교사 집단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변화에 대한 평가

사례ID	북한 학력	전공	북한직업명 (비공식)	북한 계층 점수	남한 직업명 1 (경력)	현재 직업	남한 계층 점수
사례1	사범대학	수학	고등학교 수학교사	7	탈북민학교 교사	제조업공장 조립	2
사례3	대졸	체육	교사 (전자제품 밀수)	8	대학생	구직 중	1
사례7	대졸	미술	공산대학 교원	9	수영장 관리원 1년 6개월	식당(1년 1개월) 청소년수련관 강사	1
평균				8			1.3

두 번째 기업소 종사집단은 5점에서 3.7로 낮아졌는데, 이는 1.3점 하향한 것으로 차이는 크지 않다.

<표 8> 기업소 집단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변화에 대한 평가

사례ID	북한 학력	전공	북한직업명 (비공식)	북한 계층 점수	남한 직업명 1(경력)	현재 직업	남한 계층 점수
사례5	경제대졸	회계	기업소부기 10년 외	7	입주가정부	민간단체	5

사례6	대졸	광물 학과	탄광기사	3	00농장 1년 5개월	책집필 중	2
사례8	평양소재 대졸	기계 공학	중이공장 기 술실(장사)	4	통일교육홍보강사 통일관련 연구NGO	대학원생	1
사례10	대졸	전자 계산 기	무역회사에 서 외화별이	6	정밀회사 취업(1.5년)	00NGO방송	7
평균				5			3.7

세 번째 비공식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집단을 보면 5.5→3점으로 계층점수가 두 번째 집단보다는 하락폭이 커서 2.3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비공식 집단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변화에 대한 평가

사례ID	북한 학력	전공	북한직업명 (비공식)	북한 계층 점수	남한직업명 1(경력)	현재 직업	남한 계층 점수
사례4	대졸	화학 분석	3대혁명소조 (밀수)	6	컴퓨터 학원 직원	00공단 (6년)	3
사례9	대졸	전자 자동화	전기통신관리 기사 (가전제품수리)	5	차 수리	-	3
평균				5.5			3

이 세 집단 중 교사 집단의 계층하락폭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이 비공식 집단, 세 번째가 기업소 근무 집단이다.

그렇다면 연구참가자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면서 발생한 자신의 계층변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10개의 사례 중에서 〈사례 10〉만이 예외적으로 점수 6점에서 7점으로 상향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나머지 9개의 사례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면서 자신의 지위가 하락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10〉의 북한에서의 전직은 외화별이인데, 남

한에 와서 대북관련 NGO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였다. 이들의 평균치를 보면 북한계층 평균점수 6.3점에서 남한계층 점수 2.8로 점수가 하락하였다.

교사 집단 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전직과의 계승성, 연관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교사 집단은 특히 계층의 하락폭을 크게 느끼고, 전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자기 인식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이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직업이동과 직업계층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연계하여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차별의 실체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들은 차별을 주로 취업과 직장, 고용지원센터 등 일자리영역에서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취업영역에서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배제하고 무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직업계층 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향이동, 하향이동, 수평이동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눌 때, 고학력자 집단은 하향이동 집단 내에 속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고학력 집단은 직업계층의 하향이동을 경험하였고 또한 직업계층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 참가한 고학력자 사례에서는 교사집단을 제외하고는 전직으로의 복귀나 경력을 연계하는 직업을 원하기보다 재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셋째, 타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마찬가지로 고학력자 집단 역시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을 논의하기 이전에 북한의 직장생활을 통해 인적자본의 형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직업영역에서 경력형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2의 직업, 혹은 불법적인 수단 즉 밀수로 생활자금이 조달되었다. 교사 등의 직업은 경제난 이후 직업적 권위가 낮아지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의 직업상황이 고학력집단조차도 소수의 직종 외에 인적자본이 형성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들 역시 남북한 체제 간의 상이성을 인식하고 있어 한국사회에서의 새 출발을 원하고 있었다.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이 얻은 결론은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북한직업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북한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업경력을 쌓지 못한 세대이며, 북한에서의 직업경험이 남한사회에서 실제적인 직업능력이 되기 힘들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자리로부터 자신들이 배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사례를 통해 보건대 이들이 말하는 차별을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전장벽보다는 '체제 간 격차로 인한 직업계층의 하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억눌리고 억울한 감정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은 시간이 가면 차차 낮아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로 형성된 인적자본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 본 연구 결과는 그간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대한 인적자본의 투자효율성이 낮다는 평가에 대해 낮을 수밖에 없는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참가자 중 교사집단은 과거 직업으로 연계된 전직(前職)으로의 복귀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직업계층(occupational strata)의 하락폭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현재 교사 집단에 대한 일부 관리¹⁶⁾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북정책과 사회통합차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가 북한 인력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높여 고급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 및 중대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북한의 직업군에 대해 직업의 연계성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들을 재확인해나가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접수: 2010년 11월 9일 / 수정: 2010년 11월 24일 / 게재확정: 2010년 11월 30일

¹⁶⁾ 2010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특입센터에서는 북한교사 출신을 대상으로 NK교사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료 후 이들을 방과 후 교사 등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고지영. “탈북이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취업요인 분석.” 『탈북이주민 연구의 뉴패러다임: 노동실태와 정체성』.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 추계학술회의, 2010년 10월 15일.
- 김석향 · 박영자 · 이미경 · 전영선.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직업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007.
- 김화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구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박순성 · 고유환 · 소라미 · 이임하 · 이희영 · 전미영 · 차문석 · 홍민.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009.
- 선한승 · 강일규 · 김영운 · 윤인진 · 이영훈 · 정성훈 · 김화순. 『북한이탈주민 취업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유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통일문제연구』, 제19권 1호 (2007).
- 윤여상 · 윤인진 · 이금순 · 안혜영 · 서윤환 · 엄홍석.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2005.
- 윤인진 · 길은배 · 박영희 · 엄홍석 · 윤여상 · 채정민. 『새터민 여성 · 청년 실태조사 보고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2006.
- 이금순 · 강신창 · 김병로 · 김수암 · 안혜영 · 오승렬 · 윤여상 · 이우영 · 임순희 · 최의철.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장명선 · 이애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09.
- Chiswick, B & Miller, P. *The International Tranferability of Immigrants' Human Capital Skills*. IZA DP No.2670, 2007.
- Ehrenberg, Ronald G. and Smith Robert S.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Boston: Addison-Wesley, Prentice Hall, 2003.
- John W. Creswell, 조홍식 외 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2005.
-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New York: Sage Publications, 2003.

Abstract

The Perception of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ata and Discrimination Recognized by the Highly Educated North Korean Migrants

Kim, Wha-soon(Ewh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ature of discrimination recognized by the North Korean migrants in Korean society. For this, study on the downward employment effect that can occur during occupational change and the perception of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ata had been carried out. Total of 5 study objectives were established, of which 3 were based on the “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 concept of human capital theory. Qualitative interview was carried out on 10 highly educated study participants, and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3 outcomes.

Firstly, 8 out of 10 highly educated North Korean migrants recognized that they were being negatively perceived, excluded and ignored at workplaces and employment service centers.

Secondly, the highly educated group recognized that their occupational strata have downgraded as they moved from North Korean to South Korean society (dropped from average strata score of 6.3 to 2.8). The degree of downgrade was especially large for the teacher group (dropped from score of 8 to 1.3).

Thirdly, the teacher group desired to return to their former job. However, other occupational groups did not particularly wish to return or to be

associated with their former jobs. This is because occupational activity is not normally established in North Korea and, as a result, there has not been an opportunity for human capital to be created.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it is inappropriate to explain the discrimination North Korean migrants recognize in the Korean society as “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 It is more valid to interpret as the reaction to “downgrade of occupational strata” caused by occupational change. This strongly impli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confirm and theorize the above study results through additional study on North Korea’s occupational change by various occupational groups.

Keywords: North Korean Migrants, Occupational Strata, 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 downward employment

김화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기업의 탈북이주민 노동력 활용에 관한 연구: 통합방법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인적자본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등이 있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김근식(경남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비교사회주의 시각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을 고찰하고 전환의 유형과 방식을 결정하는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대해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방식을 전망하고 이를 위한 조건과 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북이 체제전환에 나설 경우 아시아형 '점진적 체제개혁'과 정치체제의 근본 변화 없는 '당-국가 주도형' 체제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점진주의(gradualism)에서도 중국 베트남보다 '쿠바형'에 상대적인 친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 특유의 초기 조건과 역사적 유제들을 고려하면 북한의 체제전환은 특정 유형이 아닌 고유한 '북한식'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 당장은 가장 북한적인 초기 조건으로서 수령제라는 대내 조건과 북미 남북관계라는 대외 조건이 체제전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주제어: 사회주의 체제전환, 점진주의와 급진주의, 초기 조건, 경로의존성, 수령제

* 이 논문은 2009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문제의 제기

북한은 과연 변화할 것인가? 북한은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북한은 붕괴하고 있는가? 북한의 미래에 대한 논란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보수 진영의 북한 붕괴 대망론과 대북포용정책 이후 진보 진영의 북한 변화 기대론을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점진적 변화의 긍정성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불변론과 함께 도둑처럼 찾아올 북한 급변사태를 희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강조하는 진보 진영이든 북한의 붕괴를 희망하는 보수 진영이든 향후에 북한이 결국 변화해야 함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점진적 방식이든 혹은 급진적 방식이든 북한의 현재 내재하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은 당연히 개선되고 해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어떤 경로이든 북한은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굴곡을 거듭했던 북한의 개혁개방이 또 다시 불확실의 영역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의 과제와 북한이 변화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의 한계를 목도하면서 과연 북한 체제가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개혁개방의 전망이 가능한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소련과 동구의 체제전환과 중국, 베트남의 체제개혁 경험이 과연 북한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환경하에서 또 불가능하다면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는 어떤 방식과 경로로 진행될 것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자신의 대북관과 이념에 따라 북한의 조그마한 변화까지도 대단한 것인양 과대평가하거나 매우 유의미한 변화마저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극단적 양 편향을 보여 왔다. 북한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북한 지도부의 전략과 의지를 객관적 시각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진보와 보수 모두 자신의 ‘희망적 사고’에 맞춰 북한의 변화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예견해 온 것이다. 2002년 7·1조치와 실리 사회주의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혹자는 드디어 북한이 시장화에 진입했다며 흥분하기도 했고 혹자는 당국의 계획경제 정상화 의도라며 개혁적 성격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7·1 조치는 되돌릴 수 없는 시장화 정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개혁 과정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한 단순한 구두선만도 아니었다. 이제 북한의 변화 실태를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전략으로 바라보고 이를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동시에 고민하고 전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일반론적인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입장과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 실태 및 가능성을 분석 전망하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일별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즉 비교사회주의 시각으로 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를 일반화하고 북한에 적용 가능성을 도출한 뒤, 체제전환의 각 유형과 북한과의 상호 조응성 여부를 살펴보고 향후 북한식 변화 전망을 도출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론 일반론을 고찰하고 체제전환 방식을 결정하는 초기 조건과 경로의존성에 대해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방식을 전망하고 이를 위한 조건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개념: 체제전환, 체제개혁, 체제이행

일반적으로 체제변화(system change)라는 개념에는 이른바 ‘체제전환’

(transformation)과 ‘체제개혁’(reform)이 모두 포괄된다. 코르나이에 따르면 현실사회주의의 체제변화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내용에서의 ‘깊이’(depth)와 속도에서의 ‘급진성’(radicalism)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내용에서의 부분성과 속도에서의 온건성일 경우 그것은 ‘개혁’(reform)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용이 전면적이고 속도에서도 급진적일 경우 그것을 ‘혁명’(revolu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

이때 개혁과 혁명을 구분하는 ‘깊이’(depth)의 기준에 대해 코르나이는 ‘분할되지 않은 공산당 권력독점과 지배적인 공식이데올로기’(block 1)와 ‘국가적 혹은 전인민적 소유형태’(block 2) 그리고 ‘관료적 조정기제의 지배’(block 3)를 제시하면서 적어도 블록 1, 2, 3 중 최소한 하나에서 근본적 변화가 존재할 때 이를 개혁으로 정의하고 있다.²⁾ 결국 코르나이가 설명하는 ‘체제개혁’에 대한 적극적 정의는 지배이데올로기와 권력독점, 소유형태, 조정기제 중 하나에 깊숙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변화의 방식이 적당하게 급진적이어야 하며(moderately radical), 완전한 체제이행 즉 탈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은 개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³⁾

여기서 코르나이의 ‘혁명’은 통칭 ‘체제전환’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즉 체제전환과정이란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질서형태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개혁’은 현재의 집권자와 그와 연합된 국가기구 내부 또는 외부의 그룹에 의해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86-392.

2) 코르나이의 체제개혁에 대한 소극적 정의에 따르면 블록 1, 2, 3 중 어느 하나에서도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 개혁이라 할 수 없다.

3) 단 블록 1의 근본변화가 생기면 ‘루비콘 강’을 건넌 것으로서 사회주의 가족(family of socialist system)을 넘어 질적으로 전환된 것으로(qualitative leap) 코르나이는 보고 있다.

급진적이고 대규모적인 혁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점진적인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⁴⁾

이때 개혁과 체제전환 간의 관계는 국내외적 정치, 경제적 환경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위로부터의 개혁이 ‘체제 내적 변화’(change within the system)에 머물 수도 있고 체제개혁(system reform)을 거쳐 궁극적으로 ‘체제전환’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유지된 채로 변화하는 것이 체제 내적 변화라면 기존의 체제적 특성 요인까지 변화하는 것을 체제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

따라서 공산당독재,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 이데올로기 독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처럼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정치부문과 이데올로기부문에서 급격한 변화와 단절로 나아갈 때 이를 ‘체제전환’(transforma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처럼 사회주의의 기본틀, 특히 정치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체제개혁’(system refor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전환과 체제개혁의 개념이 변화의 속도와 깊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면 정치부문과 경제부문의 상호 변화양상을 놓고도 우리는 이중전환과 단일전환이라는 구분을 할 수 있다. 즉 급진적인 체제전환의 경우 정치개혁과 동시에 혹은 정치개혁을 통해 근본적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이른바 ‘이중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체제개혁의 경우는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혹은 같은 정치 지도부에 의해 경제체제만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일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체제전환과 체제

4) 정형곤, 『체제전환의 경제학』 (서울: 청암미디어, 2001), pp. 21~27.

5) 예컨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인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획명령경제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유지되는 한에서 일부 정책적 조정 기제만의 변화라면 그것은 체제내적 변화로 분류될 것이다.

개혁은 정치와 경제의 변화 차원에 따라 이중전환 방식과 단일변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⁶⁾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경험을 보면 체제개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시작이 위로부터의 개혁방식과 경제부문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체제전환으로 연결되고 향후 정치체제까지를 포함한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바, 엄밀히 본다면 체제개혁 역시도 큰 틀에서는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대체되는 체제전환의 일련의 과정이자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개혁 방식은 그것이 체제내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계획경제 대신에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국영기업 대신 사유화 부문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체제개혁을 거쳐 궁극적으로 체제전환으로 가는 하나의 유형으로 봐야 한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은 그것이 급진적이고 이중적인 방식의 전환유형이든 아니면 점진적이고 단일적인 방식의 개혁유형이든 중국적으로 체제전환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이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해서 ‘체제이행’(transi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공산당 정치체제와 공적소유의 계획명령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적소유의 시장경제로 옮겨진다는 점에서 분명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이행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도 사회주의 체제변화를 언급하면서 체제전환과 체제이행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행론이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옮겨감을 의미

6) 하상식,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변화: 북한의 개혁전망,” 『국제정치논총』, 37집 2호 (1997), p. 151. 이중전환과 단일전환의 유형 분류는 이무철, “조정기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한울, 2008), pp. 182~184.

하고 전환론이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차원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구사회주의의 급격한 체제변화는 정치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문화와 가치 및 신념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것이므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의 단순한 이행(transition)보다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장기적인 ‘전환’(transformation)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⁷⁾

사회주의권 붕괴의 도미노 현상을 보였던 1990년대 동구라파의 체제 전환을 이른바 ‘이행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서구식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이행의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들만을 목적론적으로 강조하게 되고 실제 체제전환 국가들이 사유화 과정의 지체나 비민주적 정권의 등장으로 이행학으로부터의 이탈이 일반적이었던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⁸⁾ 오히려 체제전환론의 관점이 각 국가들의 조건과 환경의 차이를 감안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 문화적 유제의 구속력에 유의하면서 차별적인 체제전환 과정과 정치 경제체제의 다양한 발전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단순한 이행학의 접근보다는 보다 역동적인 체제전환론의 접근이 실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이 되고 바로 이 점에서도 필자는 체제이행보다는 체제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변화와 관련된 개념에서는 급진적인 체제전환 방식과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체제개혁을 구분할 수 있고 이는 곧 이중전환과 단일전환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전환과 개

7) 정흥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서울: 오름, 2001), pp. 194~201 ; Frank Bonker, Klaus Miller and Andreas Pickel,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Frank Bonker et al. eds,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8)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비교연구,”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pp. 14~16.

혁 모두 사회주의의 근본적 체제변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체제전환 일반론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소련 동구의 급진적 체제전환의 경로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체제개혁의 방식 모두를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두 유형으로 간주한다.

Ⅲ. 체제전환의 유형: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이른바 급진주의(radicalism)와 점진주의(gradualism)로 대별될 수 있다.⁹⁾ 그리고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는 각각 소련동구 지역의 경험과 중국 베트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동구형과 아시아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코르나이의 체제변화 개념에 따르면 급진주의는 ‘혁명적’ 변화 즉 변화의 내용과 깊이가 전면적이고 속도가 급진적인 방식이며 점진주의는 이른바 ‘체제개혁’의 방식에 해당된다. 전환 영역의 상호 관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급진주의는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전환되는 ‘이중전환’의 경우이고 점진주의는 경제부문의 변화를 우선하는 ‘단일전환’의 경우가 된다. 체제변혁 동력의 형성과 작용방식에 따라 도식적으로 분류하면 지배 엘리트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과 피지배대중에 의한 자생적인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외부의 정치경제적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개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바,¹⁰⁾ 이에 따르면 급진주의는 대개의 경우 아

9) 물론 체제전환 방식의 차별성에 따라 러시아형, 루마니아식의 동부유럽형, 폴란드 헝가리 등의 중부유럽형, 중국과 베트남의 중국형, 쿠바형으로 더 세분화 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라는 유형분류로 대부분의 경우가 설명이 가능하다.

10) Ivan Szelenyi, "A Theory of Transitions," *Modern China*, Vol.34, No.1 (2008), pp. 167-169.

래로부터의 변화압력이 중요한 촉발요인이 되고 점진주의는 지배블록의 위로부터의 변화의지가 중요한 전환 계기가 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급진주의는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혁명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관찰시키는 방식이고 점진주의는 장기간에 걸쳐 경제영역에서부터 지속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급진주의는 혁명적(revolutionary) 전환이고 점진주의는 진화적(evolutionary)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급진주의 유형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으로서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이행되는 이중전환이고 상당수의 경우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변화요구로부터 촉발된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변화에 해당한다.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혁명적 체제전환으로서 급진주의는 그래서 ‘충격요법’(shock therapy) 혹은 ‘빅뱅’(big bang)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급진주의는 대부분 체제전환 국면에서 지배엘리트의 내적 분파 형성과 저항세력과의 동학이 정치와 경제 양 차원에서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는 방식이었다. 즉 지배계급 내부에 개혁파와 보수파가 분화되면서 권력 투쟁을 하게 되거나 지배블록 바깥에 존재했던 반체제 엘리트와의 경쟁과 타협에 의해 체제전환에 나서거나 혹은 대중봉기에 의해 지배계급이 급속도로 해체 혹은 분열하게 되면서 급격한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경우 등이었다. 이에 따른다면 급진주의에 해당되는 공통의 체제전환 경로에서도 지배엘리트의 분파와 정치적 갈등 양상에 따라 분열과 대립으로 혁명적 전환을 맞이한 소련형과 대중봉기로 기득권 세력이 제거되는 루마니아식의 동부유럽형 그리고 지배엘리트와 반체제 엘리트의 정치적 타협으로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폴란드, 헝가리 등의 중부유럽형으로 차별화되기도 한다.¹¹⁾ 더욱 자세히 전환과정을 들여다보면 물론 그 안에서도

11) 급진주의 국가들의 다양한 체제변화 특히 정치적 탈사회주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면서 다양성과 차별성을 보이기도 한다.¹²⁾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급진주의는 조직화된 저항 세력이 등장하는 사회적 동원의 단계, 공산주의 권력소유자와 저항세력 간의 대결 혹은 타협의 단계, 공산당이 자발적으로 혹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국가와 사회에서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포기한 과도정부 단계,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새 정부가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탈공산화 단계¹³⁾ 등을 거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점진주의는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 유형으로서 정치의 공산당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해가는 ‘단일전환’이고 대부분의 경우 지배 엘리트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점진적인 체제개혁(incremental reform)을 수행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해당된다. 즉 일당지배를 유지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적 결합을 모색하는 특징으로서,¹⁴⁾ 기존 지배체제의 정치적 안정 유지를 최우선적 전제로 하여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노선대립을 타협적으로 해소하면서 개혁파 지배엘리트 주도로 점진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구체제의 해체라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비동시적이고 불균등한 결합적’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¹⁶⁾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p. 78~91 참조.

12)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도 같은 중부유럽형임에도 불구하고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진승권,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 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339~342.

13) 전태국,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통일과 동구변혁』 (서울: 한울, 1998), pp. 73~74.

14) A.G.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1~2.

15) Sujian Guo,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and Vietna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Profile*, Vol.32, No.5 (2004).

중국의 체제개혁은 계획을 배제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시장과 공존시키면서 이른바 ‘계획으로부터의 성장’을¹⁷⁾ 가능케 함으로써 점진주의의 이행을 성공시켰다. 맹목적이고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에 집착하지 않고 개혁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행기반을 튼튼하게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¹⁸⁾ 중국은 정치적 안정 위에 초기 농촌개혁의 성공과 잉여 노동력의 재배치를 통한 2차 산업의 발전 그리고 경제특구의 성공적 활용을 통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으로 요약되기도 한다.¹⁹⁾ 베트남 역시 베트남 공산당이 주도하는 ‘도이모이’ 정책에 의해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가족농 제도의 정착, 가격자유화와 재정 및 금융개혁, 국유기업 개혁과 사유화를 거쳐 본격적인 시장경제 제도로 이행하고 있다.²⁰⁾ 중국과 베트남이 공히 본격적인 체제개혁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개혁의 우호적 대외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공산당 내부에서 개혁과 주도의 인적 교체가 이뤄짐으로써 경제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대내적 조건의 형성이 주요한 작용을 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중국, 베트남 유형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바로 쿠바형이다. 쿠바의 개혁모델도 정치적 일당지배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문에서의 점진적인 체제개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큰 틀의 점진주의

16) 이를 최봉대는 당-국가 주도형 체제전환론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비교연구”, p. 31.

17) Naughton,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8) 중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대해서는 中兼和津次 지음, 이일영·양문수 옮김,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나남, 2001); 린이뚜 외 지음, 한동훈·이준엽 옮김,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백산서당, 2001) 참조.

19) 양운철,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6), p. 227.

20) 김석진, 『중국 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서울: 산업연구원, 2008), pp. 47-50.

로 분류될 수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개혁의 수준과 정도가 미흡하고 일관된 개혁이 아닌 ‘가다서다’식의 단속적 개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쿠바의 체제개혁은 시장의 요구와 동원적 정치 사이의 긴장관계를²¹⁾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만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경제개혁 과정이 오히려 국가의 통제역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²²⁾ 쿠바가 중국, 베트남과 차별성을 보이는 배경에는 쿠바민주화법 등 미국의 봉쇄정책이 여전하다는 외적 조건과 반개혁적 성향의 최고지도자의 집권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적 조건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체제전환의 요인과 유형의 상관관계: 초기 조건과 경로의존성

그럼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요인은 무엇일까? 급진적 전환이든 점진적 개혁이든 본격적인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일반론적인 요인을 추출해내고 동시에 급진주의 모델과 점진주의 모델을 가능케 하는 각각의 유형적 요인들을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적 관심사인 북한은 아직 체제전환의 기미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정확한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이 체제전환에 나설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의 시

21) Marifeli Perez-Stable, “Caught in a Contradiction: Cuban Socialism between Mobilization and Normal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32, no.1 (October, 1999).

22) 정영태 외,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91~92 ; Javier Corrales, “The Gatekeeper State: Limited Economic Reforms and Regime Survival in Cuba, 1989~2002,”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39, No.2 (June, 2004), pp. 35~43.

작요인을 확인해봐야 하고 이후 급진주의로 갈지 혹은 점진주의로 갈지 전환과정의 경로를 예측케 하는 유형적 요인들도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체제전환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들이 북한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만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필요조건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체제전환의 요인과 관련해서 필자는 이른바 초기 조건과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이란 체제전환국의 정책당국에게 주어지는 제반의 조건으로서 자연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및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역사적 유산, 초기 발전수준과 정치적 국제적 환경 등을 말한다.²³⁾ 월드뱅크는 경제적 체제전환의 초기 조건으로 경제 구조의 차원, 경제 왜곡의 차원, 제도 차원의 세 가지 범주를 나누기도 했다.²⁴⁾

결국 체제전환국의 처지와 환경이 곧 초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초기 조건의 차이에 따라 이후 체제전환 과정과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됨을 이른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경로의존성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이 공통적으로 급진적인 혁명적 전환 방식을 택했지만 실제 진행과정과 전환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문화적 유제의 현재적 구속으로 개별 전환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²⁵⁾ 경로의존성은 체제전환국의 서로 다른 다양한 결과가

23) 양문수,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p. 199.

24) World Bank, *Transition-The First Ten Years: Analysis and Lessons for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2) 참조.

25) David Stark, “Path Dependence and Privatization Strategies in East Central Europ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6, No.1 (1992).

사실 체제전환의 초기 조건과 전환과정의 개별 조건의 상이함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중부유럽형 체제전환국이지만 지배엘리트의 행태와 관련해서 헝가리는 선거참여형, 폴란드는 타협형, 체코는 행복형의 다른 경로를 보이는 것이나 국유기업 사유화 전략에서 헝가리의 분권화된 재조직, 폴란드의 종업원 지주제, 체코의 바우처 경매식의 다양한 결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초기 조건과 경로의존성인 것이다. 정치적 초기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동독 체코는 민주적 자본주의, 소련, 루마니아 등은 범죄자본주의, 폴란드, 헝가리 등은 정치적 자본주의 등 다양한 정치 체제 전환을 결과한 것도 마찬가지다.²⁶⁾ 경제개혁도 초기 조건의 상이함이 결과의 차이를 낳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이 성공했던 데에는 농업부문의 풍부한 과잉노동력, 저개발의 산업구조, 지방 분권화 정책, 홍콩과 이웃하고 대만과 동남아에 화교자본의 존재,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로 ‘실험 후 확산’ 정책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 수 있고 이는 중국이 갖고 있는 유리한 초기 조건들이었다.²⁷⁾

사회주의 체제원리와 대비되는 자본주의 체제이행을 전제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비교정치 시각으로 단순화시켜 분석하는 이행학의 입장은 현실의 전환과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 전환국가들이 보여주는 비서구적 이행경로의 생성 기제를 차분히

26)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 90. 동유럽의 체제전환 결과 서구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카리아는 비자유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라는 개념으로 특성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경교, “동유럽의 민주화: 비자유민주주의의 확산?,” 이상환·김웅진 외, 『동유럽의 민주화』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3) 참조.

27) 양문수,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pp. 208~210.

분석함으로써 엘리트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주의 시기 혹은 그 이전의 체제 특성과 ‘역사적 유제’들 및 국내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비교방식이어야 한다. 즉 경로의존적 체제전환은 초기 조건과 진행과정의 차이로 인해 체제전환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개별 체제전환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²⁸⁾ 결국 각각의 체제전환 방식이 그것을 야기하는 각각의 초기 조건들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일정한 제약하의 경로의존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적 체제전환론은 반드시 하나만의 이상적 모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에 의해 나라들 간의 차별적인 체제전환 과정과 체제전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체제전환의 요인으로 코르나이는 4가지를 들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의 축적, 대중적 불만, 지배집단의 자신감 상실, 외부의 변화사례들의 영향 등이 그것이다.²⁹⁾ 즉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누적되면서 대중의 불만이 확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배집단이 정치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외부로부터 체제변화의 사례들이 파급력을 갖고 영향을 미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체제는 체제전환이 촉발된다고 봐야 한다. 즉 체제전환 과정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다. 체제전환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으로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체제정당성의 상실과 체제전환을 압박하는 국제정치역학 관계 그리고 체제전환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 및 편익의 증대를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³⁰⁾

28)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비교 연구”, p. 18.

29)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p. 383~386.

30) 김갑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변화,”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이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혹은 각각의 전환유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하는 데서도 대부분은 위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동구형의 급진적 이중전환 방식과 동아시아형의 점진적 단일전환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소련에 의해 이식된 사회주의였던 동구라파에 비해 아시아형이 대체로 상대적인 체제정당성을 유지하고 있고³¹⁾ 국제정치적 외부 요인 역시 동유럽의 경우는 소련의 쇠퇴로 인한 동유럽에 대한 포기선언³²⁾이 체제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³³⁾ 반면 아시아형은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 이를 내부적인 체제통합에 활용하거나 대미관계 개선 이후에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들의 저항도 동유럽은 억압과 처벌의 두려움보다 체제전환으로 기대되는 정치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단적 정치행동에 나선 반면 아시아형은 아직도 반체제 행동의 정치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동유럽과 아시아의 역사적 유제와 조건이 상이하고 이로 인한 국내외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체제전환의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은 지배층의 대응이 주요한 체제전환의 요인을 형성하게 되는 바, 여기에는 경제적 위기 지속과 대중적 저항운동 등이 대내적 조건과 대외적인 국제정치역학 관계가 체제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각의

환에 대한 비교연구』, p. 104.

31)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된 동구라파와 달리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은 독자적인 민족해방투쟁과 혁명전쟁을 통해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성취했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를 일정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32) 이른바 시나트라 선언.

33) Ivan Szelenyi and Balazs Szelenyi, "Why Socialism Failed: Toward a Theory of System Breakdown-Causes of Disintegration of East Europe State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Vol.23 (1994), p. 226.

체제전환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지배엘리트들의 선택과 대응이 핵심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경제위기와 시장화 정도, 대중의 불만과 저항 정도, 외부의 압력과 영향 등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각국의 체제 전환은 지배엘리트와 대내외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체제전환 방식이 선택되는 셈이다.

체제전환의 요인과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본다면 북한의 경우는 아직 체제전환이 개시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중들의 불만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화와 조직적 저항운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대외적 조건도 중국의 지원과 후견이 체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대미 대남 관계가 오히려 체제전환을 압박하기보다 체제유지 및 체제통합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급진주의적 체제전환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체제전환도 아직 북에게는 압박하지 않고 있다. 수령제라는 독특한 유일지배의 정치체제가 강고한 탓에 지도부의 교체나 개혁파의 득세가 아직은 불가능하고 반체제적인 조직적 저항도 불가능하며 북미 남북관계가 체제전환을 강요하는 외적 조건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에게 체제전환은 생소하게 다가온다.

V.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전망 및 함의

2007년 이후 북한의 이른바 ‘실리사회주의’와 7·1조치가 사실상 좌절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⁴⁾

³⁴⁾ 7·1 조치의 후퇴와 시장억제 조치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참조.

7·1 조치를 필두로 시장화 개혁정책을 추진했던 박봉주 총리의 해임과정 역시 경제정책의 보수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³⁵⁾ 과연 북한의 현주소는 체제전환이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체제전환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위기와 대중들의 정치적 불만이라는 대내적 요건이 개혁개방을 압박하거나 용이케 하는 대외적 요건과 결합하면서 정치엘리트들로 하여금 체제전환에 나서게 한다. 이를 놓고 본다면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관련된 북한의 ‘초기 조건’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치엘리트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대중의 정치적 압력에 밀려 개혁개방을 수용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대외적 정세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전환에 나서도록 압박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적대적 대외관계가 체제유지에 활용되고 있다. 경제난의 지속과 이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지만 개혁개방을 결심케 하는 정치적, 대외적 초기 조건이 북한에게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진주의 모델인 소동구형의 본격적 체제전환의 시작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주의 체제전환의 가능성도 아직은 북에게 열려 있지 못하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개혁 결단을 가능케 했던 초기 조건으로 체제위기의 강도, 지도부의 교체, 공산당의 통치역량, 대외관계 개선, 민족통일 문제 등을 든다면 북한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정치적·대외적 초기 조건이 과거 중국 베트남에 비해 개혁전략을 선택하기 훨씬 어려운 조건이다.³⁶⁾ 즉 지도부의 교체라는 조건은 권력승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35) 박봉주 총리의 부침과 경제개혁 조치 후퇴에 대해서는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 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경남대학교 박사논문, 2009) 참조.

36) 김석진, “중국 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pp. 52-72.

개혁파의 형성과 득세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는 아직도 북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대외관계 역시 북미 적대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스스로 개혁개방을 결심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며 민족통일 문제 역시 흡수통일 가능성을 우려해 과감한 개혁개방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존재라는 분단구조의 영향력과 지도부의 인적·이념적 연속성과 강고성은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북이 체제전환을 시작하기 힘든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체제전환에 당장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체제전환은 어떤 유형과 경로로 예측할 수 있을까? 과거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험은 경제에서 계획의 비중이 높거나 그것의 중앙집중도가 높을수록 빅뱅식의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행과정에서 경제의 혼란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경제구조 측면을 단순화하면 북한은 소련식의 고도로 집중화된 계획경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빅뱅식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를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영역으로 본다면 성과와 혼란방지의 측면에서 지도자는 점진주의를 선택할 것이다.³⁷⁾ 주체 사회주의라는 역사적 유제, 수령제와 자력갱생의 자립경제노선이라는 제도적 제약, 대중의 조직적 저항은 없지만 급격한 개혁개방이 체제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즉 황색 바람론, 미국의 대북 체제전환 시도라는 안보 위협과 분단체제하 남북관계라는 대외적 요인들이 결국은 김정일로 하여금 신속하고 급격한 소련동구형의 체제전환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즉 김정일 위원장이 결국 개혁개방의 방식을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정치체제의 훼손 없이 경제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형의 점진주의가 매력적일 것이다.

37)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54.

이때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사적 유제와 국내외 요인이라는 초기 조건을 들 수 있고 바로 이들 조건에 의해 중국식의 점진주의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개혁개방 이후 체제전환의 유형과 방식은 ‘경로의존성’을 갖고 진행될 것이다. 우선 북이 안고 있는 경제구조의 초기 조건들은 소련형의 고도의 국유화와 중공업 위주의 과잉 산업화이기 때문에 중국형의 초기 조건과는 상이하다. 산업화에 투입할 농업 잉여인력이 부족한 점 역시 중국식의 조건과 다르고 이는 곧 농업 개혁을 지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초기 조건의 차이로 농업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이고 상대적으로 공업부문 종사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식 개혁의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³⁸⁾ 북한이 중국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체제전환이 통일과 연결되기 쉽고 한국의 존재 때문에 전환의 경로가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³⁹⁾ 정치적 의지는 중국식이지만 조건과 현실은 다르다는 딜레마에 놓여있는 것이다.

오히려 초기 조건을 고려하면 분절적 개혁, 국제환경의 불안정성, 정치체제의 불투명성과 후계문제 등에서 북한은 쿠바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⁴⁰⁾ 지도부의 교체 없이 개혁과 정체를 반복하는 것도 유사하다. 그러나 쿠바와 비교해도 북한의 초기 조건은 더 열악하다. 쿠바의 초기 조건은 천혜의 관광자원, 미국거주 이주민의 존재, 상대적으로 과감한 농업

38) 양운철,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p. 233.

39) John Mcmillan, “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China’s Market Reform,” in Doowon Lee ed.,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ransition Economies: Europe, Asia and North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7). 초기 조건에서 북한은 중국식의 점진적 체제전환도 무리고 오히려 북한 붕괴를 감안한 체제전환과 통일의 결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박제훈,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이행경제학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16권 1호, pp. 25~28.

40) 정영태 외,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pp. 6~8.

부문 개혁과 대외 외자 유치 정책 그리고 광범위한 자영업 허용 등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점이 북한과 다르다. 결정적으로 남북분단이라는 조건은 쿠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북한만의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체제전환은 소련 동구와 구별되는 아시아형 ‘점진적 체제 개혁’에 더 친화성이 있고 정치체제의 근본 변화 없는 ‘당-국가 주도형’ 체제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점진주의에서도 중국 베트남 보다 ‘쿠바형’에 상대적인 친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초기 조건의 상이함과 주체 사회주의 특유의 역사적 유제들을 고려하면 북한의 체제전환은 특정 유형이 아닌 북한만의 고유한 초기 조건에 맞는 전환정책과 전환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⁴¹⁾

결국 체제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지배엘리트들의 정치적 결정 여부이다. 그것이 지배블록 내의 분파형성과 내부 갈등이든 혹은 제도권 밖의 반체제적 엘리트와의 갈등과 타협이든 아니면 대중들의 저항에 밀린 정치적 결단이든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불가불 지배엘리트가 당시 조성된 대내외적 요인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체제 저항운동이나 비공식 경제 활성화 등의 대내적 요인이 정치 엘리트의 분파와 갈등과 순응을 결과하기도 하고 또는 대외관계의 규정력에 의해 엘리트의 정치적 결정이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체제전환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은 우선 경제적 위기와 대중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저항운동이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지배엘리트 내부에 개혁파가 형성되고 분파 간 대결이나 노선투쟁의 가능성도 많지 않다. 시장이 확산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배엘리트는 반시장적인 성향으로 통일되어 있다. 오히려 지배 엘리트는 수령을 중심으로 정치적 대결이나 갈등 없이

41) 양문수,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pp. 220~221.

일사불란한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내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정착되고 제도화된 '수령제'의 존재로 인해 대내적 조건에 의한 지배엘리트의 내부동학과 정치적 결단이 강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다.

대외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북미관계가 평화적 선린관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북한에게 외부 위협이라는 안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의 결심을 머뭇거리게 하는 외적 조건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통일이라는 구심력의 작동 역시 체제전환을 늦추고 개혁개방을 주저하게 하는 중요한 외적 환경이다. 오히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지금도 북에게 체제전환에 역기능을 하는 대외적 조건이 되고 있다.

결국 북한에게 가장 북한적인 초기 조건은 바로 수령제라는 대내 조건과 북미 남북관계라는 대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물꼬를 트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식 초기 조건이자 체제전환을 가로막는 제약이기도 한 수령제와 대외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수령제의 변화는 적대적 대외관계의 해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외부적 위협이 해소되면 장기적으로 그것은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을 지배하고 있는 '피포위' 의식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수령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라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대북 개입정책(engagement)의 지속으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흡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함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갑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변화.”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 김석진. 『중국 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서울: 산업연구원, 2008.
- 박제훈.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이행경제학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16권 1호 (2009).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 서경교. “동유럽의 민주화: 비자유민주주의의 확산?” 이상환·김용진 외, 『동유럽의 민주화』.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 양문수.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 양운철. 『북한 경제체제이행의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6.
- 이무철. “조정기제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한울, 2008.
-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나카가네 카즈 지음. 이일영·양문수 옮김.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나남, 2001.
- 린이뚜 외 지음. 한동훈·이준엽 옮김.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백산서당, 2001.
- 전태국.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독일통일과 동구변혁』. 파주: 한울, 1998.
- 정영태 외.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정형근. 『체제전환의 경제학』. 서울: 청암미디어, 2001.
- 정홍모.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서울: 오름, 2001.
- 진승권.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비교연구.” 윤대규 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하상식.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변화: 북한의 개혁전망.” 『국제정치논총』, 37집 2호 (1997).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2009.

A.G.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David Stark, “Path Dependence and Privatization Strategies in East Central Europ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6, No.1 (1992).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3.

Frank Bonker, Klaus Miller and Andreas Pickel,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Frank Bonker et al, eds,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Ivan Szelenyi and Balazs Szelenyi, “Why Socialism Failed: Toward a Theory of System Breakdown-Causes of Disintegration of East Europe State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Vol.23 (1994).

Ivan Szelenyi, “A Theory of Transitions,” *Modern China*, Vol.34, No.1 (2008).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Javier Corrales, “The Gatekeeper State: Limited Economic Reforms and Regime Survival in Cuba, 1989-2002.”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39, No.2 (June, 2004).

John Mcmillan, “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China's Market Reform,” in Doowon Lee ed.,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ransition Economies: Europe, Asia and North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7.

Marifeli Perez-Stable, “Caught in a Contradiction: Cuban Socialism between Mobilization and Normal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32, no.1 (October, 1999).

Naughton,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Sujian Guo,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and Vietna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Profile, Vol.32, No.5 (2004).
- World Bank, *Transition-The First Ten Years: Analysis and Lessons for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2.

Abstract

Socialist Transition and Changes in North Korea: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Socialism

Kim, Keun-sik(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theory of socialist transition under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ocialism and examine initial conditions and path dependence of regime change, which determine the form and method of transi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possibility of regime change and its method will be explored as well as conditions and tasks necessary to accomplish this will be suggested. If North Korea decides to pursue regime transition, it is most likely to take the Asian model of “gradual systemic reform” or regime reform centered on “party-state system” that will not involve any major change from its current structure. Under the explanation of gradualism, North’s regime change will resemble relatively that of “Cuban model” than that of China or Vietnam. However, considering the unique initial conditions and historical factors, North Korea’s regime change will not resemble a specific case type but rather a distinctive “North Korean approach” will be taken. The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 that is preventing regime change are Suryong System that governs the domestic situation and external factors of US-DPRK and inter-Korean relations.

Keywords: Socialist transition, gradualism and radicalism, initial conditions, path dependence, Suryong System

남남갈등의 연계성*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 태도 간 연계성 및
대북정책-대중정책-대미정책 태도 차이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김재한(한림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이 남남갈등의 주요 당사자를 대변한다고 보고 두 신문 사실을 이용하여 남남갈등의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북한, 미국, 중국에 대한 두 신문의 태도 차이는 지속적이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조선일보는 더 비판적이었고 한겨레신문은 덜 비판적이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이 더 비판적이었고 조선일보는 덜 비판적이었다. 둘째,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는 정권별로 변화가 있었다. 대북정책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비판과 지지라는 양극화를 보여주었다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조금 완화되었지만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는 매우 심화된 수준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지지와 비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대중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는 노무현 정부 때에 가장 심했으며, 조선일보가 더 비판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덜 비판적인 태도이었다. 대미정책에 관한 비판과 지지의 양극화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심화되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대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의 비판/지지 입장은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서로 뒤바뀌게 된다. 셋째, 대북정책에 관한 태도는 경쟁계층의 태도와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조선일

* 이 논문은 2009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필자는 신문사설 분류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의 주관적 선입관이 자료입력에 영향주지 않았음을 밝힌다. 방대한 사설을 분류하고 입력해준 엄태일 조교에게 감사를 표한다.

보가 비판적일수록 한겨레신문은 호의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비판적일수록 조선일보는 호의적인 경향을 발견했다. 여기서는 이를 남남갈등의 대내적 연계성이라고 규정한다. 대북정책과 달리, 정부 대중정책 및 대미정책에서는 두 신문의 태도가 서로 대립하지는 않았다. 넷째, 정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정부 대미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두 신문 태도의 양극화가 클수록,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 태도의 양극화도 크다. 이를 남남갈등의 대외적 연계성으로 부른다. 이러한 대외적 연계성은 정부 대미정책과 대중정책 간에도 발견된다. 대미정책 관련 국내논쟁은 대중정책 관련 국내논쟁 및 대북정책 관련 국내논쟁과 함께 동반하는 것이다.

주제어: 남남갈등, 양극화, 구조균형, 연계,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포용정책

I. 서

북한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갈등은 한국사회 갈등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관련 논쟁에서 나타난 불신은 그러한 예이다. 불신과 대립이 심한 갈등일수록 그 갈등에 대한 진단은 더욱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진단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그 진단 자체가 갈등의 한 구성요소이고 수단이 된다. 계량적 분석은 그러한 객관적 진단에 포함될 수 있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는 실증적 연구 간에는 적어도 서로 모순되는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북한을 두고 전개되고 있는 남남갈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서술에 그치고 있고, 계량적 분석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¹⁾

1) 남남갈등은 각종 세미나의 단골 주제이고 따라서 남남갈등에 관한 글도 최근 10년 동안 무수히 쏟아졌다. 문헌 전체를 여기서 다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다. 대표적 문헌들은 다음 글에 요약되어 있다. 민병기·박재정, “대북식량지원 운동의 정치기획구조와 남남갈등,”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2009).

남남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 가운데 여론조사나 언론내용분석을 이용한 것도 그러한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증적 연구 모습을 띠었지만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주장들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료는 계량적이지만 논지전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단순히 주관적 인식을 계량적 수치로 포장하는 것이 그러한 모순된 주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계량적 자료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첫째, 북한이나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는 당시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도 조사 당시 북한 행태나 정부 정책에 따라 널뛰기식으로 변한다. 따라서 특정시기의 조사집계치(질문에 대한 응답 빈도치)를 갖고 일반 여론을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북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주로 정부나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권별로 매우 다른 것이 대표적 예이다. 계량적 연구는 특정 정권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정권에 걸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계량적 검증은 김재한의 연구가 유일한 듯하다.²⁾

김재한은 국내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대북 강경(強硬)정책은 속죄양가설(scapegoat hypothesis)이나 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으로 설명되고, 국내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대북 유화(宥和)정책은 구조균형이론(theory of structural balance)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

2) 김재한, “남남갈등과 대북 강온정책,” 『국제정치연구』, 제9집 2호 (2006) ; 김재한,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통일과 평화』, 2호 (2009).

3) 김재한, “남남갈등과 대북 강온정책,” ; D. Cartwright and Frond Harary, “A Note on Freud’s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40 (1960), pp. 287~290 ; Frond Harary,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 195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 (1961), pp. 167~178 ; Jack Levy,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M.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 Christopher Carney, “Structural Balance, Regime Type, and Interstate Affect: The Third World and the

대의 강경정책은 정부여당이 국내정치적 목적 때문에 외부의 적이라는 속죄양을 만들거나 또는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국내 관심을 대외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든 결과라는 것이다. 또 특정국에 대한 정부여당의 유화정책은 야당이 그 특정국에 대해 적대적이니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구조균형적 관점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구조균형성은 양극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경쟁 계층이 반복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친북 성향을 갖는다든지, 혹은 경쟁 계층이 친미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반미 성향을 갖는다든지 하게 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김재한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이 남한 내 보혁 계층을 각각 대표한다고 전제하고, 두 신문 사설이 북한, 정부 대북정책, 미국, 정부 대미정책 등을 지지 혹은 비판하는 성향을 집계하였다.⁴⁾

1990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사설분석 및 연도별 집계 결과, 노태우·김영삼 정권 및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북한 정권에 대한 계층 간 지지/비판 차이에 변화가 별로 없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계층 간 지지/비판의 차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증대되어 특히 대북 포용정책 당시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반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했다. 대북 포용정책은 남남갈등 표출의 계기가 되었지만, 대북 포용정책 때에 북한에 관한 입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자체에 관한 남남갈등이 대북 포용정책으로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에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 즉 대북 포용정책 등장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계층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대북 유화정책이 새로운 남남갈등을 만들었다기

United States,”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vol.17, no.1 (2000), pp. 133-154 ; Chae-Han Kim, “Explaining Interstate Trust/Distrust in Triadic Relati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33, no.4 (2007).

4) 김재한, “남남갈등과 대북 강온정책.”

보다 기존의 남남갈등 관계에 기초한 대북정책이 등장한 것이라는 것이다. 대북 강경/유화 정책은 순수한 남북한 관계라는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집단 간 경쟁의 연장선에서도 이해될 수 있으며, 대북정책 방향은 남한 국내정치의 주요한 피아(彼我)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한(2009)은 1990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내용을 연도별 대신 월별로 집계하였다.⁵⁾ 그러한 사설 분석을 통해 다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북한을 바라다보는 계층 간 차이는 매우 지속적이었다. 북한에 관한 부정적 시각이 늘었지만,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간의 호감도 차이는 20년 동안 거의 상수(常數)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이었다. 반면에 미국을 보는 계층의 인식은 수렴(收斂)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두 개 신문의 차이는 북한에 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지, 미국에 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은 남남갈등 양극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계층 간 양극화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었고,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계층 간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로 판단컨대 북한과 관련하여 진보계층이 우호적이면 보수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관련하여 보수계층이 우호적이면 진보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라는 흑백의 도식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정 시기 특정 대상에 대해 정치적 대립을 보였지만,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구조균형의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단정할 정도의 유의한 수준의 대립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재한의 연구는 북한에 관한 특정 계층 태도는 북한에 관한 다른 계층 태도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련성

⁵⁾ 김재한,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을 연도별 혹은 월별 집계치로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단위로 태도를 비교해야 한다. 동일 일자의 태도를 서로 비교해볼 수 있으나, 하나의 상황에 대해 계층이나 언론이 같은 날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반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나 대북정책에 관한 태도를 주(週) 단위로 집계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물론 이슈별로 반응을 집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슈 선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하기 쉽고 어떤 이슈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슈 단위 대신 주 단위 집계 방법을 이용한다. 일주일이라는 동일 기간에 경쟁적 관계의 양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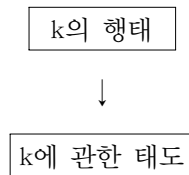
경쟁관계 당사자 태도 간의 연관성뿐 아니라 경쟁관계 대상에 관한 태도 간에도 연관성이 있다. 계층 i 의 태도와 계층 j 의 태도가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 에 관한 i 의 태도와 b 에 관한 i 의 태도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특히 a 와 b 뿐 아니라 c 까지 포함되는 다자관계에서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을 보는 관점은 미국을 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을 보는 관점은 중국을 보는 관점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 단위로의 세분화와 중국이라는 대상의 추가로 상호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물론 중국 외에 일본이나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도 중요할 수 있다.⁶⁾ 그렇지만 중국은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의 공식 당사자이고, 또 탈냉전 이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이다. 조사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여기서는 북한, 미국, 중국만을 다루고 나머지 국가를 포함한 연구는 다음 기회나 다른 연구자에게 미루기로 한다.

6) 김재한, “동북아시아 우적관계의 구조,” 『국방연구』, 52권 3호 (2009).

II.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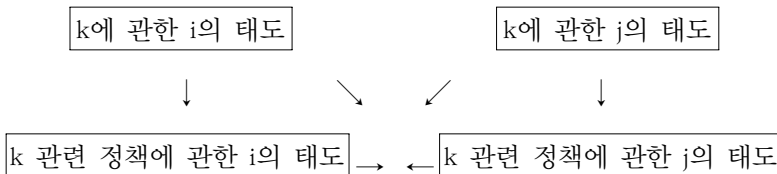
남남갈등의 주제나 대상을 논할 때에는 북한과 대북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k에 관한 태도와 k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태도는 밀접히 관련 있지만 그 형성과정은 조금 다르다.

〈그림 1〉 k에 관한 태도의 형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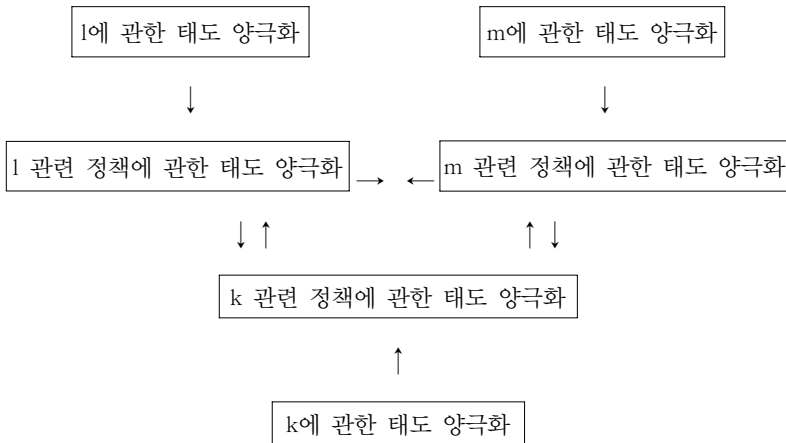
〈그림 1〉에서 k에 관한 태도는 k의 행태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 k의 행태에 따라 k에 관한 태도도 바뀌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인 태도와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인 태도가 있는 듯하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북한의 행태에 따라 악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호의적 입장도 북한 행태에 따라 심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그림 2〉 k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의 형성관계



이에 비해 k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태도는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반미(反美)면 어퍼냐”는 식의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 대미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대적 대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한미 FTA를 체결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 <그림 2>에서 i와 j가 경쟁관계일 때 k 관련 정책에 관한 i의 태도는 k에 관한 i의 태도 그리고 k에 관한 j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k 관련 정책에 관한 j의 태도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대북정책에 관한 진보계층의 태도는 북한에 관한 진보계층 및 보수계층의 태도뿐 아니라 대북정책에 관한 보수계층의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뿐 아니라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겨레신문의 대북정책 태도는 북한에 관한 태도뿐 아니라 조선일보의 대북정책 태도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그림 3> k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의 형성관계



〈그림 3〉에서 k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는 k에 관한 태도, l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m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등과 관련이 있다. k에 대한 정책을 둘러싼 태도 양극화는 k와 동맹관계나 경쟁관계에 있는 l 혹은 m에 대한 정책을 둘러싼 태도 양극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전쟁 때부터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관계 및 미국과의 경쟁관계를 감안하면, 대북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대미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 대중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의 태도 형성관계를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사설로 검증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사설의 코딩방식은 선행연구를 따른다.⁷⁾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보수계층과 진보계층을 대변한다고 전제하고, 199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신문 사설에서 북한, 미국, 중국, 정부 대북정책, 정부 대미정책, 정부 대중정책 각각에 대해 지지하는 사설은 건당 +1, 비판하는 사설은 건당 -1로 하여 한 주(월~토)가 한 사례(case)가 되도록 집계하였다.

Ⅲ. 북한, 미국, 중국에 관한 태도 차이의 지속성

북한, 미국, 중국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는 매우 일관되어 있고 그 차이는 지속적이다. 〈표 1〉에서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의 평균 태도는 -.30인데, 북한에 대한 호의적 사설 건수만큼 뺀 비판적 사설 건수가 한 주에 평균 0.3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평균 태도 값은 -.02로 조선일보의 비판 수위보다 낮았다. 북

7) 여기서 사용된 사설의 분류 예는 다음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김재한,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정책,” 『통일전략』, 7권 2호 (2007). 동일한 기준으로 2006년 9월 이후와 중국 관련 사설을 포함하였다.

한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는 -.28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선일보의 대북 태도가 한겨레신문보다 더 비판적이었다.

이처럼 북한에 관한 두 신문의 태도는 서로 다르지만, <표 1>에서 보듯이 북한에 관한 두 신문 태도 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다. 즉 한 신문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면 비판적일수록 다른 신문도 비판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림 1>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에 관한 태도 변화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행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우호적이냐 아니면 적대적이냐에 따라 두 개 신문의 대북 논조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해 조선일보의 상대적 비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상대적 호의라는 등식은 매우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음(-)의 한겨레신문 대북 태도 평균값이 보여주듯이 그러한 한겨레신문의 대북 호의도 조선일보와 비교한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호의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표 1>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 차이

		평균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 평균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의 95% 신뢰도 구간	두 신문 태도 간의 상관계수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 태도	-.30	-.28*(t=-11.749)	-.32~-.23	.125*
	한겨레신문 태도	-.02			
미국에 대한	조선일보 태도	-.05	.10*(t=6.014)	.07~.13	.003
	한겨레신문 태도	-.15			
중국에 대한	조선일보 태도	-.06	-.05*(t=-4.264)	-.07~.03	.129*
	한겨레신문 태도	-.01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조선일보 태도-한겨레신문 태도

* p<.001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 대해 조선일보가 더 비판적이

고 한겨레신문은 덜 비판적이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이다. 또 대중 태도의 변화도 두 개 신문이 서로 함께 변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 신문이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면 함께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먼저, 한겨레신문이 미국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조선일보가 덜 비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 및 중국에 관한 태도와 반대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친미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 서울올림픽 때의 반미 분위기 때처럼 적어도 미국의 눈에서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친미적이라고 보지 않고, 또 <표 1>에서 미국에 관한 조선일보 태도의 평균값은 -.05로 음(-)의 값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관한 두 신문의 태도 변화는 서로 관계가 없다($r=.003$). 즉 상대 신문이 미국을 비판한다고 하여 함께 비판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지지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 관한 논조가 미국의 특정 시기 특정 행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관한 두 개 신문의 태도 변화는 서로 관계가 없고 단지 태도 차이만을 보이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는 미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 그리고 중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세 변수 간의 상관계수 절대값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0.05 이하에 불과하다. 세 국가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미국, 중국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그렇게 연계시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IV. 남남갈등 양극화의 정권별 비교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 차이를 정권별로 보여주는 것이 <표 2>이다. 정권교체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2월 초부터 대통령 취임이 있었던 익년 2월 말까지는 제외하고 행정부별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북한, 미국, 중국 등에 관한 태도 차이는 이명박 정부 때에 그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대체적으로 지속적이다.

<표 2> 정권별 남남갈등 양극화 수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북한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	-.27	-.22	-.32	-.20	-.44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	.05	.02	-.50	-.47	.42
미국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	.18	.15	.09	.09	-.05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	-.03	.02	-.08	-.11	.11
중국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	-.06	-.02	-.02	-.06	-.15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	.02	.02	-.01	-.17	.05

조선-한겨레 태도 차이(조선일보 태도 점수-한겨레신문 태도 점수)의 행정부별 평균값임.

* $p < .05$, ** $p < .01$

<표 2>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두 신문 간의 태도 차이는 김대중 정부 때에 가장 크다.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에 관해 조선일보가 비판적

이고 한겨레신문은 호의적인 경향이 매우 강했다. 그러한 경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유사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반대로 조선일보가 호의적이고 한겨레신문은 비판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두 신문의 태도 차이는 그 이전 행정부에 비해 크게 증대된 것이다. 이른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라는 현상은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노무현 정부 때를 제외하곤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정부 대중정책에 관해 조선일보가 더 비판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덜 비판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대미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한겨레신문이 지지하는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지지하고 한겨레신문이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V. 대북정책 태도의 대내적 연계성

〈그림 2〉는 대북정책에 관한 특정 계층의 태도는 경쟁 계층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였다. 〈표 3〉은 이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태도가 비판적일수록, 또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그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비판적이었다. 북한에 관한 태도는 북한의 행태에 좌우되기 때문에 북한 행태의 영향을 받는 대북정책에 관한 태도도 북한에 관한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다. 또 한겨레신문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변화할수록 조선일보는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호의적으

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경쟁 계층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구조균형적이고 정치적인 관계이다.

〈표 3〉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 태도의 설명변수

설명변수	회귀계수	t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897**	2.867
북한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694*	1.762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946**	-2.735

종속변수: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 $p < .1$, ** $p < .01$

〈표 4〉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 태도의 설명변수

설명변수	회귀계수	t
북한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2990**	8.797
북한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702*	2.400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717**	-2.674

종속변수: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 $p < .02$, ** $p < .01$

〈표 4〉는 한겨레신문의 정부 대북정책 태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나열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 한겨레신문 및 조선일보가 비판적일수록, 또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조선일보가 호의적일수록 한겨레신문의 정부 대북정책 비판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는 북한의 행태가 그대로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며, 동시에 경쟁 계층인 조선일보의 정부 대북정책 태도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5〉 정부 대미정책 및 대중정책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태도의 설명변수

모델	설명변수	회귀계수	t
종속변수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설명변수	미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209**	4.884
	미국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56*	2.033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34	1.102
종속변수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설명변수	미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339	.906
	미국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88**	3.198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34	1.102
종속변수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설명변수	중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150**	6.376
	중국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39	1.285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31	-.665
종속변수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설명변수	중국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67**	4.306
	중국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태도	-.029	-1.473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태도	-.013	-.665

* p<.05, ** p<.01

이에 비해 정부의 대미정책 및 대중정책에 대해 경쟁 계층 태도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표 5〉에서 정부 대미정책이나 대중정책에 관한 조선일보의 찬반은 한겨레신문의 태도와 관계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정부 대미정책 및 대중정책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찬반도 조선일보 태도와 관련이 없었다. 다만 중국에 관한 태도와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태도는 함께 호의적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함께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또 미국에 관한 태도와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태도도 우호/비판이 함께 하는 경향을 〈표 5〉에서 발견할 수 있다.

VI. 남남갈등 양극화의 대외적 연계성

조선일보의 대북정책 태도와 한겨레신문의 대북정책 태도는 서로 관련 있음을 보았다. <표 6>은 두 신문 간 태도 차이의 절대값을 종속변수로 두고 그것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드러낸 것이다. 동일한 정부 대북정책을 두고 전개되는 두 신문 간의 온도 차이는 동일한 북한 행태에 대한 두 신문 간 태도 차이가 클수록, 또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 간의 태도 차이가 클수록 크다. 즉, 대북정책에 관한 경쟁계층 간의 논쟁은 대미정책에 관한 논쟁과 함께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관한 국내 논쟁은 북한 자체에 관한 국내 논쟁과도 함께하는 것이다.

<표 6> 정부 정책에 관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간 태도 차이의 설명변수

설명변수	회귀계수	t
종속변수: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북한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86**	5.664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46**	3.491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093	1.200
종속변수: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미국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70**	5.302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071**	3.273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36*	2.443
종속변수: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중국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간 태도 차이	.182**	7.805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태도 차이	.012	1.062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조선 및 한겨레 태도 차이	.036*	2.230

조선 및 한겨레 태도 차이 = 조선일보 태도 점수 - 한겨레신문 태도 점수

* p<.03, ** p<.01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두 신문 간 지지/비판의 차이도 중국에 관한 두 신문 간 지지/비판 차이 그리고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 간 지지/비판 차이가 클수록 크다. 대중정책에 관한 국내 논쟁은 중국 자체에 관한 국내 논쟁과 대미정책에 관한 국내 논쟁과 함께 하는 경향인 것이다.

〈표 6〉에서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찬반 논쟁은 미국행태 논쟁뿐 아니라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에 관한 논쟁과도 함께 한다. 두 신문 간의 입장 차이가 대북정책, 대미정책, 대중정책에서 함께 드러난 최근의 예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이다. 한겨레신문이 천안함 외교가 ‘대미 편식’이라고 비판한 반면에,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았다. 이때 한겨레신문이 대북강경정책과 대중외교 소홀을 비판한 반면에,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았다.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날 때이면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도 함께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북한 관련 주요 사건들은 거의 늘 다른 주변국들과도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대미정책 논쟁이 대북정책 논쟁과 대중정책 논쟁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국내 논쟁에서 북한과 중국이 한 블록으로, 미국을 다른 블록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대미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와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은 대북정책이 대미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찬반에 따라 대북정책 찬반이 일부 결정된다는 측면도 의미한다. 실제 특정 정책 때문에 정권 지지도가 바뀌기도 하지만, 정권 지지도에 따라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좌우되는 폭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강조하였듯이 북한, 미국, 중국에 관한 태도는 각각 정부의 대북정책, 대미정책, 대중정책에 관한 태도와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두 신문 간 태도 차이가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태도 차이와 관련되어 있지만, 북한에 관한 두 신문 간 태도 차이가 미국에 관한 두 신문 간 태도 차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관한 태도 차이, 미

국에 관한 태도 차이, 중국에 관한 태도 차이, 이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 절대값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0.05 이하에 불과하다.

VII.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1990~2010년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이용하여 남남갈등의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미국, 중국, 대북정책, 대미정책, 대중정책 등에 관한 비판적 혹은 호의적 사설의 집계치가 본 분석의 원자료이다. 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시켰고 또 집계를 연도별과 월별을 넘어 주별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원자료와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미국, 중국에 대한 두 신문의 입장 차이는 지속적이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조선일보는 더 비판적이었고 한겨레신문은 덜 비판적이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이 더 비판적이었고 조선일보는 덜 비판적이었다.

둘째,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는 정권별로 변화가 있었다. 대북정책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비판과 지지라는 양극화를 보여주었다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조금 완화되었지만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는 매우 심화된 수준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지지와 비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대중정책에 관한 태도 양극화는 노무현 정부 때에 가장 심했으며, 조선일보는 더 비판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덜 비판적인 태도이었다. 대미정책에 관한 비판과 지지의 양극화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심화되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대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의 비판/지지 입장은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서로 뒤바뀌게 된다.

셋째,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은 경쟁계층의 입장과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조선일보가 비판적일수록 한겨레신문은 호의적이고, 한겨레신문이 비판적일수록 조선일보는 호의적인 경향을 발견했다. 대북정책과 달리, 정부 대중정책 및 대미정책에서는 두 신문의 태도가 서로 대립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대내적 집단 태도 간의 연계성으로 설명된다.

넷째, 정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정부 대미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두 신문 태도의 양극화가 클수록, 정부 대미정책에 관한 두 신문 태도의 양극화도 크다. 이러한 연계성은 정부 대미정책과 대중정책 간에도 발견된다. 대미정책 관련 국내논쟁은 대중정책 관련 국내논쟁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미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북한과 중국 등 다른 대외 관련 정책에 관한 태도와의 연계성으로 설명된다.

■ 접수: 2010년 11월 6일 / 수정: 2010년 11월 19일 / 게재확장: 2010년 11월 29일

【참고문헌】

- 김재한. “남남갈등과 대북 강온정책.” 『국제정치연구』, 제9집 2호 (2006).
- .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정책.” 『통일전략』, 7권 2호 (2007).
- .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통일과 평화』, 2호 (2009).
- . “동북아지역 우적관계의 구조.” 『국방연구』, 52권 3호 (2009).
- 민병기 · 박재정. “대북식량지원 운동의 정치기회구조와 남남갈등.”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2009).
- Carney, Christopher, “Structural Balance, Regime Type, and Interstate Affect: The Third World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vol.17, no.1 (2000).
- Cartwright, D. and Frond Harary, “A Note on Freud’s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40 (1960).
- Harary, Frond.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 195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 (1961).
- Kim, Chae-Han, “Explaining Interstate Trust/Distrust in Triadic Relati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33, no.4 (2007).
- Levy, Jack.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M.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Abstract

The Linkage of the South-South Conflict

Kim, Chae-han(Hallym University)

The structure of the South-South conflict, represented by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respectively,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wo newspapers on th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constant. The Hankyoreh is more likely to criticize the United States than is the Chosun Ilbo. On the other hand, the Hankyoreh is less likely to criticize North Korea and China than is the Chosun Ilbo.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ewspapers, in stance on the government policies, vary with government. Stands on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were most polarized during the Kim Dae-Jung government in that the Chosun Ilbo was very critical while the Hankyoreh was very supportive. Similarly, there were strong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the Roh Moo-Hyun government's policies toward China. The two newspapers have been deeply divided pro and con on the Roh Moo-Hyun government's and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ies toward the United States.

Third, the two newspapers tend to go to the opposing side each other in stances on the governm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more critical one newspaper is of the government policy on North Korea, the more supportive the other newspaper is. This may be called the internal linkage

of the South-South Conflict.

Four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newspapers in stance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moves side by side with the difference in stance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more polarized the stances over one nation are, the more polarized are the stances over the other nation. This may be called the external linkage of the South-South Conflict. This external linkage is found between the stance over the government policies toward United States and the stance over China.

Keywords: South-South conflict, polarization, structural balance, linkage, Chosun Ilbo, Hankyoreh, Sunshine policy

김재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여 미국 로체스터대(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게임이론과 남북한관계』, 『합리와 비합리의 한국정치사회』, 『동북아공동체』, 『DMZ평화답사』, 『동서양의 신뢰』 등이 있으며,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등의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평】

‘한반도 통일’, 축복인가 재앙인가?

허구와 실제 사이에서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 (서울: 한울, 2010).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서울: 민음사, 2009).

우베 뮐러 저, 이봉기 역,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2006).

강동완(통일연구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흡수통일 이후 5년, 2016년 서울, 이곳은 지옥이다”

I. 서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목 놓아 부르던 때가 있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고, 굳이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통일은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가치였다. 통일된 민족과 조국이 결코 꿈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곧 이루어질 현재이며 미래였다.

하지만 분단상황이 지속될수록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점

차 상실되었고 통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오히려 통일이 되면 우리네 삶이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더욱이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등 소위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민족이라는 통합논리는 설득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를 외쳤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한반도 분단의 비극은 정치·군사적 대립과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평화만이 지속될 뿐이었다.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환한 웃음으로 부둥켜안고 두 손을 꼭 맞잡았지만, 분단 60년 동안 지속된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 대결과 갈등을 교차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과 함께 통일세 논의를 제안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 하여 남북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단계 남북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실현을 위한 논의의 폭을 확장하였다.

통일의 주체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래를 준비하자는 통일세 제안은 다소 현실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각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최소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남한이 경제적 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정도의 논의는 일면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일세, 통일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재앙이 될 것인가.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문화적 인식 차이와 더불어 수십 배의 경제적 격차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반도와 달리 동·서독은 분단 40년의 아픈 역사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한 지 이제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남북한과 같이 분단이라는 동일한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독일로 살아온 지 20년. 독일에게 통일은 과연 축복이 되었을까, 아니면 재앙이 되었을까. 한쪽은 아직 통일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고, 한쪽은 선구자처럼 통일의 길을 20년 동안 내달렸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독일의 사례에서, 그리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가상현실에서 통일한국의 모습과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허구를 바탕으로 한 ‘가상의 미래’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실제 현실’이라는 상이한 두 개의 차원을 비교하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가상의 미래는 이응준의 소설 『국가의 사생활』을 통해, 실제 현실세계의 모습은 김동명의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통일 준비를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베 뮐러의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주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은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는데, 2011년 5월 9일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는 가정에서 소설은 시작된다. 통일 후 5년이 지난 시점. 통일한국의 모습은 결코 행복한 장밋빛 미래가 아닌 극도의 혼란에 빠진 모습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재앙으

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동명의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 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는 독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시작한다. 45년 만에 이룬 독일 통일, 그 후로 20년이 지나 이제 사람으로 치면 스무 살에 해당하는 독일이 얼마만큼 자랐고 그동안 어떤 성장통과 사춘기를 겪으며 오늘까지 성장해 왔는가를 그려보고 있다. 즉, 독일이 통일된 후 지난 20년간 상이한 정치·경제·국방·사회체제를 어떻게 통합했고, 무엇보다 동·서독 주민들이 어떻게 통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우베 뮐러의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부문의 현황과 전망을 담고 있다. 독일 통일 그 자체가 대재앙이 아니라 통일 이후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을 대재앙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II. 가상 현실에서 본 통일한국의 모습: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이응준이 그리고 있는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 통일은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최소한 통일된 지 5년 후의 서울의 모습은 지옥으로 표현될 만큼 혼란스러운 재앙으로 그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남한주민들에게는 북한 재건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세상에 직면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다.

통일된 2016년의 서울은 양심을 잃은 부패 경찰의 횡포, 관리되지 않은 무기의 총기사고, 이북 출신 폭력 조직의 난립, 유흥업소 종사자로 전락한 북한출신 여성들, 주민등록조차 되지 않은 대포 인간을 악용한 각종 범죄, 신종 마약의 유통, 급식소에 줄을 선 통일 빈민의 증가 등으로

너무도 혼란스러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통일 대한민국에서 총기는 도난차량보다도 구하기가 쉬웠다.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았던 평화통일의 대혼란 속에서 공화국 군대의 무기 회수와 그 관리가 허술했던 탓이다. 그리고 그것은 2011년 5월 9일 오후 4시경 한반도에서 난데없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며 튀어나온 수천의 마귀들 중 고작 한 마리에 불과했다고 표현한다.¹⁾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 나온 수천의 마귀들로 표현되는 통일한국의 혼란스러운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국의 행정정보체계가 아무리 디지털화·정보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북한주민들 앞에서는 쓸모없는 기계에 불과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개인의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인간을 양산하게 되었다.

통일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전부를 주민등록화하는 데에 실패했다. 북한은 통일 당시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난민들 투성이었고, 관공서 방화가 비일비재해 아날로그가 정보 시스템의 대부분이던 처지에 공문서들이 대량으로 소실되었다. 근대적 기록이 부재한 국민들, 이른바 대포 인간들이 그들이었다. 주민번호도 없고 사진도 없고 지문도 없다.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대포인간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허깨비들이었다.²⁾

또한 북한주민들의 통일 이전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직업경험, 자격증은 모두 남한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졌고, 무엇보다 2등국민으로 전락한 북한주민들의 자존감 상실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1)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p. 23.

2) 위의 책, p. 104.

과거 북한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들의 경력은 통일 조국에서 휴지 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가령, 북한의 교사들은 거의 전부 교단에서 퇴출당했다. 오히려 이북 학생들이 훨씬 강력하게 북한 출신 교사들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³⁾ 북한 주민들의 자격증이나 경력 인정 문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미 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일한국의 암울한 미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문제로서 북한 주민들이 갖는 인식체계의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체계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에서 외부정보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 당국의 선전과 선동에 의해 개조된 사회주의 인간형, 더 나아가 김일성·김정일을 교주로 하는 수령교 인간형으로 의식체계가 개조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지배했다.

이미지들과 상징체계들에 지배당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이 사기라고 판명이 난다 한들 이전과 동일한 신호가 오면 어쨌든 반응한다. 조건반사는 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반사는 인간의 영혼으로 들어오면 스스로 확장하고 심오해진다. 아직도 김 주석의 초상화라든가 김일성화 같은 것들 앞에 노출되면 머뭇머뭇하기 일쑤였다. 세뇌된 순종을 쉽사리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인공은 통일 이후에도 7월 8일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우울했다. 모태 신앙은 잘 지워지지 않았다.⁵⁾ 북한 주민들에게 체득된 주체사상과 인간형의 개조는 남북한 통합 시기에든 여전히 한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3) 위의 책, p. 27.

4) 1994년 7월 8일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날을 의미함.

5) 이웅준, 『국가의 사생활』, p. 121.

북한은 수령교라는 종교국가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당과 인민의 종교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 이용준은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에 의한 수령교를 ‘모테신앙’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종교적 신념체제로 굳어져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부적응과 정체성의 문제로 남한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한 인격이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로 인해 시장경제의 냉혹한 현실에 내몰렸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같은 거대 조직이 조장하는 권위주의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표현 방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다. 삶에서 자아가 소외되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란 곧 공포⁷⁾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의 삶을 사는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오히려 또 다른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중적 행위를 보이며 이러한 충돌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사회주의형 인간은 전체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거나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더 나아가 인정과 애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데, 불안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유사 집단을 형성해 타인을 까닭 없이 공격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긴 하지만 이북 사람들은 실업의 탓을 엉뚱한 데로 돌렸다.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자들이었던 이북 사람들이 버젓이 극우파가 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

6) 북한의 수령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김병욱, “북한주민들의 수령교 의식변화에 따른 북한선교 방안,” 『복음과 선교』, 제11집 (2010) 참조.

7) 이용준, 『국가의 사생활』, p. 98.

하고 해치는 웃지 못 할 사건들이 벌어졌다.⁸⁾

마지막으로 과거사 청산 문제로서 통일 이전 북한 당국의 정치적 활동을 도우며 생활했던 간부들이나 정치적 인사들에 대한 주민들의 보복에 따른 사건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즉, 통일 이후 복수를 하기 위해 북조선의 비밀 경찰이나 수용소 관리인들을 추적하는 부류가 더러 있었다. 또 자기만 버려놓고 탈북한 가족을 찾아내서 죽여 버리겠다고 버르는 사람들도 있었다.⁹⁾

Ⅲ. 실제 현실에서의 통일에 대한 평가: 독일통일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응준이 가상현실의 허구를 통해 그려내고 있는 한반도 통일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질화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동·서독의 경우 정말 통일의 미래가 이처럼 암울한 재앙으로 다가왔을까를 생각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명은 독일 통일을 21세기 독일 역사 중 가장 축복 받을 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또한 통일된 독일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고, 유럽통합을 주도하며 세계의 여론을 이끌어나가는 품격 있는 국가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통일 초기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다소 발생하지만 이는 상이한 양 체제가 통합될 때 파생되는 문제점과 후유증이지,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동독지역은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간과

8) 위의 책, p. 99.

9) 위의 책, p. 226.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¹⁰⁾

많은 도시의 주택들이 개선되었고, 통일 전 주택난은 모두 해소되었다. 구시대의 잔재인 환경오염이 제거되었고 생태계가 고려된 경제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동독 지역의 우라늄 광산과 갈탄 탄광에 대한 환경정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교육은 서독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누구에게나 적성·능력·성과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진다. 동독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보유율은 거의 서독과 같은 수준이 되었고 주민들의 문화생활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¹¹⁾

그런데 김동명 역시 독일 통일과정 초기에는 각기 상이한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1990년 6월 서독 주민의 85%는 굳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서독 체제 자체에 만족하고 있었고, 이 중 1/2은 통일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서독의 기존 정치 질서가 변화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독 주민들의 경우 통일 초기에 58% 정도가 통일을 기쁜 일로 여겼고, 1990년대 중반에는 41%로 하락했다. 서독 주민들은 동독재건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직접 체험했다.¹²⁾ 특히, 통일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동독 주민의 2/3는 통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식했다. 동독 주민들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실업’, ‘기회균등 상실’, ‘2등 국민’, ‘국가재정악화 및 세금 인상’ 등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연상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동독 주민들은 이미 ‘불안, 분노, 절망, 시기’ 등을 체험했

10)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 p. 433.

11) 위의 책, p. 434.

12) 위의 책, p. 438.

고, 동독 주민들의 78%가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2등 시민으로 살아갈 운명임을 직감했다고 조사되었다.¹³⁾

또한 지난 20년간 사회문화적 통합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양독 주민 간에는 이질감과 불균형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서독 간 사회통합 차원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정의(materielle Gerechtigkeit)와 관련된 문제이다. 동독 주민들은 과거 그들의 경력과 자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고, 임금과 연금에서도 서독 주민들과 불균형을 이룬다고 느끼고 있다. 지도상에서의 국경은 사라졌으나, 독일 국민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두 개의 국가가 장벽(Mauer in den Kopfen)으로 분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독 주민 중 일부는 전체주의적 강요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서독의 경제력과 정치적 수단에 의해 점령당하거나 식민지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실정이다.¹⁴⁾

하지만 이처럼 통일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서독 주민들의 90% 이상이 장벽 개방과 통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이 통일로 인한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먼저 자유를 향유하는 가운데 개인적·직업적·가정적 측면에서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산가족의 분단을 종식시켰다는 점 등이다. 동·서독 주민들 2/3는 지난 20년간 통일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¹⁵⁾

한편, 우베 뮐러 역시 독일 통일을 축복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베 뮐러는 독일 통일 그 자체를 대재앙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마치 책 제목만 봐서는 표면적으로 독일 통일이 재앙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13) 위의 책, p. 439.

14) 위의 책, p. 446.

15) 위의 책, p. 440.

주장은 통일 이후 통합문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을 대재앙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독일인의 다수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통일에 대해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통일은 사회적·문화적 그리고 인간적 관점에서 동서독 모두에게 축복인 것은 확실하다. 단,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¹⁶⁾

IV. 독일통일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 통일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베 뮐러는 독일 통일 그 자체는 대재앙이 아니지만, 경제적 문제에서만큼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통합정책, 특히 지금의 동독재건정책이 지속될 경우 독일통일이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우베 뮐러는 구동독지역 재건과정에서의 실패는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지만, 인구변동처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다고 한다. 내란이 일어난 발칸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 15년 동안 주민 감소가, 비교 가능한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구동독지역에서처럼 현저하게 나타난 곳은 없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젊고 이동 가능하며 진취적인 동독 주민이라는 것이다.¹⁷⁾ 많은 자금을 퍼붓기만 하는 정책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들었고, 결국 실패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책의 실패는 지금도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전체 독일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¹⁸⁾

16) 우베 뮐러,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p. 14.

17) 위의 책, p. 19.

18) 위의 책, p. 268.

잃어버린 시간은 15년이면 충분하다. 이 시간은 구동독지역 재건을 구서독지역의 증축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약 지금의 방식으로 앞으로 15년이 지나간다면, 전체 독일은 파산할 것이다. 계속하여 구동독지역을 구서독지역의 부속물로 생각한다면, 구동독지역은 80년대의 동독과 비슷한 참담한 좌절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구동독지역의 비참한 상황은 점차 구서독지역을 덮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구동독지역 재건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¹⁹⁾

우베 뮐러는 동독지역의 새로운 재건사업이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지금과 같은 연대협약은 실패한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수십억 유로를 개발지역에 쏟아 붓는 식이 아닌 좀 더 현명한 방식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동독지역에 필요한 것은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경쟁력 우위의 확보라는 주장이다.

우베 뮐러의 이 같은 주장은 향후 남북한 통일 시 북한 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이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원인 중의 하나는 더 나은 일자리와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경이 개방되고 이동이 제한이 없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동에 대한 문화적 장애는 단순한 수준에서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남한으로의 대규모 이동의 문제를 의미한다. 보다 장기적인 면에서, 지난 10년간 남한으로의 입국한 2만 명의 북한이탈주민조차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문화적

19) 위의 책, p. 283.

차이는 공통의 역사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단념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북한 주민들의 불만(남한에서의 차별에 의한)과 남한 주민들의 불만(새로운 북한 주민들과의 경쟁에 의한)의 폭발적인 혼합을 이끌 것이다.²⁰⁾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과 이에 따른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 지역 재건과 이를 통한 정착유인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이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대이주 결과로 나타난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채산성의 문제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이 축소되어 도시는 점차 단절되며, 노동력의 상실은 결국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다.

이는 곧 한반도 통일 시 북한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동독의 사례와 같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인위적인 건설붐이 아니라 지원된 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와 행정체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지역 주민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개발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V. 한반도 통일의 방식: 독일과 같이 흡수통일 할 것인가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의 갑작스러운 상

²⁰⁾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과 한국에서의 통일 재원마련: 통일세는 필요한가?,”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법무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한스 자이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0년 10월 4일), p. 52.

황변화에 대비하는 정책대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 나아가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시 이를 한반도 통일의 기회요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김동명은 한반도 통일이 조만간 독일의 패틴대로 흡수통일로 귀결될 것이라는 가정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동독과 북한을 비교해 볼 때 거의 오류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는 첫째, 북한과 동독 사회의 정치문화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동독의 와해는 동독 주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평화혁명에 기인했다고 보지만 북한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과 같은 민주화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북한에는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 줄 동독의 반체제 단체나 교회와 같은 종교 세력이 없고, 또한 동구권 내 인권문제나 자유화를 촉진시켰던 CSCE와 같은 국제단체로부터의 압력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둘째, 과거 동독 지도부는 서방의 지도자와 비교할 때 이념만 달랐지 사고나 행동 수준이 국제 수준에서 통용되는 일반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북한 지도주의 사고의식이나 행동패턴은 동독의 지도부와 비교할 때 훨씬 비이성적이라는 것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획일화된 북한 사회의 핵심 기관들인 노동당, 북한 정부 및 최고인민회의가 모두 와해되어 남한에 백기 투항하며 무조건 남한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본다.

셋째, 동독 인민군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대로 성장, 관리되어왔기 때문에 국내 치안을 위해 투입된 적은 거의 없었고, 통일 직전 변혁기와 같은 위기 상황을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반해 북한 인민군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만약 북한에서 1989년 가을 동독에서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경우 이는 같은 해 중국의 천안문사태(6·4)에서처럼 북한 인민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넷째, 김정일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그 후속 체제로 여전히 공산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평가한다. 즉, 북한 내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설사 그 정권이 붕괴된다할지라도 국가로서의 북한은 여전히 존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 사태에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분단 직후부터 서독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동독의 ‘체제교체 (Systemwechsel)’를 염두에 두고 대 동독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체제교체라는 동독의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체제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오로지 꾸준한 접촉과 교류협력을 통해 분단으로 야기되는 양 체제간의 이질성을 막는데 주력했고, 접촉을 통한 변화와 작은 걸음 정책으로 동독의 체제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 서독이 동독의 체제변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접촉과 교류협력을 추진한 기간은 길게는 40년 짧게는 20여 년에 달했던 반면 동독 내 체제교체와 체제붕괴까지 이어지는 데는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중단 없이 이어져온 동서독 간의 접촉과 교류협력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1989~199년 기간 중 발생한 정치적 대변혁에만 초점을 맞추어 동독이 무너진 것처럼 북한도 곧 무너져 한반도에 조만간 흡수통일이 도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¹⁾ 그러면서 독일의 흡수통일이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꾸준한 접촉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대북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 정치적 대변혁이 발생하여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21)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 pp. 493~495.

경우로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동독과 같은 경우로, 북한 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개혁·개방요구에 굴복하여 자발적으로 남한에 흡수당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인민군을 포함한 북한 권력집단의 이해와 동떨어진 것으로 당분간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일 것이다.

둘째, 남한 정부가 북한의 내부적 붕괴를 틈타 군사적 제압을 위해 북침을 하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북한 지도부가 내부적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돌파할 목적으로 남침 공격을 자행하고 남한이 이를 격퇴하여 한반도를 평정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한 모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전제를 볼 때 이제까지 흡수통일을 가정하여 세운 모든 대북정책의 기획물들은 실현성 여부에 의문을 갖고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²²⁾

결국 김동명의 주장은 독일의 흡수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기보다 꾸준한 접촉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의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격차를 줄여가며 점진적·단계적인 통일을 준비하자는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단계적 준비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점진적 통일논의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 정권의 탄압과 폭정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이다.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북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22) 위의 책, p. 496.

의 정치적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의 개발자금 투입을 위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같은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촉구를, 북한주민들에게는 외부 정보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대변혁의 시기에 북한정권의 부당성을 표출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강화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갑작스러운 한반도 정세변화를 통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준비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기웅은 독일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으로 인한 교훈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한반도에 도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을 먼저 이룩하는 것이 민족적 사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속한 통일의 선택에 따른 어려움은 후세를 위해 당연히 져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Ⅵ. 통일한국을 위한 우리의 준비: 통일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베 뮐러는 독일통일은 마치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서독 주민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한다. 서독은 동독이 붕괴되기 오래 전에 이미 통일을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독 정부는 통일이 야기되는 다양한 측면을 연구할 수 있는 기

23) 손기웅, 『독일 통일 쟁점과 과제』 (서울: 늘품플러스, 2009), p. 299.

회가 있었다. 따라서 통일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때, 어떤 장기적 손실과 위험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했다²⁴⁾고 말한다. 독일 통일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서독은 동독이 붕괴되기 오래 전에 이미 통일을 연습할 수 있었고, 단계적 통일에 따른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한 준비 속에서도 어느 순간 찾아온 통일을 맞이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통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만들어가는 우리에게도 독일의 경험을 교훈삼아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독일통일 20년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은 제도적 통합뿐만 아니라 내적 통합이 완성될 때 비로소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다는 사실이다. 하베 뮐러는 현재 독일 정부 입장에서 내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동독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동독 주민들에게 확실한 일자리를 보장하며 실업률 격차를 줄이고 그들의 내면세계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서독 간 임금이나 연금 등에서 실질적 차이 등이 해결될 때 동독 주민들의 2등 국민이라는 감정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²⁵⁾ 여전히 진행형인 독일의 내적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일자리 창출과 동서독 주민 간의 임금격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안 중 하나는 취업문제로 귀결된다.

‘먼저 온 미래’²⁶⁾로 불리어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정착과정에서

24) 우베 뮐러, 『대재앙 통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p. 89.

25)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스무살 독일 얼마만큼 컸나?』, p. 448.

26) 마크 지맥 외,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먼저 온 미래』 (서울: 늘봄플러스, 2009).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역시 취업 문제임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한 통합 시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통합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는 그들의 경제적 자립정착이라는 의미 외에도 남한 사회에서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분단이라는 공간적·시간적 경계의 형성은 북한이탈주민의 과거 인적자원 형성의 몰인지 내지 무의미를 양산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경제적 해석과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분단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²⁷⁾

한편, 동서독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동서독 주민간 교류를 통해 외부정보 유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때 지속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명은 폐쇄 사회인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뼈라를 포함하여 DVD, USB, 라디오 방송 및 휴대전화 등 정보매체가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당장의 체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지라도 북한의 체제 변화를 초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남한 영화나 드라마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의 정보통제에서 벗어나 외부세계의 문화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통제와 이완 사이에서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잦아지고 북한 내부의 시장이 확산됨으로 인해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27) 박정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활성화 방안과 제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정책 및 발전방안 모색』,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센터·국회인권포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공동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2010년 10월 21일), p. 91.

28) 위의 책, p. 622.

남한 영상매체의 접촉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며, 이는 곧 개인의 의식변화는 물론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⁹⁾

따라서 북한 주민들과 정권을 구분하여,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의식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혁·개방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VII. 결론

한반도 통일과 통합을 주제로 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속보가 급박하게 전해진다. 한반도 통일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에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너무나 암울한 현실인가. 군사적 긴장과 충돌, 확산에 대한 우려, 핵무기의 위협 등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기에 더더욱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독일 통일이 20년을 맞으며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통일된 독일은 최소한 군사적 충돌에 의한 비극적 현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정 남북한 통일을 진지하게 이야기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다시 한번 남북한 주민들 모두의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으로 메아리 쳐지기를

29)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은?』, 현대북한연구회 창립1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0년 8월 24일) 참조.

소망해본다.

이응준은 이렇게 말한다. “환란은 때로 필요하다.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화해 치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포함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통일이 북한에 대한 남한 문화의 이식이 아님은 분명하며, 북한이 남한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응준의 말대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통일이라는 변화를 통해 남북한 모두가 치유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긴 원래 이랬어.”라는 소설 속 주인공의 말은 현재 남한의 모습 역시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정 남북한 모두의 변화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너나들이(서로 너, 나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일컫는 순우리말)로 살아갈 날을 간절히 기대한다. ‘다시 통일을 맞이한다면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³⁰⁾라는 독일통일의 교훈을 되새기며, ‘통일을 맞이하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두의 각오를 다잡을 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우러짐의 통일을 꿈꾸며...

30) 쿠르트 비덴코프 (Kurt Biedenkopf, 작센 주 전 주지사).

강동완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류, 북한을 흔들다』(공저, 근간),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공저),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남남갈등을 넘어 남북상생으로』 등이 있다.

원고 집필요령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평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필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필자명, 영문요약문, keywords, 필자 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4.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5. 논문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 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6.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7.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8.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년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8.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298~299.
9.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1>, <그림 1>)를 부여하고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10.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pp. 20~28.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p. 20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 3~36.
- 최종태 · 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3~36.
-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 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 · 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서울: 일신사, 1994), p. 15.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pp. 6~51.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 3~36.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247.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체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p. 10~15.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 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脱北 청소년들,” 『조선일보』 (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 url을 명시할 때 세미콜론으로 연결, 웹페이지 내에서의 인용위치를 명시하는 것 등은 불필요

11.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 (1) 바로 앞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향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온주,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p. 22.
 - Suh, *Kim Il Sung*, p. 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p. 270.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 577.

12. 참고문헌 작성

- (1) 일반적으로 국문, 영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3)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에서의 심표 대신 마침표가 사용되고 괄호가 제거된다.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2행부터는 들여짜기를 해야 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pp. 107~128.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통일과 평화』 윤리규약

I. 저자(투고자) 연구윤리와 책임

1. (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 평화』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2. (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3. (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한다.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7. (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편집위원의 윤리규약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III. 심사위원의 윤리규약

1.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안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IV. 윤리위원회와 제재

1.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2. (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

4. (연구윤리규정 위반내용 공개)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